



2009년 남북관계와 국민의식

일상 속의 통일:

세대, 지역, 젠더, 이념

• 일시_2009년 11월 5일 (목) 09:30~18:00

장소_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주최_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Program



09:00 ~	등 록
09:30 ~ 09:35	개 회 사 - 박명규 소장 (통일평화연구소)
09:35 ~ 09:50	축 사 - 김신복 부총장 (서울대)
09:50 ~ 10:15	기조발제 - 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 대사): An Undivided Country in an United Europe and in a Changing World
<hr/>	
10:15 ~ 12:00	제 1 세션 2009년 통일의식 분석 - 변화의 추이와 방향 사회 - 김영수 교수 (서강대) 발표 - 이상신 박사 (서울대): 국민 의식에 나타난 세계와 북한 정은미 박사 (서울대): V형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일상화 토론 - 류길재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황지환 교수 (명지대)
<hr/>	
12:00 ~ 13:30	중식
<hr/>	
13:30 ~ 15:15	제 2 세션 대북의식의 차별화 요인들 - 남남갈등의 구조적 분석 사회 - 최대석 교수 (이화여대) 발표 - 김병조 교수 (국방대학원):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김병로 교수 (서울대): 남남갈등의 지형분석: 지역과 이념 박정란 박사 (서울대): 남남갈등에서의 세대와 젠더 토론 - 강원택 교수 (송실대) 조한범 박사 (통일연구원) 권영경 교수 (통일교육원)
<hr/>	
15:15 ~ 15:30	휴식
<hr/>	
15:30 ~ 18:00	제 3 세션 젊은 세대와의 라운드 테이블- "청년세대에게 통일을 묻다" 사회 - 박명규 소장 (통일평화연구소) 패널 - 강 룡 (탈북청년학생네트워크) 강혜경 (평화의 친구들) 서하나 (북한아이끼안기) 송지홍 (청년정토회) 안순화 (다문화방송국 샐러드TV) 유병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유정훈 (북한연구21) 이승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정하연 (서울대 국제대학원)
<hr/>	
18:00~19:30	석식 : 회의 참석자 대상

목 차

제1 세션 | 2009년 통일의식 분석 - 변화의 추이와 방향

- 국민의식에 나타난 세계와 북한: 한국인의 유연한 현실주의 3
이 상 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V형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일상화 25
정 은 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2 세션 | 대북의식의 차별화 요인들 - 남남갈등의 구조적 분석

-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53
김 병 조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 남남갈등의 지형 분석: 지역과 이념 85
김 병 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남남갈등에서의 세대와 젠더:
2009 통일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차이와 공감' 111
박 정 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설문지〉 2009 통일의식조사 111

제3 세션 **젊은 세대와의 라운드 테이블 – “청년세대에게 통일을 묻다”**

강 룡 (탈북청년학생네트워크 상임대표)	3
강 혜 경 (사평화의 친구들)	3
서 하 나 (북한아이 꺼안기)	3
송 지 흥 (청년정토회)	3
유 병 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3
유 정 훈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북한연구21)	3
이 승 환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3
정 하 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3

제1세션

2009년 통일의식 분석 - 변화의 추이와 방향



• 국민의식에 나타난 세계와 북한:
한국인의 유연한 현실주의

이 상 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남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대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이 4대 주변국의 문제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왔다. 남북한 통일문제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차대한 현안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 4대 주변국은 6자회담의 형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관여해왔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이 주변국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 지는 통일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한반도 주변 4개국과 북한 등 5개 국가 중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가를 물어보았다.

<표-1>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단위: %)

구분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없다	무응답
2007	53	23.8	11.5	10.1	0.9	0.4	0.3
2008	59.9	20.3	9.6	7.7	1.6	0.5	0.3
2009	68.2	15.9	8.7	6.1	1	0.2	0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3년 동안 이들 5개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변화추이를 보면, 일단 가장 뚜렷하고 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호감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다. 2007년에도 전체 설문대상자들의 절반이 넘는 53%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숫자는 2008년에 다시 7%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또 2009년에 오면 무려 68.2%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답하였다. 이는 2008년 봄에 시작되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그 여진이 2009년까지 이어진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 시위와 연관 지어 생각하면 매우 의외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한때 10% 대로 떨어뜨리는 등 한국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은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책임이 주로 한국 정부에 있다고 받아들였으며, 일부 보수 언론이 우려하던 바와 같이 촛불 시위가 반미 정서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미국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8.3% 나 상승하였다. 이 기간 뚜렷이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진전이나 기타 중요

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과 취임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은 연령, 성(性,) 거주지역, 직업, 교육수준, 정치성향, 소득수준, 종교 등 전 인구학적 변수의 모든 층위에서 골고루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0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 것은 한국에만 고유한 현상이 아니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한국을 포함하여 25개국에서 미국의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이 중 일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대폭 상승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미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목할만큼 좋아졌는데, 이것은 버락 오바마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견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약 10년 전의 긍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다.”¹⁾

따라서 이번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그 원인 또한 위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특히,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30대에서 미국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주목을 끈다(표-2). 이는 아무래도 진보적이고 역동적인 젊은 대통령 오바마의 인기가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어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The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2009. “Confidence in Obama Lifts U.S. Image Around the World: Most Muslim Publics Not So Easily Moved.” In *25-Nation Pew Global Attitudes Survey*: Pew Research Center.

<표-2>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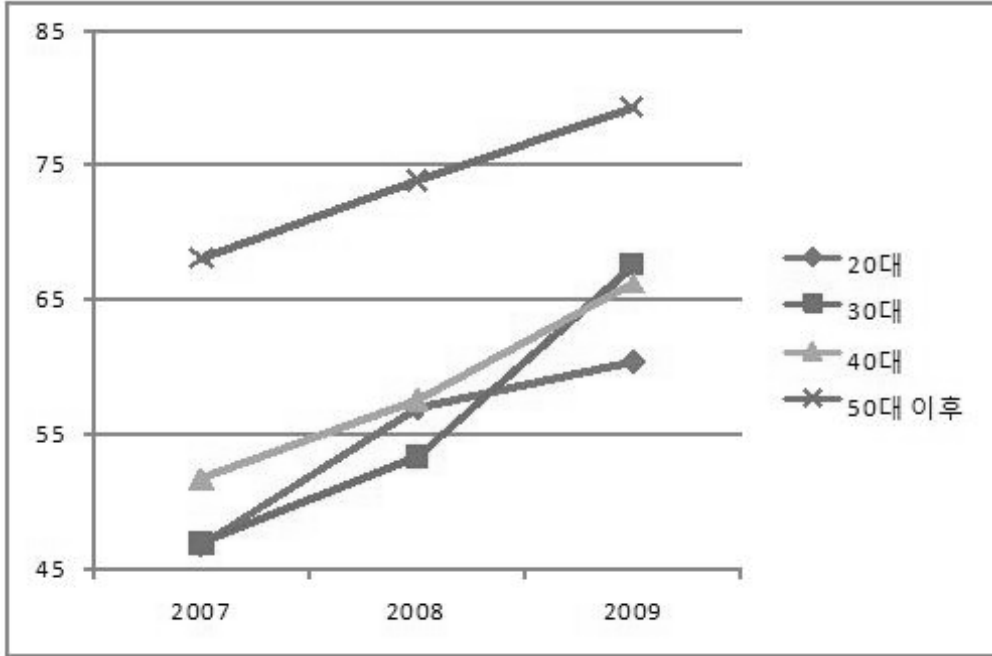
(단위: %)

연령별	연도별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없다	무응답
20대	2007	46.7	21.5	19.5	10.6	1.3	0.3	0.0
	2008	56.9	13.8	18.2	6.7	3.4	0.7	0.4
	2009	60.4	18.5	12.2	7.9	0.7	0.3	0.0
30대	2007	46.8	24.8	13.1	12.4	1.6	0.6	0.6
	2008	53.3	26.5	8.6	9.9	1.0	0.3	0.3
	2009	67.7	17.3	9.3	4.5	1.3	0.0	0.0
40대	2007	51.8	29.8	8.2	8.9	0.3	0.7	0.3
	2008	57.5	26.2	6.9	7.2	1.4	0.6	0.3
	2009	66.2	17.4	7.2	7.9	1.3	0.0	0.0
50대 이상	2007	68.1	18.6	4.7	8.2	0.4	0.0	0.0
	2008	73.8	12.6	5.1	7.1	1.0	0.0	0.3
	2009	79.4	10.0	5.7	3.9	0.7	0.4	0.0

2007년 20대의 46.7%, 30대의 47.1% 만이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하였는데, 2008년에는 20대의 57.1%, 30대의 53.5%로 특히 20대의 호감도 상승이 두드러졌다. 2009년에 설문에서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20대의 비중은 60.4%로 전년도에 비해 3% 정도 상승하였지만, 특이하게도 30대는 무려 14% 이상이 상승한 67.8% 이었으며, 이는 66.2%인 40대의 비중보다도 오히려 높은 것이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끼는 30대의 비중은 46.8%에서 67.7% 까지 20.9%나 상승하였고, 이는 다른 모든 연령층의 상승폭보다 높은 것이다. 그림 1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한때 미국에 대해 가장 덜 호의적이었던 30대가 이제는 오히려 40대보다도 더 큰 호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대 간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50대 이상 계층에서 미국을 가장 가깝다고 말한 사람들은 무려 79.4% 에 이르렀으며, 이는 20대의 60.4%보다 19% 나 높은 비율이다. 또 30대와 40대의 비율보다도 10% 이상 차이를 보여 노장년층과 젊은 세대 사이의 인식 격차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1> 연령별 미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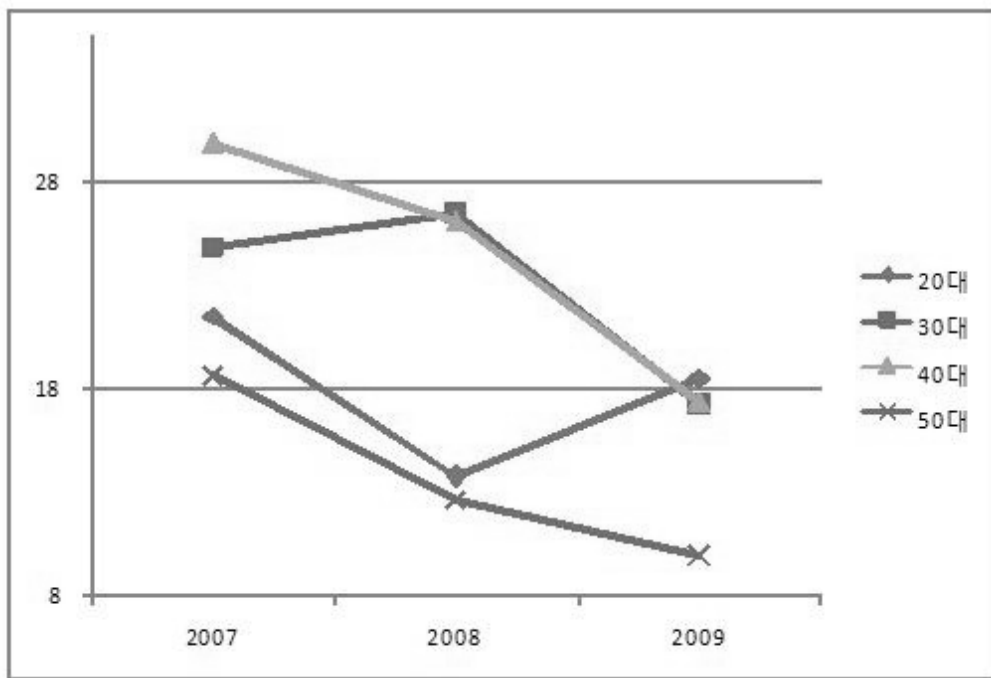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30대의 미국 선호도가 이렇게 급격히 높아진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에 힘을 실는 간접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인식이 전 연령층에 고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 것에 반해,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변화는 2009년 5월 25일 벌어진 북한의 제 2차 북핵 실험 및 뒤이은 미사일 발사, 그리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재개 및 핵 연료봉 플루토늄 추출 등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증가된 탓으로 이해된다. 북한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2007년에 23.8%, 2008년에 20.3%, 그리고 2009년에 15.9%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일본, 중국, 러시아보다도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이다. 북한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느끼는 사람들의 숫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거나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혹은 똑같았다 (2009년).

연령별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면, 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 2007년 이후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대의 경우 오히려 2008년에

비해 북한을 가까운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20대 중 북한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했던 비율은 2007년 21.5% 이었다가 2008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의 영향으로 13.8%로 대폭 하락하였다. 그런데 2009년에는 다시 18.5%로 4.7% 정도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는 30대에서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2008년 26.5%에서 2009년 17.3%로 9.8%나 하락한 것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2> 연령별 북한에 대한 호감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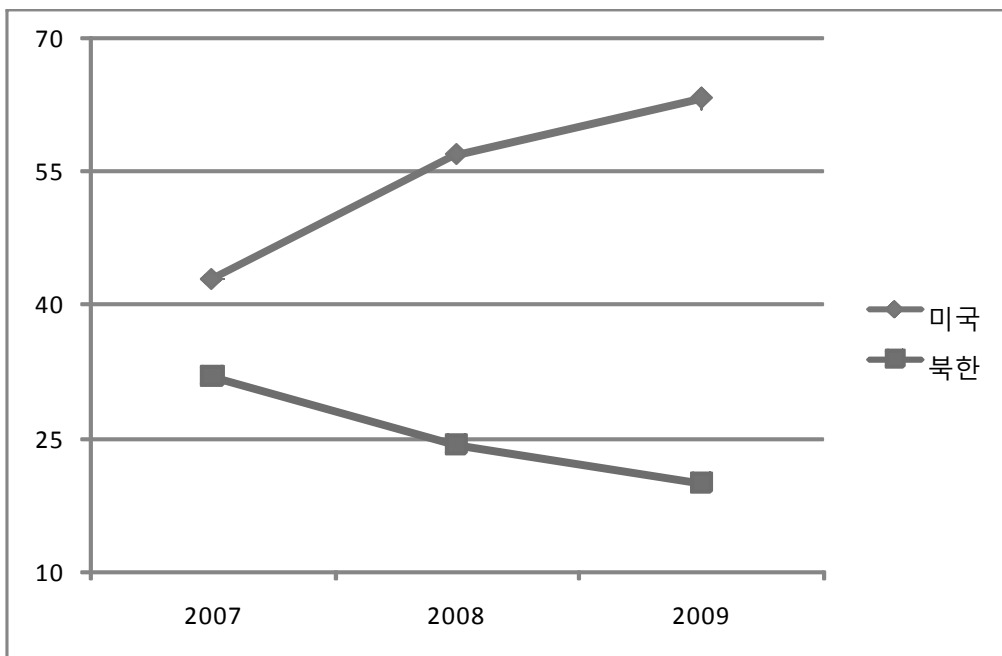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우 이 나라들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이 특기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향은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변화하였다기보다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부수적 현상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 2007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사이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상당히 심대한 변화를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의 순위는 미국 - 북한 - 일본 - 중국 - 러시아 순으로 3년 동안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50대 이상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북한 10%, 일본 5.7%, 중국 3.9%, 러시아 0.7%). 단 한번, 2008년에 20대 국민들 중 북한보다 일본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가 있었다(북한 13.8%, 일본 18.2%). 그러나 2009년에는 이 숫자가 북한 18.5%, 일본 12.2%로 다시 역전되었다.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일본과 중국을 가장 가깝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20대에서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다른 세대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에 대한 태도에 있어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집단은 스스로 자신을 정치적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들이었다. 2007년에 보수성향 집단은 59.7%가 미국을 가장 가깝다고 답한 것에 비해 진보성향 집단은 42.9%만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 우호적인 진보성향 집단은 56.9%로 증가했고, 2009년에는 63.2%를 기록, 69.4%인 보수성향 집단에 못지않은 미국 선호도를 보였다. 2007년과 2009년 사이 진보성향 집단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42.9%에서 63.2%로 상승, 무려 20.3%에 달하는 큰 변화를 보였다. 이에 못지않게 이 집단의 북한에 대한 태도도 급격하게 하락하였는데, 2007년 32%였던 북한 선호도는 2009년에 20.1%로 12% 가까이 추락하였다.

<그림-3> 진보성향집단의 선호국가 변화추이



성별로 보면 2009년에 남성(71.7%)이 여성(64.7%)보다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런 경향은 2007년과 2008년에도 관찰되었으나 그 차이가 2%에서 3% 정도 그다지 크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2009년에 오면 남녀 간 미국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는 7.3%로 벌어지면서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p < 0.05$)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비율은 여성 (17.2%)이 남성(14.6%)보다 2009년에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거주 지역별로도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다. 표본 수가 적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2009년 조사에서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끼는 정도는 수도권 거주자들이 73.4%로 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중부권 63.6%, 호남권 54.2%, 영남권 67%). 2007년에는 수도권의 미국 선호도는 55.3% 였으며 따라서 2년 동안 수도권의 미국 선호도는 18.1% 상승하였다. 영남권 (2007년 51.7%)과 호남권(2007년 38.7%) 도 2년 전에 비해 1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 미국 선호도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권에서는 북한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답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2007년에 호남권의 북한 선호도는 31.9% (수도권 21.8%, 중부권 18.6%, 영남권 25.4%)였는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으로 기타지역에서는 일제히 북한 선호도가 하락한 2008년에도 호남권의 반응은 30.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에는 호남권도 북한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 북한을 가장 가깝다고 대답한 비율이 24.6%로 낮아졌다. 이는 하지만 다른 지역 (수도권 14.8%, 중부권 16.1%, 영남권 14.8%)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직업별로 분석해보면 2009년 조사에서 미국에 가장 호감을 보인 직업군은 자영업자였고 (74.7%), 전업 주부(71.6%) 및 농수축산업자들(69.2%)이 그 다음 순위였으며, 블루칼라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63.2%). 북한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09년 조사에서는 화이트 칼라 직업 종사자들이 비교적 북한을 가까운 나라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20.6%), 전업 주부들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11.3%).

2007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3년간의 기간 동안 변함없이 드러나는 패턴 중 하나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고,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응답자들이 항상 미국에 대해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여 왔다는 것이었다. 2009년 조사에서도 이 패턴은 바뀌지 않아서, 중졸 이하 응답자의 74.1%가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한 반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응답자는 66.7%만이 미국을 가장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의 경우 대재 이상 응답자의 58.3%가, 2007년에는 48.9% 만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대재 이상 학력자가 미국을 선호하는 비율은 20% 가까운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2007년 중졸 이하 학력 응답자의 69.7%가 미국을 선호하여 중졸 학력자와 대재 이상 학력자들은 미국 선호도에서 21%가 약간 넘는 차이를 보였지만, 2009년에는 이 차이가 불과 7.4%로 좁혀졌다. 미국에 대한 호감이 2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보인 반면, 북한에 대한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의 정도나 학력 수준별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는 특징이 있다. 2009년에 대재 이상 학력자들의 17.6%가 북한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답한 반면 고졸 학력자들의 비율은 14%로써 사실상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한국 국민들은 어떤 국가를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을 놓고 이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2009년도 조사에서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미국을 가장 위협한 국가라고 답한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 북한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답한 비율은 반대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일단 2007년 조사에서 미국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1.1%로 15.5%인 중국보다도 높았지만, 2009년 조사에서는 미국을 위협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비중은 불과 12.4%로 2년 동안 9% 가까이 감소하여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덜 위협적인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음이 드러났다.

<표-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구분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없다	무응답
2007	21.1	25.8	36	15.5	1.3	0.1	0.3
2008	16.2	34.1	33.6	15	1	0.1	0.02
2009	12.4	17.6	52.7	15.8	1.1	0.2	0.3

반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007년 36%에서 2009년 52.7%로, 응답자 과반수가 북한을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라고 지목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3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일본을 위협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7년 25.8%에서 2008년 34.1%, 그리고 2009년에는 17.6%로 들쭉날쭉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대일관계에서 심각할 정도의 분쟁이나 관계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에 대한 호오감은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영향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표-4>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세대별/연도별 분류)

(단위: %)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없다
20대	2007년	33.9	20.3	32.9	12.0	1.0	0.0
	2008년	21.6	31.0	32.8	13.4	1.1	0.0
	2009년	20.2	17.6	51.7	9.6	1.0	0.0
30대	2007년	23.0	28.1	34.5	13.1	1.0	0.3
	2008년	17.2	36.1	31.8	14.6	0.3	0.0
	2009년	13.5	17.6	50.0	18.0	1.0	0.0
40대	2007년	15.4	31.5	32.8	18.4	2.0	0.0
	2008년	15.8	33.6	33.9	14.4	2.0	0.3
	2009년	12.1	19.3	51.8	15.4	1.3	0.0
50대 이상	2007년	11.5	23.0	45.0	19.1	1.4	0.0
	2008년	9.6	36.9	36.2	16.0	1.4	0.0
	2009년	3.6	16.0	58.4	20.6	1.1	0.4

이러한 경향은 세대별 분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미국을 위협적으로 보는 경향은 각 세대에서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느낀다는 비중은 모든 세대에서 50% 이상이었다.

그러나 세대 간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모든 세대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 20대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예를 들어 2009년 조사에서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답한 20대의 비율이 20.2%였던 것에 비해, 30대는 13.5%, 40대는 12.1%, 그리고 50대 이상은 불과 3.6%에 불과했다. 20대와

50대 이상 세대의 미국에 대한 인식 차이는 16.6%에 이르러, 세대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비해 북한을 위협적으로 보는 비율에선 세대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50대 이상 세대의 58.4%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대답한 반면,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30대에서도 50%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답변, 그 세대 간 격차는 8.4%에 그쳤다.

미국을 위협적인 국가로 보는 인식에서 성별 차이는 2009년에 남성 11.6%, 여성 13.4%로 큰 차이가 없었고, 북한에 대한 시각에서도 각각 54.5%와 51.2%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일본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대답한 여성이 19.8%인데 비해 남성은 15.5%로 차이가 있었고, 중국의 경우도 여성이 13.9%, 남성이 17.7%로 약 4% 정도의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위협적인 국가에 대한 인식 차이는 지역별 분석에서 매우 흥미롭게 드러난다. 아래 표에서 보면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대답한 사람은 2007년 중부권을 제외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모두에서 20% 이상이였다. 그러나 2008년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미국을 위협국가라고 대답한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 10% 대로 내려왔다. 2009년 조사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미국을 위협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각각 10.8% 및 11.1%가 되었는데, 호남권에선 이 비율이 여전히 22.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지역별/연도별 분류)

	연도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없다
수도권	2007	20.6%	25.%	37.8%	15.1%	1.5%	0%
	2008	13.1%	37.%	33.2%	16.4%	0.4%	0%
	2009	10.8%	18.1%	56.1%	13.5%	1.4%	0.2%
중부권	2007	14.4%	24.6%	39.0%	20.3%	1.7%	0%
	2008	15.6%	54.7%	15.6%	13.3%	0.8%	0%
	2009	13.7%	19.7%	45.3%	20.5%	0.9%	0%
호남권	2007	27.7%	29.4%	28.6%	13.5%	0.8%	0%
	2008	22.3%	31.5%	34.6%	6.9%	4.6%	0%
	2009	22.9%	22.%	38.1%	14.4%	2.5%	0%
영남권	2007	20.7%	28.5%	34.4%	15.2%	1.2%	0%
	2008	18.8%	25.5%	38.8%	15.2%	1.5%	0.3%
	2009	11.1%	14.5%	54.3%	19.8%	0.3%	0.0%

이러한 주변국에 대한 인식 격차는 북한에 대한 시각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북한을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까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07년에는 호남권이 28.6%인 반면 다른 지역은 30%대 중반정도에 머물렀는데, 2008년에 오면 중부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비율이 30%대 중후반으로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나 2009년 조사에서는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대답한 비율이 호남에선 38.1%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영남권, 중부권에선 모두 이전 해 조사 결과에 비해 15%에서 30%까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보는 시각에서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지난 3년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모두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정치성향별 차이를 보면, 미국을 위협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진보, 중도, 보수가 각각 18.4%, 11.1%, 9.6%로 예상대로 진보와 보수의 상당한 격차가 관찰되었다. 반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같은 순서대로 49.5%, 54.1%, 53.7%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불과 4.2%에 불과하였다. 2007년 조사에서 북한을 위협적이라고 대답한 진보가 26.7%, 보수가 40.4%로 그 차이가 14.3%에 달했던 것을 비교하면, 북한에서 느끼는 위협의 정도에 있어 정치 성향별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밖에 종교별, 소득수준별, 직업별 차이에서는 큰 의미 있는 차이를 찾기 힘들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외를 찾자면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1.5%로, 자영업 (57.1%), 블루 컬러(47.6%), 화이트 컬러(49.8%), 전업주부 (55.3%), 기타(53.2%) 등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3.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 크게 미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병행하여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 등 단기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된다. 여기서 한반도 주변국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았을 때는 지금까지의 분석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나라별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협력, 경쟁, 경계, 혹은 적대대상인가를 물었을 때의 결과를 아래 <표-6>에 정리하였다. 우선 미국을 협력대상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009년

에 73.7%였으며, 경쟁대상이나 경계대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13.7%와 11.7%로, 그리고 적대대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0.9% 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반면, 다른 주변 강대국에 대한 태도는 이와 상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09년에 49.4%의 국민이 경쟁대상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런 추세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07년과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각각 46.4%와 35.5%의 국민이 일본을 경쟁상대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일본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2009년은 이전 해에 비해 약간 낮아진 26.2%였다.

<표-6>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국가별 / 연도별 분류)

국가	연도	구호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미국	2007		53.1%	21.9%	21.9%	2.9%
	2008		70.2%	13%	14.8%	2%
	2009		73.7%	13.7%	11.7%	.9%
일본	2007		14.6%	46.4%	30.2%	8.5%
	2008		16.7%	35.5%	31%	16.7%
	2009		19.5%	49.4%	26.2%	4.9%
중국	2007		19.3%	46.3%	30.9%	3.3%
	2008		23.7%	38.1%	32.8%	5.1%
	2009		21.1%	42.0%	33.3%	3.6%
러시아	2007		22.8%	40.2%	32%	4.7%
	2008		28.7%	35%	31.8%	4.1%
	2009		28.1%	39.8%	29.8%	2.3%
북한	2007	21.8%	56.6%	3.3%	11.8%	6.6%
	2008	22.3%	56.9%	3.5%	11.9%	5.4%
	2009	17.4%	50.7%	2.2%	20.6%	9.1%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시각도 이와 비슷했다. 매년 약 40% 정도의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대상이라고 답하였으며 2009년에도 크게 변함없이 중국을 경쟁상대로 답한 비율은 42%, 러시아를 경쟁상대로 답한 비율도 39.8%로 비슷하였다. 두 나라를 경계의 대상이라도 답한 비율도 비슷하였는데, 중국은 33.3%, 러시아는 29.8%였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태도이다. <표-1>과 <표-3>을 보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혹은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에서 러시아를 선택한 사람은 거의 매년 1% 선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문제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일반적인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질문에서는 매년 70%에 가까운 사람이 경쟁상대 혹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추측해보면 한국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러시아와의 거리는 아직까지는 다른 한반도 주변국들에 비교해 아직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그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6>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북한에 대한 태도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나 하는 물음에 2007년과 2008년은 거의 같은 설문 결과가 나온 반면, 2009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북한을 구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이들의 비율이 2008년의 22.3%에서 2009년에는 17.4%로 줄었고, 협력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56.9%에서 50.7%로 감소하였다. 반면 북한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2008년 11.9%에서 올해는 20.6%로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앞 단락에서 분석한 바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 즉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감소하고 북한으로부터의 느끼는 위협감이 증대한 것과 궤를 같이 하여, 북한을 도와야 한다거나 협력해야 한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반면 북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09년에 와서도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아직도 9.1%에 불과할 뿐이며, 구호대상이나 협력대상이라고 답한 이들을 합친 비율은 전체의 68.1%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비율은 2007년에 78.4%, 2008년에는 79.2%로 2009년에 거의 10%정도 감소세를 보였지만, 아직도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국민들이 북한을 돕거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50.7%의 국민이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답한 것은 일본(19.5%)이나 중국(21.1%), 러시아(28.1%)를 협력대상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북한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표-3>에서 북한을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라고 답한 사람들이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답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2007년에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설문응답자의 36%, 2008년에는 33.6%, 2009년에는 52.7%였다. 이들이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 지 교차분석

한 결과는 아래 <표-7>에 정리되어있다.

<표-7> 교차분석 -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구호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2007	25.9%	45.4%	3.0%	14.8%	10.9%
2007(전체)	21.8%	56.6%	3.3%	11.8%	6.6%
2008	21.1%	55.4%	2.2%	14.7%	6.6%
2008(전체)	22.3%	56.9%	3.5%	11.9%	5.4%
2009	18.3%	40.7%	1.9%	26.0%	13.1%
2009(전체)	17.4%	50.7%	2.2%	20.6%	9.1%

위의 <표-7>에서 “(전체)”로 표시된 행은 각각 조사년도 설문응답자 전체의 비율이며 회색으로 표시된 행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다. 각각의 행을 비교해 보면 북한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라고 답한 이들도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에선 나머지 응답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을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비교적 북한을 적대대상 혹은 경계대상이라도 답할 확률이 다른 이들에 비해 높은 반면, 여전히 이들의 다수는 북한을 구호 혹은 협력의 대상이라고 답하였다. 2009년을 보면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꼽은 사람들 중 59.1%가 북한을 여전히 구호의 대상 혹은 협력의 대상이라고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전체 응답자의 비율 68.1%보다 9% 낮은 것이지만, 북한을 위협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진 현상 이면에는 아직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일견 모순되는 심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한반도 전쟁과 주변국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반도에 가상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각 국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서도 미국에 대한 호감 증대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데, 2008년에 57.4%의 응답자가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국은 남한을 도울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2009년에는 이 비율이 65.1%까

지 올라갔다. 아직까지 공산당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고 북한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 되어 주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한반도 전쟁에서 남한 편을 들 것이라고 대답한 이들은 거의 없었던 반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07년 26.8%였던 것이 2009년에는 38.5%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예측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러시아가 과거 공산국가이며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이 전쟁 발발 시 북한을 도울 것이라 예측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한국을 도울 것이라 대답한 비율도 높은 편은 아니었다. 2009년에 65.1%의 응답자가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 답한 것에 비해, 일본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 답한 이들은 24.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이 전 조사들과 비교해 상당히 증가한 결과라는 것이 눈에 띈다. 2008년에 14.7%만이 일본이 남한을 도울 것이라고 답한 것에 비교하면 그 수치가 거의 1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것의 원인은 우선 북한에 대해 일관되게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러한 예측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표-8>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각국의 태도 예상

국가	연도	한국 도움	북한 도움	자국 이익	중립
미국	2007	50.6%	1.3%	45.5%	2.6%
	2008	57.4%	1.4%	37.4%	3.8%
	2009	65.1%	0.7%	32.3%	2.0%
일본	2007	16.2%	3.3%	72.7%	7.9%
	2008	14.7%	4.3%	69.3%	11.5%
	2009	24.5%	3.7%	66.0%	5.7%
중국	2007	5.3%	26.8%	56.4%	11.4%
	2008	4.5%	30.3%	52.2%	12.9%
	2009	3.1%	38.5%	50.7%	7.7%
러시아	2007	3.7%	19.9%	59.1%	18.2%
	2008	6.9%	20.9%	54.6%	18.4%
	2009	4.3%	22.5%	57.6%	15.5%

그러나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을 제외한 각 나라들이 취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거나, 전쟁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

킬 것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판단이다. 예를 들어 38.5%의 응답자가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응답자는 중국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취하거나 (50.7%) 혹은 중립을 지킬 것 (7.7%)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자국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응답은 일본의 경우에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높게 나온 것이 흥미롭다. 2007년에는 부러 72.7%가, 2008년에는 69.3%, 2009년에도 66%가 일본은 전쟁 발발 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것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의 경험과 한국 전쟁 당시 일본이 군수기지의 역할로 피폐한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냉소적인 시각은 미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미국은 전쟁 발발 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지만 여전히 30%에서 40%의 응답자는 미국 또한 자국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5.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태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변국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이런 현실주의적 시각은, 과연 각 나라들은 남북한의 통일을 어느 정도나 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난다. <표-9>에 정리된 결과를 보면, 미국과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였다.

미국에 호의적인 의견이 두드러진 2009년 결과에서도 미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의 3분의 2인 66.6%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일본의 경우 2008년에 90.8%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이 2009년에는 79.9%로 좀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7년 이후 계속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이들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표-9> 남북한 통일을 주변국들은 얼마나 원하는가?

		(1) 매우 원한다	(2) 원하는 편이다	(1) + (2)	(3) 원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3) + (4)
미국	2007	4.6%	25.3%	29.9%	53.7%	16.3%	69.9%
	2008	5.5%	21.7%	27.2%	51.1%	21.7%	72.8%
	2009	4.4%	29.0%	33.4%	55.1%	11.5%	66.6%
일본	2007	1.3%	14.7%	16.0%	59.6%	24.3%	83.8%
	2008	1.2%	7.9%	9.2%	56.9%	33.9%	90.8%
	2009	1.4%	18.7%	20.1%	60.3%	19.6%	79.9%
중국	2007	1.3%	14.8%	16.0%	63.3%	20.5%	83.8%
	2008	2.1%	10.2%	12.4%	59.4%	28.2%	87.6%
	2009	1.2%	12.7%	13.9%	65.8%	20.4%	86.1%
러시아	2007	1.4%	15.9%	17.3%	64.6%	17.9%	82.5%
	2008	2.1%	12.4%	14.5%	60.5%	24.8%	85.3%
	2009	1.2%	15.1%	16.3%	68.6%	15.1%	83.7%
북한*	2007	1.4%	11.6%	13.0%	54.8%	32.2%	87.0%
	2008	1.2%	8.2%	9.4%	42.5%	48.1%	90.6%
	2009	2.8%	18.4%	21.2%	51.9%	26.9%	78.7%

* 북한의 경우, “김정일 정권(2007년, 2008년)” 혹은 “북한 정권(2009년)”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 국민들은 주변 4강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견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높은 편이었으나 (2009년 33.4%), 이의 두 배에 달하는 응답자가 미국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을 가장 가까운 국가라고 대답한 비율이 2009년에 68.2%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약간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순되는 결과는 오바마의 취임 및 북한으로부터의 핵위기 고조 등 단기적 이슈로 인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세기 한국 역사의 쓰라린 기억은 강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감을 뿌리 깊게 한국인의 의식세계에 심어 놓았으며, 그로 인해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해서 국제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현실주의적 시각은 동맹관계인 미국에도 예외 없

이 적용되고 있을 정도이므로, 지난 20세기 끊임없는 갈등의 대상이었던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할 수 있다.

6. 국제 협력과 통일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시각이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현실주의자라면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때와 조건에 따라선 타협과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지 않고,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편을 들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은 그러나 남북한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이들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표-10>을 보면 통일을 위해 주변국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한 이들의 비율은 2008년 35%에서 2009년 43.4%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주변국 협조가 필요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2007년 17.5%에서 2009년에는 9.5%로 낮아져서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결국 국제사회의 공조가 없이는 힘들다는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

<표-10>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 협조의 필요성

조사연도	(1) 매우 필요	(2) 약간 필요	(1) + (2)	(3) 별로 필요없음	(4) 전혀 필요없음	(3) + (4)
2007	35.8%	46.7%	82.5%	14.8%	2.8%	17.5%
2008	35.0%	52.9%	88.%	9.5%	2.6%	12.0%
2009	43.4%	46.9%	90.4%	6.7%	2.8%	9.5%

각 국가별로 어떤 나라의 협조가 통일에 있어 가장 필요할 지를 물어 보았을 때, 역시 응답자들은 무척이나 현실적인 답변을 하였다. <표-11>을 보면 우선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전체의 92.9%가 달했으며, 이중 45.2%는 미국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11>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 협조의 필요성 / 국가별

국가	조사연도	(1) 매우 필요	(2) 약간 필요	(1) + (2)	(3) 별로 필요없음	(4) 전혀 필요없음	(3) + (4)
미국	2008	42.0%	48.9%	90.9%	7.1%	2.1%	9.2%
	2009	45.2%	47.7%	92.9%	5.2%	1.8%	7.1%
일본	2008	18.5%	52.4%	70.9%	22.9%	6.2%	29.1%
	2009	20.4%	58.9%	79.3%	16.2%	4.5%	20.7%
중국	2008	25.3%	55.4%	80.7%	15.2%	4.1%	19.3%
	2009	29.7%	53.5%	83.2%	13.3%	3.4%	16.7%
러시아	2008	17.2%	57.8%	74.9%	20.9%	4.0%	24.9%
	2009	19.9%	53.6%	73.5%	22.6%	3.9%	26.5%

미국에 이어 남북한 통일에 꼭 협조를 구해야 할 대상은 중국으로 드러났는데, 전체적으로 83.2%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매우 필요 29.7%, 약간 필요 53.5%). 상대적으로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약간 낮은 편이었지만 (일본 79.3%, 러시아 73.5%), 여전히 이들도 한반도의 통일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들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할 주변국은 그 중요성의 순서대로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가장 독보적이었지만,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이들 4대 강국의 고른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7. 소결

2009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해 본 한국인들이 국제 정치를 보는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주의적이면서도 그 내용에서 매우 유연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realism)란 국가와 국가의 관계의 기본을 갈등이라고 파악하며, 각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힘(power)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는 이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시각을 말한다. 지난 3년간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일관되게 한국인들은 동맹의 중요성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가 얼마나 중

요한 가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과 북한, 일본 등에 대한 호감과 적대감이 자주 변화하고 있는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한국인들이 주도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그것이 한반도 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및 북핵 위기가 고조된 것은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이 큰 폭으로 증가한 현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미국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평가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막강한 힘에 대해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한반도의 통일을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66.6%에 달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이 한국을 돕는 다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충실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2.3%에 이르는 것에서 이러한 의구심이 짙게 드러난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일견 모순되는 태도는,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지나친 불신과 적대감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한국인들의 현명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 즉 현실주의적 시각과 유연함은 북한에 대한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북한 정부의 잇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난 3년 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며 대다수 한국인들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여전히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원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전체의 59%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유연한 사고방식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실주의와 유연함이 대단히 잘 조화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런 국제 인식은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우리가 견뎌내 온 온갖 간난과 역경을 통해 체험으로 익힌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은 한반도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해 대단히 잘 발달된 인식 체계를 갖고 있으며, 그 견실한 현실주의적 안목과 유연함은 앞으로 어떠한 국제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의 민족적 저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V형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일상화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I. 서론

지난해는 이명박 정부의 6.15선언과 10·4합의 재검토와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급변사태설,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억류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경색되었다. 올해 상반기 역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채 팽팽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북측이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고위간부들로 구성된 특사 조문단을 남측에 파견한 이후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대북지원도 재개되면서 남북관계는 서서히 해빙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일 통행이 완전 차단되어 위기상태에 빠졌던 개성공단 사업은 그 동안 북한이 무리하게 요구해왔던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정상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비핵화와 관련 하여 오랫동안 북미 양자대화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왔던 북핵문제 역시 최근 북미대화가 재개되면서 한반도의 주변정세도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다.

이 글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와 달라진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2009년 통일의식조사 중에서 통일 인식과 북한 인식을 다룬 문항들을 분석하였고, 특히 2007년, 2008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3년간에 나타난 한국인들의 통일의식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통일의식은 한국인들이 남북통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상, 관념, 감정, 의지, 열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전태국, 2009: 101).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통일국가에 대한 이상이나 도덕적 열망, 규범적 당위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이질적이고 경쟁적인 실체(북한)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양가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단일적이거나 통합적이거나 일관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2007~2009년 동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세 차례 실시된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통일의식의 패턴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통일의식의 이데올로기적 약화와 현실주의화

1.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이념적 대립의 약화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5.8%를 차지해, 반반이라는 응답(23.6%)과 별로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20.6%)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08년 조사에서 나타난 51.6%보다는 4.2%가 상승한 것이나 2007년의 응답률 63.8%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올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또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른 불안감의 반작용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영남권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호남권의 전체 응답자 중 75.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영남권의 경우 51.9%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두 지역간의 격차는 23.7%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2008년에 두 지역간의 격차가 15.4%였던 것에 비해 더욱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 변수에서는 작년에 비해 올해 진보와 보수 성향간의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전체 응답자 중 64.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수적 성향의 경우는 52.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두성향간의 격차는 11.7%이다. 반면 2008년 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 성향간의 격차는 13.7%였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 올해 통일 의식에 대한 이념적 대립 현상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1> 통일의 필요성

	①매우 필요	②약간 필요	①+②	③반반/그저 그렇다	④별로 필요 없음	⑤전혀 필요 없음	④+⑤	계
	%	%	%	%	%	%	%	%
2007	34.4	29.4	63.8	21.1	12.7	2.4	15.1	100.0
2008	25.9	25.7	51.6	23.4	19.6	5.4	24.9	100.0
2009	24.7	31.1	55.8	23.6	16.2	4.4	20.6	100.0

2. 통일 이유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같은 민족이니까’(44.0%)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23.4%),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8.6%),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8.5) 순서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7.1%)가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14.5%)를 앞질렀던 것에 비해 올해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안보적 이유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 공세적인 군사적 행동을 자주 보임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한 안보 불안감이 의식조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은 지난해에 비해 13.9%나 줄어들었고, 반면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의 응답률이 각각 8.9%, 1.5%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통일문제를 민족적 동질감의 차원보다는 경제적·군사적 문제와 같은 현실적 차원과 연계시켜 사고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을수록 통일을 경제적·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연령이 높을수록 민족적 동질감 차원에서 통일을 접근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은 36.6%에 불과한 반면에 50대 이상의 경우 55%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대로 20대의 경우 ‘남북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를 꼽은 응답률은 각각 26.2%와 24.5%였던 반면에, 50대 이상의 경우는 각각 23.4%, 9.2%로 나타났다.

지역차원에서는 응답 문항에 따라 다양한 응답률의 분포가 나타났다. 통일의 이유로 민족적 동질감을 가장 많이 꼽은 지역은 중부권(47.5%)이고, 남북간 전쟁위협 해소를 가장 많이 꼽은 지역은 예상 밖으로 제주도(38.5%)이며,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중부권(25.4%)이고,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를 가장 많이 선택한 지역은 북한과 근접해 있는 강원(27.8%)이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통일의 이유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를 선택한 응답률(8.5%)이 전체평균 응답률(4.2%)에 비해 두 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1-2> 통일의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남북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위해	북한주민도 잘 살수 있도록	기타	없다
	%	%	%	%	%	%	%
2007	50.6	19.2	18.7	8.9	1.8	0.7	0.2
2008	57.9	17.1	14.5	6.8	2.8	.1	.4
2009	44.0	18.6	23.4	8.5	4.2	.8	.5

3. 통일의 이중적 기대의식

1) 통일에 대한 집합적 이익의 기대감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를 묻는 질문은 통일이 가져올 이익과 불이익,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문화적인 것 등 매우 다면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익이란 일차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로 제한된 것이다.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53.2%인 반면에,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6.8%로 나타나 긍정적인 기대감이 부정적인 기대감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보인 것처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가능 시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증가가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2008년의 조사와 정반대의 결과인 반면에, 2007년의 조사와는 비슷한 결과이다. 2008년 조사에서는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률(27.5%)은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률(52.5%)보다 낮았다. 2007년의 경우는 전자가 55.8%, 후자가 44.2%였다. 2009년 조사의 결과는 2007년의 조사 결과 유형으로 회복됐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은 다소 감소된 것이다.

성별로는 여자 응답자(49.3%)보다는 남자의 경우(57.0%)에 긍정적인 이익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응답자(56.8%)에서 긍정적인 이익 기대감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50대 이상의 응답자(47.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이익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 고소득일수록 긍정적인 이익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위기감이 고조되었던 2008년의 조사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일수록 통일에 대한 이익 기대감이 낮게 나타났던 것과 대조된다. 반면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 소득별 분포는 2007년의 분포 유형과 유사하다.

지역별로는 2008년 조사에서 수도권(45.6%)과 호남권(53.2%)에서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2007년 조사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던 것에 반해 2009년 조사에서는 수도권(56.3%)과 호남권(61.3%)의 긍정적 기대감이 2007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제주(76.9%)에서 긍정적 기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영남권(40.7%)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서는 2008년 조사에서 중도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에서 부정적인 기대감이 크게 증가했던 데 반해 2009년 조사에서는 중도적 성향에서 부정적인 기대감이 지난해에 보다 10.2% 크게 줄었고 보수적 성향에서도 3.6%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간의 격차는 21%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두 성향간의 격차는 2008년 26.7%였던 데 비해 6.7% 좁혀진 것으로 통일에 대한 정치이념적 대립 현상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1-3> 통일의 남한 전체 이익 기대도

	①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	%	%	%	%	%
2007	16.8	38.9	55.8	36.4	7.8	44.2
2008	11.9	35.6	47.5	38.6	13.9	52.5
2009	14.0	39.2	53.2	36.9	9.9	46.8

2) 통일에 대한 개인적 이익의 기대감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3.9%로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한 경우 76.1%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07년과 2008년의 조사에서보다 부정적인 기대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앞서 통일 남한 전체 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전 해보다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더욱이 하락 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와 2008년 조사에서 통일의 개인 이익 기대감은 각각 30.3%, 27.7%로 2.6%가 감소한 반면에, 2008년과 2009년 조사에서는 통일의 개인 이익 기대감이 각각 27.7%, 23.9%로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비록 통일이 남한 전체 차원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은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통일이 개인 차원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일이 사회전체, 즉 집단과 개인에게 얼마나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 국민은 통일이 비록 개인의 이익 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집단의 이익 증대에는 통일이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의 필요에 의해 수행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은 비록 통일이 개인의 이해에 크게 관계가 없을지라도, 집단의 이해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있는 것이다.

성별로는 남자 응답자의 경우 27.8%가 긍정적 기대감을 갖는 반면에 여자 응답자의 경우는 19.8%에 불과하여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종사자가 26.7%로 긍정적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반면에,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11.5%로 긍정적 기대감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의 응답률이 38.5%로 긍정적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반면 영남권의 응답률이 17.0%로 긍정적 기대감이 가장 낮았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진보적 정치성향과 보수적 정치성향간의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매우 좁혀졌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진보적 정치성향의 응답률은 30.8%, 보수적 정치성향의 응답률 19.8%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격차가 11%이다. 이 격차는 2008년 조사에서 두 집단간의 격차가 21%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통일인식에서 정치이념적 대립 현상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1-4> 통일의 개인 이익 기대도

	①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	%	%	%	%	%
2007	5.7	24.6	30.3	51.2	18.5	69.7
2008	3.3	24.4	27.7	43.3	29.0	72.3
2009	4.1	19.8	23.9	53.4	22.7	76.1

4. 민주주의와 통일한국의 미래

1) 통일과 남북한의 민주주의 관계

1945년 8월 해방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 모두 통일과 민주주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민족적·시대적 과제이다. 분단은 남북한 양측 모두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을 가로막아 왔으며, 특히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해왔다. 분단과 군사적 대치, 그리고 이념적 대립은 남북한의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존재를 정당화해주고, 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도구로 오랫동안 기능해왔다. 반면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통일이 단순히 분단된 민족의 통합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 및 완성의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1987년을 기점으로 시민사회는 본격적인 분화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기본적인 민주화가 성취되고 냉전체제의 해체, 문민정부의 등장, 북한의 대규모 기근 발생 등을 계기로 시민사회에서는 신사회운동이 전개되고 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히 다원화되었다.

조사는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간의 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먼저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9.5%로 우리 국민 2명중 1명은 통일과 민주주의를 무관한 관계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1.2%로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응답률 19.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통일을 이루기에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민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 완성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민주주의 완성이 통일을 견인하고 실현가능하게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 분포는 2008년 조사 결과와 다르지만 2007년 결과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008년 조사에서 보다 7.1% 증가하였고, 반면 통일과 민주주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에서 보다 6.6% 감소하였다.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 사회 전체에 거세게 일어났던 촛불집회의 효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진 것이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 질문항목은 2009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관계와 비교대조해 봄으로써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 우리 국민의 인식구조를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국민은 남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는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통일이 되어야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응답한 비율은 28.7%,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 구조는 남한의 경우와 정반대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민주주의가 자력으로 완성되기 보다는 통일을 통해 외부의 힘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반면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통일과 남한의 민주주의 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고소득일수록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더 많이 응답했다. 수도권 지역의 응답자가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반면 영남권 응답자가 가장 적게 응답했다. 두 지역간의 응답비율은 각각 37.4%, 19.4%로 거의 두배 가까이 격차가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별·교육수준·직업·소득·지역 등의 변수에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1-5>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관계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	%
2007	19.9	31.3	48.7
2008	19.7	24.1	56.1
2009	19.3	31.2	49.5

<표1-6>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관계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	%
2009	28.7	27.7	43.6

2)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2007년과 2008년 조사에서 미래의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이기를 희망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사용된 선택항목의 용어의 의미가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측면이 있어 체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미래의 통일한국의 체제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2007년과 2008년에 사용했던 ‘민주주의’ 용어 대신에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로 대체했고, ‘사회주의’ 용어 대신에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로 변경했다. 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절충형’을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로 표현을 바꿨으며, 마지막으로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 이든 상관없다’는 용어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선택항목의 표현을 변경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는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률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률이 39.1%,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는 응답률이 13.3%, ‘통일이 이루어지기 하면 어떤 체제 이든 상관없다’는 응답률은 4.0%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두 번째 선택항목으로 2007년과 2008년 조사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을 택한 것이 각각 22.6%와 16.9%였던 데 반해 2009년에는 39.1%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6.15남북공동선언이 2항으로 제시한 ‘남한의 남북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간의 공통성을 남북한의 정상이 인정한 것처럼 절충형 통일 체제를 우리 국민 10명 중 약 4명은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우리 국민은 10명 중 4.4명만이 남한의 현 체제가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통일체제에 대해 상당히 유연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조사결과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연령별 변

수에서 40대 응답자의 경우에는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희망하는 응답률(38.6%)보다 남한과 북한의 절충형 체제를 희망하는 응답률(40.5%)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 평균응답을 분포와 반대되는 응답률 경향은 대졸 이상의 응답자와 화이트칼라의 응답자 집단에서,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와 천주교 응답자 집단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응답자들은 모두 미래의 통일한국 체제로 남한의 현 체제 보다는 남과 북한의 절충형 체제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	%	%	%
2007	72.3	1.8	22.6	3.3
2008	79.6	1.5	16.9	1.9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 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 한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 한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	%	%	%
2009	43.6	39.1	13.3	4.0

Ⅲ. 일상화된 대북 인식

1. 대북인식의 일상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50.7%로 가장 많았고, 경제대상 20.6%, 지원대상 17.4%, 적대대상 9.0%, 경쟁대상 2.3%로 각각 응답했다. 예년과 같이 2009년에도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그 규모는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즉 2007년에 56.6%, 2008년에는 57.6%였으나, 올해는 50.7%로 떨어졌다.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협력대상’ 인식이 2009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북한의 대상인식에서 2009년에 가장 현저하게 달라진 것은 ‘지원대상’과 ‘경계대상’의 응답이 역전되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2007년 11.8%, 2008년 11.3%로 ‘지원대상’(각각 21.8%, 21.9%)으로 보는 사람보다 훨씬 적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지원대상’(17.4%)이라는 의견보다 ‘경계대상’(20.6%)이라는 의견이 더 많아졌다. 동시에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도 2007년 6.6%, 2008년에 5.3%로 많지 않았으나, 올해는 9.0%로 늘어났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가에 대한 인식을 ‘긍정’(협력대상+지원대상)과 ‘부정’(경계대상+적대대상)으로 묶어 보면, 2009년에는 작년과 판이하게 달라진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각각 78.4%, 79.5%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09년에는 68.1%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부정적 인식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8.4%, 16.6%였으나 2009년에는 29.6%로 크게 상승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인식이 높아진 것은 2009년 들어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문제가 쟁점화하면서 대북 비판의식이 커진데다 로켓발사(4.5)와 핵실험(5.25) 등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1-8> 북한의 존재 인식

	협력대상	지원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경쟁대상
	%	%	%	%	%
2007	56.6	21.8	11.8	6.6	3.8
2008	57.6	21.9	11.3	5.3	3.8
2009	50.7	17.4	20.6	9.0	2.3

지역별로 보면,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영남권과 수도권이 각각 24.1%, 22.3%로 중부권(17.8%)과 호남권(10.1%)에 비해 높았다. 반면,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은 호남권이 24.4%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강했다. 예년과 비교하면 중부권의 변화가 의외였다. 중부권에서 작년에 ‘지원대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14.4%(07년)→24.9%(08년)로 급증했으나 2009년에는 다시 13.6%로 급감하여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작년에는 정권교체로 인해 중부권의 의식이 요동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적·일상적 패턴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지역변수의 특징은 호남권과 다른 지역이 구분되는 전형적인 지역변수의 특징을 드러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진보(60.9%)>중도(49.9%)=

보수(42.7%)이며,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자는 보수(22.9%)≒중도(22.1%)>진보(15.5%)로 중도의 대북인식이 보수화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중도성향의 사람들이 대북인식에서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위치하였으나, 2009년에는 보수쪽의 대북인식에 훨씬 가까워졌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작년에 정권교체 이후 요동했던 정치성향에 따른 대북인식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정부가 바뀌고 인도주의 지원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른바 정권교체 효과가 나타났었다. 즉 2007년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했으나, 2008년에는 보수정권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대북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보수는 지원대상 인식을 철회(29.7%→19.7%)했고 진보는 지원대상 인식을 강화(15.8%→20.6%)했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정권변화로 인한 효과가 사라지고 지원대상 인식에서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권교체로 인해 첨예하게 갈등하던 작년과는 달리 대체로 국민들의 의식이 ‘일상화’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2. 북한변화에 대한 비판인식 증가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이 과연 변화했다고 보는가, 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변하고 있다”(45.1%)는 응답보다 “변하지 않고 있다”(54.9%)는 응답이 9.8%나 많았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은 31.1%(2007년)→49.5%(2008년)→54.9%(2009년)로 지난 2년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북 비판의식은 2008년에 18.4% 포인트 늘어난데 이어 2009년에도 5.4% 포인트가 늘어나 2년 사이에 23.8%가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이른바 38세대였던 40대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한 반면, 30대는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비판적 인식이 가장 강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데 대해 40대는 50.3%가 동의한 반면, 20대, 30대, 50대는 각각 44.1%, 1.2%, 45.0%만이 동의하였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0대가 49.7%로 가장 적었고 20대와 50대는 각각 55.9%, 55.0%인 반면, 30대는 58.8%로 가장 높았다.

지난 2년과 비교하면 40대가 가장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일관

되게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20대의 비판적 의식이 높았던 반면, 2009년에는 30대의 비판의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강하게 띠었던 20대가 30대로 전환되는 시간적 경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20대가 2008년 촛불시위 등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으로 발전했기 때문인지 더 면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64.7%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데 반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등은 각각 44.5%, 44.1%, 39.2%로 낮게 응답하였다. 작년에는 중부권과 제주지역에서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 내지 불만이 크게 늘었으나, 2009년에는 2007과 비슷한 지역적 패턴으로 복귀하였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60.0%)>중도(55.5%)>진보(48.1%)로 보수일수록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비판의식이 강하였다.

<표-9> 북한의 변화 정도

	많이 변함	약간 변함	별로 변하지 않음	거의 변하지 않음
	%	%	%	%
2007	12.2	56.7	25.3	5.8
2008	6.1	44.3	37.7	11.8
2009	7.2	38.0	38.6	16.2

3. 북한 vs. 북한 정권 vs.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리적 사고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2008년과 2009년에 질문방식을 약간 변경하였다. ‘김정일 정권’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 정권’으로, 그리고 “신뢰하는가”라는 표현을 “대화과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것으로 바꾸었다. 왜냐하면 2008년 조사에서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6.6%에 불과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3.4%로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이라는 이름과 ‘신뢰’를 연결시키다보니 결과적으로 “김정일을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되어 너무 편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통일을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과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2008년과는 완전히 다른 응답이 나왔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매우 가능하다” 2.9%, “어느 정도 가능하다” 38.0%로 전체의 40.9%가 북한정권을 통일문제를 논의할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별로 가능하지 않다” 44.7%, “전혀 가능하지 않다” 14.4%로 전체의 59.1%는 북한정권과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고 간주했다. 질문의 내용이 ‘김정일정권’에서 ‘북한정권’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59.1%로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긍정적 인식이 68.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인식태도는 북한이라는 일반적 이미지와 정치적 실체로서의 북한정권을 국민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은 해소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대북인식은 한국인들이 북한이라는 대상을 사회공동체와 정치적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병로, 2007: 15).

통일논의 대상으로서 북한정권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지역적 차이와 정치성향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권에서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63.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은 각각 38.7%, 43.2%, 34.3%로 낮았다. 또한 정치적 성향과 북한을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인식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있음이 발견되었다. $p=.000$ 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이념갈등이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야기된다는 주장을 가장 신빙성 있게 증명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즉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북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4. 대북위기의식과 북한효과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26.9%, “다소 위협을 느낀다” 47.4%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74.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3년의 추이를 보면,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은 68.2%(07년)→61.3%(08년)→74.3%(09년)으로 작년에 조금 낮아졌던 위기의식이 금년 들어 다시 높아졌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교육수준이나 지역, 정치적 성향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직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연령집단에서는 20대(75.3%)와 50대(78.4%)가 30대와 40대(각각 71.9%) 보다 북핵 위협을 조금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직업군으로는 농·수·축산업과 전업주부가 각각 84.6%, 82.7%로 71~71%의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위협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63.6%)는 응답이 “없다”(36.4%)는 응답보다 27.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응답은 14.4%, “약간 있다”가 49.2%, “별로 없다” 30.0%, “전혀 없다” 6.4%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우려하였다.

지난 3년을 비교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59.7%(07년)→52.2%(08년)→63.6%(09년)으로 변화했다. 즉 작년에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2007년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높아진 것이다. 이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2007년에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불안감이 높아졌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2008년에 위기의식이 누그러졌고, 2009년에 2차 핵실험으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20대(71.0%)>30대(64.8%)>40대(60.0%)>50대이상(58.2%)로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대립과 긴장이 반복되는 남북관계에 적응력이 생겼거나, 아니면 북한이 선불리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란 현실 판단력을 갖게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별로는 여자(64.3%)가 남자(62.9%)보다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자가 남자보다 군사적 긴장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이러한 경향은 지난 2년간 유사한 패턴을 유지했다.

<표-10>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많이 있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	%	%	%
2007	12.5	47.2	34.1	6.2
2008	7.6	44.5	34.7	13.1
2009	14.4	49.2	30.0	6.4

지역별로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영남권과 중부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에 영남권과 중부권은 각각 54.6%, 57.6%로 응답하여, 수도권(68.7%), 호남권(36.7%), 강원(77.8%), 제주(61.5%)에 비해 낮았다. 즉 영남권과 중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안보불안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2007년에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2008년에는 조금 달라져 수도권과 영남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수도권과 영남권이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지하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데 2009년에는 수도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68.7%로 예측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북한이 감행한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안보불안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보수(67.9%)가 진보(63.5%)에 비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과 비교하면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다. 작년에는 보수적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즉 2008년에는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보수(52.2%)>중도(47.7%)>진보(42.9%)로 보수집단이 안보에 대한 안정감을 가졌다. 이는 2008년에 보수가 지지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보수집단이 안보적 측면에서 안도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2007년에는 보수(64.7%)가 오히려 진보(54.5%)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다. 아마도 진보정권이 집권한 시기였기 때문에 보수집단이 안보불안을 크게 느꼈고 그것이 보수층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2009년에는 2007년과 비슷한 양상이 발생했다. 즉 보수가 진보보다 안보불안을 더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에 진보-보수의 의식지형이 뒤바뀐 것을 ‘정권교체의 효과’였다고 한다면, 올해 진보-보수의 북한인식 지형이 다시 뒤바뀐 것은 ‘북한효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북한이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위협적인 무력시위를 감행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적 행동 내지 시위가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북한인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른바 ‘북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는 보수정권이 주는 안보상의 안도감보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수층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심각하게 우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09년의 비판적 대북인식이 높아지고 보수의 안보불안이 커진 것은 정권교체 효과를 상쇄하는 북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한반도 전쟁 가능성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다’(53.5%)는 견해가 ‘없다’(46.5%)는 의견에 비해 더 많았다. 작년에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56.8%로 ‘있다’(42.9%)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았는데, 올해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발생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진보와 보수가 각각 54.5%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었다. 작년에는 진보(45.6%)가 보수(41.1%)에 비해 전쟁가능성을 더 우려했으나, 금년에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009년에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발생하여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쟁발발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에 비해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수층이 더 늘어났는데, 이 역시 올해에는 ‘북한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11> 한반도 전쟁 가능성

	많이 있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	%	%	%
2007	7.5	45.9	39.7	6.9
2008	4.4	38.5	41.2	15.7
2009	6.7	46.8	37.9	8.6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낮아진 북한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과 용어를 선정하여 질문했다. 대체로 선군정치, 고난의 행군, 꽃제비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주체사상과 천리마운동, 아리랑축전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조금 알고 있는 정도였다.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건·개념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주체사상(78.0%)>천리마운동(73.6%)>아리랑축전(61.0%)>선군정치(45.4%)=고난의행군(44.7%)>장마당(20.6%) 등으로 열거된다.

<표-12> 북한사회 인지도 추이 (%)

구분/연도	2007	2008	2009
선군정치	46.2	45.4	45.4
주체사상	81.7	78.2	78.0
천리마운동	75.0	78.3	73.6
고난의 행군	46.2	45.7	44.7
꽃제비/장마당	38.4	37.5	20.6
아리랑축전	61.2	66.2	61.0

대체적으로 지난 3년간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에 천리마운동과 아리랑축전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상승했다가 2009년도에 다시 2007년 수준으로 낮아졌고,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고난의 행군, 꽃제비/장마당 등은 인지

도가 낮아졌거나 정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교류와 왕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북한 관련 사건과 보도가 활발히 전달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왕래나 대화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일 건강, 후계자문제, 핵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에만 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새 정부가 남북왕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안보를 중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북한관련 지식에 대해 자기검열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으로 활발할 때에는 응답자들이 어렵듯이 아는 내용도 모른다고 했을 때 혹시 사회적으로 뒤쳐진 사람으로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안다”라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남북관계보다 안보의식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애매한 용어들에 대해 응답자들은 ‘들어본 적 있다’거나 ‘모른다’로 안전하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20대는 북한에 대해 가장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도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특히 40대 연령층의 북한 인지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40대는 이른바 386세대로 불리는 연령층으로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에 대학·청년시절을 보낸 세대다. 따라서 40대는 북한과 관련한 이념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40대가 북한관련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이 북한관련 사건과 지식을 가장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부권이 그 다음을 차지하며, 수도권과 영남권은 북한관련 사건과 지식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완전히 뒤바뀌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중부권의 인지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15~20% 포인트 가량 높게 나왔으며, 영남권과 호남권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호남권의 대북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한 반면, 영남권과 수도권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대북인식이 우호적인 지역은 그만큼 북한관련 정보나 지식에 관심이 많아지는 반면, 대북인식이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지역은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가 ‘보수’나 ‘중도’보다 위에 제시한 6개의 북한사회 관련 개념과 용어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도는 진보보다 보수에 더 가까운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 2008년과 비교하면 ‘진보’의 북한사회인지도가 높아진 반면, ‘보수’의 북한사회인지도는 낮아졌다. 선군정치를 예로 들면, 지난 2년 동안 ‘진보’의 북한사회인지도는 58.4%(07년)→47.2%(08년)→52.0%(09년)로 변한데 비해, ‘보수’는 41.6%(07년)→

48.8%(08년)→44.4%(09년)로 변화했다. 즉 ‘진보’는 북한사회인지도가 작년에 크게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올라갔으며, 보수는 작년에 올라갔다가 올해는 떨어지는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반전 현상은 2008년에 ‘정권교체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저조해진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 이질감의 증가

남북교류와 인적 왕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방북경험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관련 경험이 공중파를 통해 전달되는 북한방송을 듣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금강산관광을 다녀오거나 평양, 개성을 방문하고, 탈북자(새터민) 정착을 돕는 등 북한관련 경험이 늘어났고 방법도 다양화되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사람들은 46.2%였으며, 금강산이나 개성 등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4.2%, 탈북자(새터민)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0.9%,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1.4%에 불과하였다. TV의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방송이 소개되고 인터넷을 통해 영화, 예술 등 북한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탈북자를 접해본 경험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의 추이를 보면, 북한방송·소설을 접해본 경험자는 40.8%→31.2%→46.2%로 작년에 감소한 후 올해 크게 늘어났으며, 북한방문경험자도 4.5%→3.5%→4.2%로 작년 감소에 이어 올해는 다시 늘어났다.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8.9%→9.3%→10.9%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에 새터민 입국이 늘어나면서 새터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활동과 단체참여 경험자는 지난 3년간 2.8%→2.4%→1.4%로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2년 동안 대북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대북지원 활동과 단체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한 경험은 40대가 52.8%로 가장 많았고 30대(48.3%), 20대(43.8%), 50대(39.3%) 순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접해본 경험이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중부권(60.2%)과 강원(69.4%)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수도권 44.8%, 호남권 42.0%, 영남권 42.4%). 정치성향은 진보(51.5%)>중도(45.8%)>보수(42.1%)로 진보적일수록 북한 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 생활수준, 법률제도에서 남북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으며, 언어사용과 생활풍습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5.8%가 남북간에 선거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였으며, 생활수준과 법률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97.3%, 95.8%가 다르다고 대답했다. 남북간에 언어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92.8%였으며, 관혼상제 등 생활풍습이 다르다는 응답은 88.2%,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95.5%였다.

지난 3년의 추이를 보면 국민들의 남북동질성 인식은 작년에 상당히 높아졌다가 올해 다시 낮아졌다. 남북간 언어사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7.4%→17.5%→7.2%로 달라졌고, 생활풍습도 11.2%→17.6%→11.8%로 작년에 동질의식이 높아졌다가 올해 다시 이질의식이 늘어났다. 선거방식과 생활수준, 법률제도에서도 비슷한 변화패턴이 관찰되었다. 즉 남북간에 “차이가 없다”는 동질성 인식이 선거방식과 생활수준, 법률제도에서 각각 2.8%→5.7%→4.2%, 1.7%→4.6%→2.7%, 3.3%→4.9%→4.2%로 각각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과 불만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IV. 결론

2008년 통일의식은 200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냉소적이고 보수적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보수당으로의 정권교체, 대북포용정책의 무용론 증가, 이명박 정부의 강경적인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경색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박명규 외, 2009: 33). 하지만 2009년은 다시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려는 경향-물론 2007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하거나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이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3년간의 전체 통일의식은 “V”자의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데는 2008년과 다른 변화된 대북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는 정권교체의 효과가 희미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들이 자주 일어나 불안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국민들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희구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욕구는 결과적으로 통일 지향적, 대북 우호적 성향을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또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른 불안감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대북강경정책과 남북간 교류와 왕래의 중단은 국민들의 대북인

식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로켓발사 및 핵실험,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등 도발적인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대북 비판의식과 불안의식은 매우 높아졌다. 또한 교류와 왕래의 급감으로 인해 북한 체험이나 정보 습득의 기회가 줄어들어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나 거리감은 더 늘었다. 이는 체제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정서적 또는 감성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한국민의 통일의식은 분절적이면서 동시에 유연적인 특성을 지닌다. 먼저, 세대 차원에서 20대와 40대의 통일의식은 다른 세대와 다른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이것은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기인한 산물이기도 하다. 386세대로 불리는 40대는 1989년 이후 이른바 “북한바로알기” 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한 세대로 이러한 역사적·집단적 경험이 북한에 대한 진보적 의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40대와 달리 북한에 대한 관심도 낮고 북한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인식이 큰 20대는 일반적으로 보수화 경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이러한 경향성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촛불시위 등의 사건으로 20대의 진보적·비판적 사고가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민의 통일인식은 분단체제에서 사회변동과 호응하는 역사적·사회적 구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상화된 비판적 대북인식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의 통일의식은 유연성을 지닌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번번이 감행하며 신뢰적이지 못한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은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지 않으며, 맹목적인 남한체제 우월의식을 갖지 않는다. 또한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데올로기적 대립 현상도 격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달리 2009년 통일의식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념적 대립현상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민은 김정일 개인에 대한 신뢰도는 없을 지라도 통일의 파트너로서 북한 또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뢰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민들은 미래의 통일한국의 체제를 남한식 또는 북한식의 어느 하나의 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체제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통일의식의 유연성은 통일의식의 수위(level)가 너무 아래로 떨어지지도 그렇다고 너무 치솟지도 않게 하는 조정력을 지닌다. 통일의식의 유연성은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장의 산물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과정을 통일이 가능해지는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통일의식의 유연성의 기저에는 ‘우리의식’ 또는 ‘민족적 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마사오 오코노기(2008)가 민족성을 상

실한 대북정책이 국민적인 반발을 초래하거나 여야간 대립을 격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한국민들은 ‘차가운’ 대북정책보다는 ‘따뜻한’ 대북정책에 익숙해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데올로기나 규범의 틀에 갇혀 있던 통일이나 남북관계를 실용성과 생산성 등의 가치우선에 기반하여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실천론에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공감하였고 지지를 보였다. 하지만 그러한 실천론은 통일이나 대북정책 문제에서 이데올로기적 색을 빼내고 대신 현실주의적 색을 입히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할지라도 민족적 연대감에는 너무 인색한 나머지 오히려 국민은 이전 정부 시기 수준의 북한과의 교류와 관계개선, 평화적 공존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외형적으로 부침(浮沈)의 폭이 크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심층 의식에는 일상화된 현실주의적 대북인식과 평화공존적 민족연대의식이라는 양가적(ambivalent) 인식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끝>

참고문헌

- 김병로, “국민통일의식 변화의 시계열 비교분석”, 『한국민주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특별심포지움 발표집(2007.10.10)
- 박명규 외, 『2008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 전태국, “한국인의 변화하는 통일의식과 권력엘리트의 영향”, 『통일 전후 동독 엘리트의 사회적 지위 변화』, 한독사회학회·통일연구원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발표집(2009.9.18)
- 마사오 오키노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과 그 주변-일본으로부터의 전망”, 『통일, 평화, 그리고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전과 쟁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집(2008.5.20)

제2세션

대북의식의 차별화 요인들 - 남남갈등의 구조적 분석



•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 의식

김 병 조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1. 머리말

냉전시대에는 정부가 통일 논의를 독점하고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통치권과 국가안보차원에서만 다루어졌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비교적 높았지만 구호가 난무했을 뿐,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사회단체의 통일에 대한 관심 역시 실질적이기 보다 명분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예컨대 1979년 3월 재야에서 결성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공동의장 윤보선·함석헌·김대중)’은 단체명에서 민족통일을 표방하였지만 실제 활동은 민주주의에 치중하였다.

하지만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 변화와 국내정세 변화로서의 민주화가 통일논의에 새 지평을 열어놓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통일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북한바로알기 운동을 시작하고 통일논의를 개방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도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새로운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에 관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남북 상호인적교류를 위한 문호를 개방하고, 1989년 9월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전문가의 주장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회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임동원, 2007: 288).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민주화 보다는 탈냉전의 영향을 크게 받아 추진되었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에 새로운 통일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를 이룩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배후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론은 1989년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일부 수정해서 1994년에 공포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쳤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 동안 한반도를 국내외 상황이 상당히 크게 변화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전제를 견지하면서도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통일론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일평화연구소(2009)가 발표한 ‘연성복합통일론’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하지만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통일방안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회세력을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통일방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추진 사회세력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2000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연구가 통일연구원원이 주축이 되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진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방안’ 협동연구사업이다. 이 연구는 이후 통일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형태로 구체화된다(대표적인 연구로 전성훈·송정호·오현철·이원태, 2007). 이들은 통일에 필요한 시민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시민단체(NGO) 외에 일반시민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

이 글은 통일정책에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특히 일반시민의 통일 정책 참여가 확대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주목하고자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에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광범위한 참여할 필요하다고 논의가 확정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2000년대 이후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많은 시민단체 통일정책에 관심을 갖고, 통일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통일 NGO가 크게 활성화되어 보수단체와 반목하면서 나타난 갈등(김국신, 2005: 57)’이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아가 통일 NGO의 대표성, 실적주의, 상업화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통일 NGO들이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의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때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을 수 있다(김국신, 2005: 60)는 간접적이지만 통렬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시민사회는 정치 성향별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고, 이들 간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달리하면서 ‘남남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치지향 집단이 선호하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은 국내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는 실질적인 로드맵이 되기 힘들 것이다.¹⁾

둘째,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로 발전할수록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일반국민의 여론이 중요해졌다. 국민 개개인이 정책수립과 정책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일반국민의 여론이 점점 더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마찬가지이다. 이점 일반국민들 역시 통일정책에 일반국민의 영향력이 크다고 자임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귀하는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어느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일반국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24.7%였다(박종철, 2005).²⁾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 일반국민의 통일정책에 대한 무관심 증대가 자주 거론되고

1) 그렇다고 남남갈등을 회피하는 식으로 소극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로드맵일수록 보수와 진보 간에 의견대립이 첨예할 것이고, 정부가 남남갈등을 두려워해서 해당 정책을 회피하면 결국에는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주변적인 정책만 추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제시된 6개의 선택지별 응답 순서는 일반시민(24.7%), 정치인(21.8%), 언론(19.7%), 대통령과 청와대(14.8%), 정부부처(10.8%), 시민단체(8.2%) 순이었다(박종철, 2005:106의 <표>).

있다. 1994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국민이 91.6%이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하였다(통일연구원, 1994). 그러나 2009년도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6%, ‘반반/그저 그렇다’가 23.6%, ‘필요하지 않다’가 20.6%이다(통일평화연구소, 2009).³⁾ 질문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조사를 액면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통일의식이 약화된 것만은 틀림없다.⁴⁾

현재는 일반국민의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이 늘어나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이 증가하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층이 늘어날수록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통일에 무관심 할수록 일상생활에 보다 가까운 교육정책이나 복지정책, 경제정책 등을 우선시하고 통일정책은 뒷전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면 통일 무관심층이나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증가는 불가역적인 현상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민주화’ 역시 비현실적이고 멀게만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민주화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역시 항상 높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민주주의 가치가 확산되고 마침내 민주화가 이룩되었다. 통일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일반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 집단이 형성되고, 이들이 지지하고 후원하는 통일정책을 근간으로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상과 같은 통일지향 사회집단을 찾을 것인가? 통일지향 집단이 남남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이념 지평을 넘어선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이에 이글은 과거 민주화를 추진했던 시민사회의 역량이 통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⁵⁾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지닌 집단의 통일의식은 어떠하며, 이들의 통일의식을 분석했을 때 향후 통일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의식이다.

3) 참고로 2007년도 2008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을 제시하면, 각각 63.8%, 51.6%였다.

4) 정확하게는 ‘통일지향의식’이라고 해야 하지만 편의상 ‘통일의식’이라고 칭하였다. 전태국(2009)은 통일의식을 ‘한국인들이 남북통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상, 관념, 감정, 의지, 열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5) 민주주의와 통일을 연계시켜보자는 문제의식은 2007년 통일의식조사에 참여한 연구진, 특히 박명규 교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민주화 선호’ 변수를 조작화하는 데 사용한 변수가 약간 다르지만, 해당 년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김병조, 2007; 박명규 외, 2008).

하지만,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과 민주주의 간에 관계를 설정하고, 이어서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지닌 사회집단의 존재를 탐색해야한다. 이에 한국 현대사에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기초로 일반국민을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3분하고, 이들 집단이 명목상의 집단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적인 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관련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타집단과 비교한 다음, 이들이 선호하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가 통일 내지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2. 통일,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 선호경향

남북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지향으로 민주주의, 민족(주의), 평화, 인권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⁶⁾ 이 중 그동안 많이 분석된 것이 ‘민족주의’와 통일과의 관련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하에서 독립을 위해 좌파와 우파가 ‘민족주의’ 우산 하에 결합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분단이후에도 민족주의는 남북 대화나 통일 논의의 핵심에 존재했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 민족/민족주의는 ‘국민 대 민족’, ‘민족 대 탈민족’, ‘국가 대 탈국가’ 라는 다중의 긴장 관계 속에 놓여있다(박명규, 2006). 물론 여전히 한국의 민족주의가 남북통일을 합의하는 데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지만(송두울, 2000), 민족주의만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데는 분명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평화’와 통일, ‘인권’과 통일을 연계시키는 작업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편가치로서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예상외로 민주주의를 통일과 연계시킨 논의는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다. 박명림(1999)은 한국 현대사 분석을 통해 민족주의가 민주주의와 만나지 않는 한 통일이 바람직한 내용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남북한의 민주주의 발전 없이 평화·통일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도 ‘1980년대 이후 민족문제를 새롭게 논의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주의 운동이

6) 하영선(2009), 전재성(2009), 김수암(2009)은 각각 ‘평화’, ‘민족’, ‘인권’을 남북관계 및 통일연구와 관련해서 개념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운동의 공(최형익, 2006:63)'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없는 남북한 '민족주의'가 남북 간에 화해보다는 대립을 야기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면, 통일논의가 진정 남북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⁷⁾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토양이 굳건하게 존재해야 비로소 통일논의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평화나 인권 같은 보편가치는 '민주주의' 가치 지향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한국사회의 특정 사회운동세력이 독점하는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수의 사회집단에 의해 사회운동이 촉발될지언정, '민주화' 같은 거대한 사회운동이 소수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 '민주화운동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고성국, 198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2008 등), 특정 집단과 민주주의를 연계시키고 있지만, 이 경우 민주화 이전 단계의 분석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민주화운동세력'의 헌신에 힘입은 바 크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배후에 민주화를 열망했던 다수의 국민들이 존재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현재도 민주주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실제 사회집단으로 존재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이념은 당위적인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성향처럼 자기 평가를 통해서 집단을 구분하기 힘들다. 이에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이 우리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문항을 활용해서 민주주의 지향집단을 색출하려고 한다.

<표-1>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한 제반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3년 동안 제시한 것이다.⁸⁾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평가가 지난 3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평균의 경우 대부분 소수점 2째 자리에서 0.01~0.05차이가 나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10월 유신'의 경우에도 평균에서 0.09의 차이가 날 뿐이다. 표준편차는 더욱 유사해서 가장 큰 차이가 '5.16'의 경우인 데 0.03이다.

7) 평화, 민족, 인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에 커다란 인식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매우 느슨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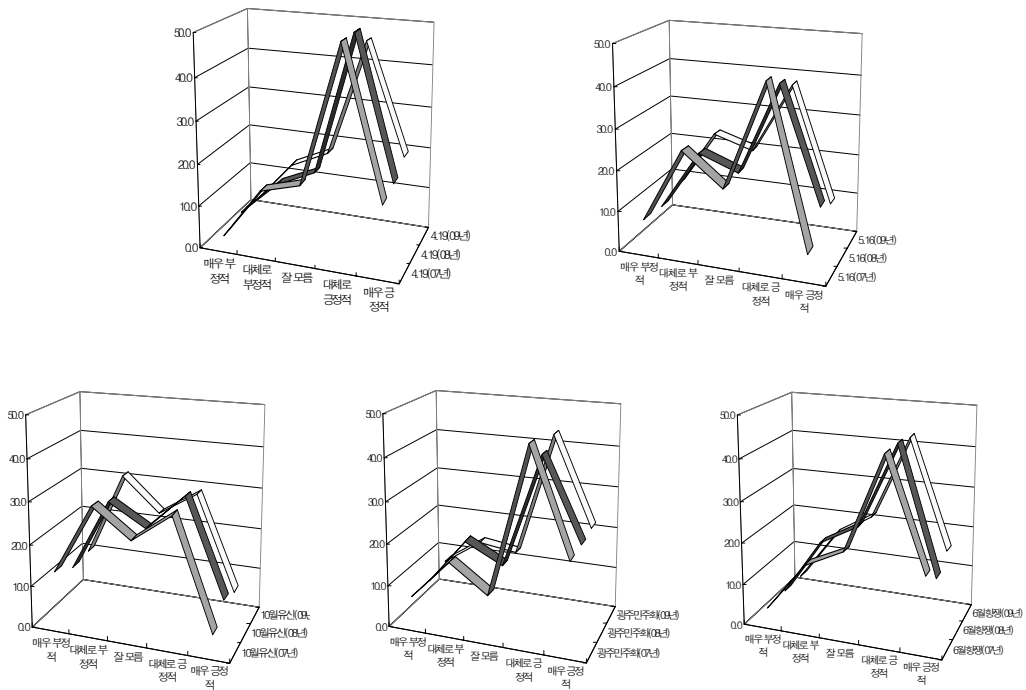
8) 각 사건에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는지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 이라는 5응답 중에 고르도록 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포가 달라도 평균값이나 표준편차가 유사할 수 있다. 이에 응답 분포를 [그림-1]로 제시하였다. 연도별로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단기간에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1>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 (평균, (표준편차))

사건	2007년 (1,200명)	2008년 (1,213명)	2009년 (1,203명)
4.19	.31(.50)	.32(.51)	.32(.52)
5.16	.07(.55)	.15(.57)	.08(.58)
10월 유신	-.09(.56)	-.00(.58)	-.06(.56)
광주민중화 운동	.28(.59)	.25(.60)	.28(.60)
6월 항쟁	.28(.53)	.22(.52)	.25(.53)

점수부여 : '매우 긍정적=1.0', '대체로 긍정적=0.5', '잘 모름=0.0', '대체로 부정적=-0.5', '매우 부정적=-1.0'



[그림-1]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응답분포(2007-2009)

각 사건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살펴보면(<표-1>), 4.19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이어서 광주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이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에는 다소 처진 상태로 5.16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0월 유신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0'에 가까운 '-' 평가가 나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대등하게 존재하되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들 사건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가 어떤 가치지향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5가지 사건 중 4·19,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은 '민주화' 운동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에 이견이 적을 것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민주주의 가치지향을 갖고 있다고 간주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해서, 이들이 '반민주주의' 가치지향을 가졌다고 바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민주-반민주 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사건이 무질서, 혼란 등을 야기하였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을 평가했는지는 5.16이나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에서 보다 명확하지 않다. 5.16이나 10월 유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와 연계시키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 경우는 민주-반민주 축을 기초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민주-반민주 축이 아니라 근대화, 경제성장, 사회질서 등과 연계시켜 평가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민주-반민주' 축만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재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민주-반민주' 축 외에 '질서-무질서'나 '성장-분배' 등 다양한 축을 고려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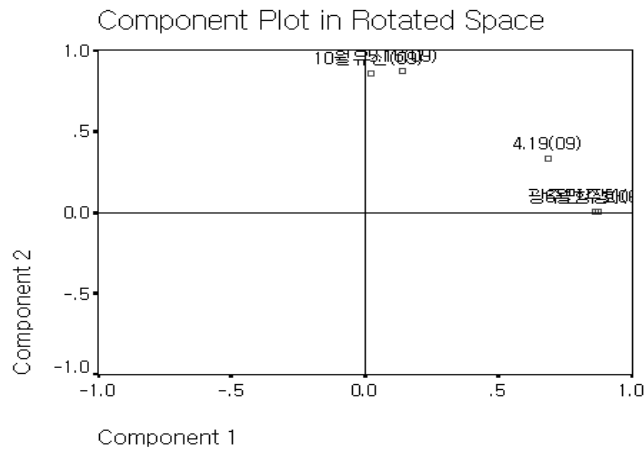
이에 이들 사건을 평가한 기준 가치가 무엇인지 요인분석을 통해 그 잠재변수를 추출하였다. 만일 주성분 분석에서 하나의 요인만 추출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민주주의변수(민주-반민주 축)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주성분 분석 결과는 3개년 모두에서 2개의 요인(Eigen Value 1이상)이 추출되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아니라 2가지 변수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카이저(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을 통해 회전된 성분행렬을 구하였다(<표-2>).

<표-2> 성분행렬

	2007년				2008년				2009년			
	성분행렬a		회전된 성분행렬b		성분행렬a		회전된 성분행렬b		성분행렬a		회전된 성분행렬b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성분	
	1	2	1	2	1	2	1	2	1	2	1	2
4.19	.761	-.069	.705	.295	.738	.033	.526	.518	.754	-.070	.682	.329
5.16	.563	.646	.196	.834	.672	.568	.120	.872	.569	.672	.142	.869
10월 유신	.387	.749	-.008	.843	.295	.601	-.008	.802	.458	.720	.022	.853
광주민주화	.778	-.363	.857	.043	.834	-.558	.860	.024	.743	-.438	.863	.007
6월 항쟁	.764	-.417	.871	-.011	.843	-.518	.863	.080	.749	-.447	.872	.003

a 추출된 2성분

b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 3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그림-2] 2009년 성분도표(베리맥스 회전 후)

그리고 [그림-2]는 2009년도에 경우에 한정해서 성분도표를 제시한 것이다.⁹⁾ ‘성분1’이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및 ‘4.19’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성분2’가 ‘10월 유신’ 및 ‘5.16’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분1은 통상 민주화 운동에 포함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라는 변수 명을, ‘성분2’는 사회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사건으로 보아 ‘안정 선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민들은 한국 현대사의 주요

9) 2009년도 경우만 제시한 것은 2007년, 2008년도 성분도표도 극히 유사한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사건을 민주화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민주주의 지향 가치가 통일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민주화 선호 변수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007-2009년 3년간 민주화 선호변수는 <표-3>과 같은 기술 통계 특성을 갖고 있다.

민주화 선호 변수 값이 0.5이상인 국민을 ‘강한 민주화 선호집단(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값이 0.5미만, -0.5이상 집단을 ‘중간정도 민주화 선호집단(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값이 -0.5미만 집단을 ‘약한 민주화 선호집단(민주화 선호 ‘약’)’으로 구분했을 경우,¹⁰⁾ 지난 3년 동안 민주화 선호에 따른 집단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록 민주화 선호 집단구분이 성, 연령, 교육수준과 같이 외적으로 명확하기 드러난 집단구분이 아니라 연구자가 설정한 범주이기는 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집단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민주화 선호 경향에 따라서 실질적인 집단 구분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3> 민주화 선호 변수와 집단구분 (2007-2009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민주화 선호 ‘강’(0.5이상)	민주화 선호 ‘중’(-0.5~0.5)	민주화 선호 ‘약’(-0.5이하)	계(명)
민주화 선호 (2007)	0.0 1.0	-2.72 1.82	32.3 (388)	37.1 (445)	30.6 (367)	100.0 (1,200)
민주화 선호 (2008)	0.0 1.0	-2.69 2.10	33.0 (400)	32.0 (388)	35.0 (425)	100.0 (1213)
민주화 선호 (2008)	0.0 1.0	-2.87 1.83	32.9 (396)	35.6 (428)	31.5 (379)	100.0 (1,203)

실제로 민주화 선호경향은 ‘관용성(toleranc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표-4>).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90%정도가 ‘시위나 집회’를 ‘허용해야한다(‘반드시’+‘대체로’)’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는 민주화 선호도가 낮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에서는 75%이상이 촛불집회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탈북자를 예로 들었지만, 사회

10) 집단을 구분하는 데 정해진 별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민주화선호 변수 값 ± 0.5 를 기준으로 3분하였다. 보다 엄격하게 ± 1.0 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 1.0 을 기준으로 구분했을 경우 연도별 집단 구성이 15%내외, 70%내외, 15%내외였다. 여론을 통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수가 되어야 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민주화를 선호하는 층을 판별해낸다는 점에서 다소 느슨한 기준을 채택하였다.

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성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은 탈북자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결국 민주화 선호변수로 구분된 집단이 실제적인 사회집단으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4> 민주화 선호 변수와 관용성(2009년)

(단위 :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chi^2=153.95$ $p < 0.001$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42.3	20.8	12.1
	대체로 허용해야 한다	49.9	58.4	52.2
	가급적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7.3	18.5	28.5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0.5	2.3	7.1
'촛불시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에 대한 평가 $\chi^2=174.46$ $p < 0.001$	매우 찬성	38.6	16.8	9.8
	다소 찬성	37.6	32.2	30.3
	반반/ 그저 그렇다	15.7	34.1	28.0
	다소 반대	5.8	11.2	19.3
	매우 반대	2.3	5.6	12.7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chi^2=24.94$ $p < 0.00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5.6	1.4	2.4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8.2	32.1	29.8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9.2	59.5	57.5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6.9	7.0	10.3
탈북자 수용에 대한 인식 $\chi^2=31.31$ $p < 0.00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한다	55.6	40.9	43.5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9.9	45.8	43.5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4.5	13.3	12.9

이와 관련해서 민주화 선호 경향이 정치지향 변수분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통상 보수 보다 진보가 관용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집단 간에 나타난 관용성의 차이가 실은 정치성향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¹¹⁾

<표-5>를 보면 ‘진보’는 40%이상이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 속하고, 반대로 보수는, 2007년을 제외하면, 40%이상이 민주화 선호가 약한 집단에 속한다. 더구나 연도별로 진보성향이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매우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반대로 보수의 경우, 민주화 선호에 포함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성향과 민주화 선호 간에는 서로 관계가 있고, 약간씩이지만 관련성이 조금씩 강해지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5> 민주화 선호경향과 정치성향

(단위 : %)

정치성향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계(명)
진보	2007	42.2	34.3	23.4	100.0(303)
	2008	46.7	29.4	23.9	100.0(289)
	2009	48.5	27.4	24.1	100.0(299)
중도	2007	26.6	38.9	34.5	100.0(568)
	2008	28.3	36.0	35.7	100.0(583)
	2009	29.9	41.1	28.9	100.0(581)
보수	2007	33.3	36.7	30.0	100.0(327)
	2008	29.3	27.3	43.4	100.0(341)
	2990	23.8	33.1	43.0	100.0(323)

그러나 민주화 선호와 정치성향 간의 연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비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비율이 높지만, 진보성향 중에서도 민주주의 지향이 약한 사람이 20%가 넘는다. 반대로 중도나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최소 20%는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 통상 ‘진보 정치성향’과 ‘민주주의 선호경향’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다.¹²⁾ 실제로는 수적으로 진보 보다 중도나 보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에서 진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2/3정도는 중도와 보수가 차지하고 있다.

11)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진보는 보수에 비해 관용성이 높게 나온다.

12) 한국사회 민주화에 진보 정치성향 집단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도나 보수 정치성향 집단에도 민주화를 열망하는 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과 진보 성향 집단이 서로 중첩되지만, 두 집단 구성원의 일치성보다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왜냐하면 정치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에서 남남갈등이 나타나지만, 민주화 선호성향 차이가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선호경향 별로 민주주의와 통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3년 계속 물어보았고, 2009년에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았다(<표-6>).

<표-6>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

(단위 : %)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계 (명)
통일과 남한민주주의 (2007) $\chi^2=11.64$ $p < 0.05$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5.0	17.8	17.2	19.9 (239)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0.9	33.3	29.5	31.4 (376)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4.1	49.0	53.3	48.7 (584)
통일과 남한민주주의 (2008) $\chi^2=10.35$ $p < 0.05$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1.3	18.8	19.8	20.0 (24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8.0	22.9	19.8	23.5 (285)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50.8	58.2	60.5	56.6 (686)
통일과 남한민주주의 (2009) $\chi^2=9.53$ $p < 0.05$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3.0	17.1	17.9	19.3 (23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2.8	32.2	28.2	31.2 (375)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4.2	50.7	53.8	49.5 (596)
통일과 북한민주주의 (2009) $\chi^2=18.51$ $p < 0.001$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34.8	27.6	23.5	28.7 (345)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8.5	28.7	25.9	27.8 (334)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6.6	43.7	50.7	43.6 (524)

분석결과 모든 조사에서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에서 통일과 민주주의 간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민주화 성향이 약한 집단에서는 통일과 민주주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그리고 민주화 선호경향별 민주주의와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³⁾

마지막으로 통일과 민주주의의 선후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 비율과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을 비교하면, 남한의 경우에는 ‘남한 민주주의→통일’을 상정하는 경우가 ‘통일→남한민주주의’를 상정하는 경우보다 많다. 남한 내 민주주의 공고화 노력이 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전망케 하는 조사결과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북한 민주주의’를 상정하는 경우가 ‘북한 민주주의→통일’을 상정하는 경우보다 많다. 이는 북한의 경우 내부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역량이 아직까지는 크게 불충분하다는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화 선호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민주화와 통일의 선후성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남한 민주주의 → 통일 → 북한 민주주의’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주화 선호경향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민주화 선호경향별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¹⁴⁾ <표-7>은 남북통일의 필요성, 통일가능시기,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되는 정도, 통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를 강하게 선호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면 통일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χ^2 검증결과 참조).

13) 이론적 논의와 달리 실증분석에서는 민주주의와 통일이 관계없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질문자체가 일반국민에게 매우 생소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통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지만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조사결과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연계시킨 논의가 희소한 현실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통일 간에 어떤 관계를 상정하는 지에 관해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으려면 앞으로 민주주의와 통일을 연계하는 담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4) 2007년, 2008년 자료에 대해서는 과거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9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한다.

<표-7>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 (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X^2=70.63$ $p < 0.001$	매우 필요하다	38.1	19.2	16.9
	약간 필요하다	30.8	31.1	31.7
	반반/그저 그렇다	18.7	26.6	25.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0.4	18.0	20.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	5.1	6.1
통일가능시기 $X^2=44.92$ $p < 0.001$	5년 이내	2.3	2.8	3.2
	10년 이내	23.2	14.0	13.7
	20년 이내	31.8	24.5	26.9
	30년 이내	15.4	20.1	12.9
	30년 이내	14.9	17.3	17.2
	불가능하다	12.4	21.3	26.1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X^2=26.44$ $p < 0.001$	가능한 빨리 통일	11.6	7.7	6.3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73.2	65.2	66.8
	현재대로가 좋다	10.9	18.7	17.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4.3	8.4	9.8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되는 정도 $X^2=73.78$ $p < 0.00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4.0	10.7	7.1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2.9	36.0	39.1
	별로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27.3	42.8	40.4
	전혀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5.8	10.5	13.5
통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X^2=46.28$ $p < 0.00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8.6	2.3	1.3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22.2	19.6	17.4
	별로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53.3	54.2	52.8
	전혀 이익 되지 않을 것이다	15.9	23.8	28.5

최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이 불가능하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통일에 무관심한 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은 70%정도가 통일이 필요('매우 필요'+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

면 민주화 선호 ‘중’ 집단과 민주화선호 ‘하’ 집단 중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각각 50.3%, 48.6%로 50%정도이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 중에서 통일이 필요 없다(‘별로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5% 미만이고, 통일보다 현재대호가 좋거나 관심이 없다는 사람의 비율은 합해서 15%를 약간 상회한다.

이에 반해 민주화 선호 ‘중’ 집단과 민주화 선호 ‘약’ 집단에서는 은 25% 내외가 통일이 필요 없거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선호 ‘중’ 집단과 민주화 선호 ‘약’ 집단에서는 통일보다 현재대호가 좋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비율도 25%를 상회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지향 집단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에 대해 관심과 욕구가 큰 것은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에서는 24%가 통일이 남한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율은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에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합치면, 민주화 선호 ‘강’ 집단은 2/3정도가 통일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 집단에서는 통일이 남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도 통일이 자신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¹⁵⁾ 이는 민주화 선호집단도 대체로는 통일과정이 어렵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통일지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개인적인 이득보다 사회전체의 이득을 중시하고, 단기적인 이해관계보다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과거 민주화를 추진할 때, 민주화 주도 집단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과 유사한 사고 형태이다. 이 점이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주도 집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데 이어 민주화 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표-8>).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화 선호경향에 관계없이 ‘협력대상’이라고 보는 관점이 다수이며, 이어서 경제대상,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비

15) 물론 상대적으로는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에서 타 집단에 비해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그 격차는 타 질문에 대한 응답에 비해 작은 편이다.

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한 관계를 보는 인식에 있어서는 민주화 선호성향 별로 큰 차이가 없다.

<표-8> 북한에 대한 인식(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chi^2=12.10$ $p = n.s.$	지원대상	15.2	18.7	18.2
	협력대상	57.1	47.7	47.5
	경쟁대상	2.3	2.3	2.1
	경계대상	18.7	22.2	20.8
	적대대상	6.8	9.1	11.3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정도 $\chi^2=16.17$ $p < 0.05$	매우 원한다	3.8	1.4	3.4
	다소 원한다	20.7	18.9	15.3
	별로 원하지 않는다	51.8	54.9	48.7
	전혀 원하지 않는다	23.7	24.8	32.5
향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chi^2=15.80$ $p < 0.05$	많이 있다	12.4	12.6	18.5
	약간 있다	45.5	54.2	47.5
	별로 없다	35.4	27.1	27.7
	전혀 없다	6.8	6.1	6.3
북한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chi^2=14.35$ $p < 0.05$	매우 위협을 느낀다	24.6	26.2	29.8
	다소 위협을 느낀다	43.5	51.4	47.2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26.1	18.2	17.7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5.8	4.2	5.3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의견 $\chi^2=12.28$ $p = n.s.$	매우 동의한다	41.9	42.5	46.4
	다소 동의한다	42.7	42.5	34.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9.3	8.9	10.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8	4.7	5.0
	잘모름	1.3	1.4	3.7
최근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chi^2=39.99$ $p < 0.001$	많이 변하고 있다	8.8	4.4	8.4
	약간 변하고 있다	42.9	41.6	28.8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37.6	39.0	39.3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10.6	15.0	23.5
북한정권(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 $\chi^2=62.27$ $p < 0.001$	매우 가능	5.6	2.6	0.5
	어느 정도 가능	48.7	34.1	31.1
	별로 가능하지 않음	36.6	49.5	47.8
	전혀 가능하지 않음	9.1	13.8	20.6

한편,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북한 정권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정도’가 민주화 선호 ‘중’ 집단이나 민주화 선호 ‘약’ 집단 보다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도 75%정도가 북한 정권이 통일을 희망하지 않은 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화 선호성향이 강한 집단이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다소 낮게 평가하고 ‘북한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도 조금 낮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를 보았을 때, 이 부분 역시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단 간에 인식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정권에 대한 시각은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점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을 ‘친북세력’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나아가 ‘중북세력’으로 보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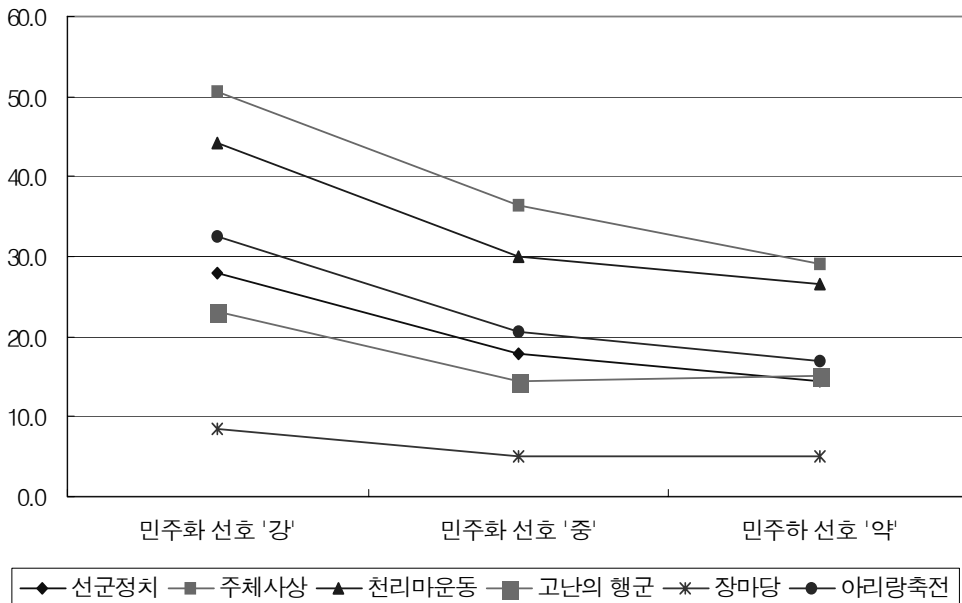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중에서도 민주화 선호경향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최근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과 상대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타 집단과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민주화 선호경향이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북한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차이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반영된 것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지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을 현실적인 통일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상과 같은 민주화 선호집단의 북한 인식 해석에 대해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한 차이에 대한 의견이나 북한사회 인지도 조사에서 나타난다.

생활수준, 법률제도, 선거방식, 언어생활, 생활풍습, 가치관 등 각각에 대해 남북한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그러나 모든 측면에서 민주화 선호성향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를 선호하는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에 남북한 사회생활 차이를 인정하는 정도는 동일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북한사회 인지도 면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이 비해 북한을 보다 잘 알고 있었다([그림-2]). 일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 대체로 주체사상 > 천리마운동 > 아리랑 축전 > 선군정치 > 고난의 행군 > 장마당 순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화 선호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물론 응답자 스스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조사결과가 나온 한 민주화 선호집단에 대해 북한을 모르는 집단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¹⁶⁾



[그림-3] 분야 별 ‘안다(잘 안다+조금 안다)’는 응답 비율(2009년)

4. 민주화 선호경향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민주화 선호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접촉을 통해 변화를 야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화 선호 집단은 타 집단에 대해 관용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이상과 같은 특징

16) 북한 일반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모른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차이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표-8> 참조).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표-9>).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 중에는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른 집단보다 많아서 60%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다른 집단은 반대이다. 민주화 선호 '중' 집단에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가 넘고, 민주화 선호 '약' 집단에서는 2/3정도가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분포는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국민 내부에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표-9>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chi^2=67.41$ $p < 0.001$	매우 도움이 된다	12.6	6.5	4.7
	약간 도움이 된다	47.5	36.7	28.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8	41.6	43.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1	15.2	23.0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 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 $\chi^2=108.88$ $p < 0.001$	매우 도움이 된다	23.4	8.2	7.2
	약간 도움이 된다	58.1	57.0	44.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2	27.6	39.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3	7.2	9.0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민족도(2009년) $\chi^2=65.50$ $p < 0.001$	매우 만족	0.8	2.8	4.7
	다소 만족	19.2	31.6	36.4
	다소 불만족	55.6	54.3	47.8
	매우 불만족	24.5	11.2	11.1
대북정책결정시 국민의견반영정도 $\chi^2=58.60$ $p < 0.001$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1.5	0.7	0.8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14.4	23.1	26.2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3.5	63.3	58.5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0.6	12.9	14.6

민주화 선호집단은 대북지원보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 '강' 집단에서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의

견이 80%가 넘고 있다. 물론 타 집단은 민주화 선호집단보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다. 민주화 선호성향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을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북지원과 달리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민주화 선호지향이 약한 집단에서도 50%이상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남북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50%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북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논란이 적게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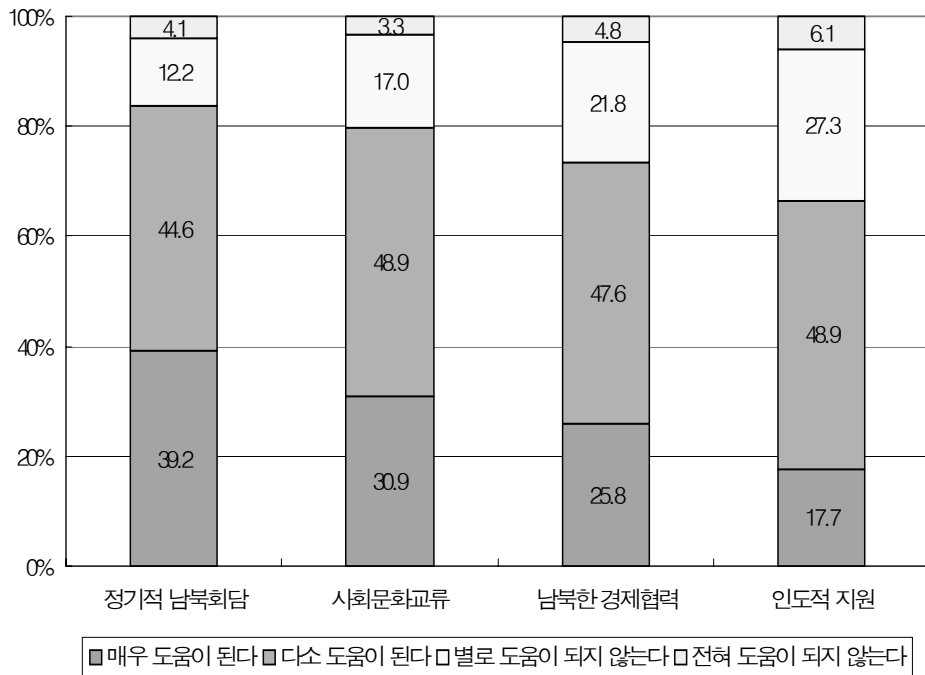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교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선호집단이 남북교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민주화 선호집단의 불만이 높은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¹⁷⁾

대북정책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정부 간 교류가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리라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대북정책의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을 대북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주화 선호집단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정부가 대북정책 결정시 국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대북정책에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정책을 포함하여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 및 열의가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민주화 선호집단의 의견에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화 선호집단이 특히 선호하는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기로 한다. [그림-4]는 민주화 선호 '강' 집단에 한정해서 여러 대북정책이 통일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정리해서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4가지 대북정책 중에서 정기적 남북회담이 통일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회문화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순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여러 분야 대북 정책 중 정기적 남북회담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비록 민주화 선호집단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불만이 크다 할지라도, 통일과정에 정부가 sryfb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17)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정부 신뢰도는 매우 낮게 나온다. 그런 점에서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진술이다. 한편 타 집단에서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나 국민 의견 반영정도 역시 민주화선호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이지 결코 절대수치 면에서 높은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있어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다 점도 중요하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인도적 대북 정책을 중시하고 있지만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점 민주화 선호집단과 대북 인도적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간에 정책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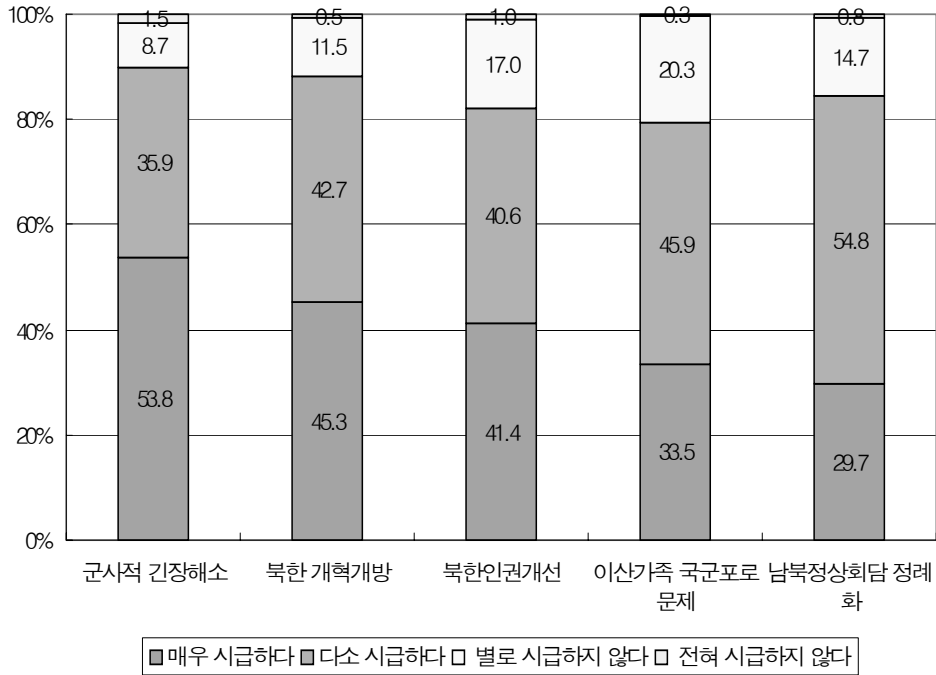


[그림-4] 대북정책별 통일에 도움 주는 정도(민주화선호집단, 2009년)

한편, 민주화 선호집단의 대북 사안별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그림-5]와 같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군사적 긴장해소가 남북한 간에 합의해야할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이 북한 개혁·개방, 북한 인권개선 순이다.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해결,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는 평가이다.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은 군사적 남북긴장완화가 보다 근원적인 치유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리라는 점에 대

해서는 민주화 선호집단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것이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사항이나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¹⁸⁾



[그림-5] 대북 사안별 시급한 정도(민주화선호집단, 2009년)

마지막으로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대북 현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09년 8월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 정책 현안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결과를 분석하기에 대북정책 현안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8) 질문 문항에는 남향에서의 미국철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철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민주화 선호 집단은 남향에서의 미군철수에 대해 9.7%가 ‘매우 시급하다’, 20.4%가 ‘다소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타 집단에 비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30%정도에 불과한 수치이며, 또한 타 집단과의 차이도 타 분야보다 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는 크게 한국 요인과 북한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한국 요인을 살펴보자. 한국 요인은 정권교체 요인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고, 전 정부가 남북한 사이에 체결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한편, 김정일 정권이 지속된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기를 원했다.¹⁹⁾ 그리고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이 강화된 것도 남북관계가 경색하게 된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데, 이 역시 남한 측의 정권교체 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어서 북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의 정권교체 요인보다 남북관계를 경색하게 만든 중요한 북한 측 요인이 있는 데,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벗어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북한은 2008년 12월북한의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하였고, 12월에는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폐쇄, 개성관광·남북열차 운행중단, 개성·금강산 상주체류인원 절반 감축 등 소위 '12.1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2009년 3월에는 개성공단 근무 근로자 억류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성공단에서의 경제교류가 크게 위축되었다.

<표-10>은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계승에 찬성하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60%정도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한다는데 찬성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남북교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는 이미 예견된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 선호집단 내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3이 넘는다. 더구나 타 집단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0%가 넘는다. 비록 민주화 선호집단 내의 다수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한다는데 찬성할지라도 타 집단에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19)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남북합의 계승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노무현대통령과 체결한 남북합의 내용보다, 남북합의를 체결한 당사자가 바로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이기 때문이다.

<표-10>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2009년)

(단위: %)

		민주화 선호 '강'	민주화 선호 '중'	민주화 선호 '약'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한다 $\chi^2=117.04$ $p < 0.001$	매우 동의한다	18.4	8.9	7.1
	다소 동의한다	42.9	34.8	33.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4.7	36.7	31.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1	16.1	20.6
	잘 모름	3.8	3.5	7.4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chi^2=61.71$ $p < 0.001$	매우 찬성	18.4	8.9	7.1
	다소 찬성	42.9	34.8	33.8
	반반/그저 그렇다	24.7	36.7	31.1
	다소 반대	10.1	16.1	20.6
	매우 반대	3.8	3.5	7.4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한다 $\chi^2=55.77$ $p < 0.001$	매우 찬성	21.8	14.7	13.5
	다소 찬성	47.6	46.0	40.6
	반반/그저 그렇다	22.3	35.7	31.1
	다소 반대	6.8	3.5	12.7
	매우 반대	1.5	0.0	2.1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chi^2=21.72$ $p < 0.01$	매우 찬성	22.2	13.8	16.1
	다소 찬성	32.4	36.0	34.3
	반반/그저 그렇다	31.6	36.4	34.6
	다소 반대	10.7	13.3	11.6
	매우 반대	3.1	0.5	3.4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chi^2=44.58$ $p < 0.001$	매우 찬성	13.6	14.0	20.1
	다소 찬성	30.1	32.7	31.9
	반반/그저 그렇다	24.5	33.6	31.7
	다소 반대	24.0	17.8	13.5
	매우 반대	7.8	1.9	2.9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동참해야한다 $\chi^2=40.48$ $p < 0.001$	매우 찬성	13.9	13.1	15.0
	다소 찬성	40.4	47.1	39.3
	반반/그저 그렇다	25.5	31.6	35.9
	다소 반대	14.4	7.0	6.6
	매우 반대	5.8	1.2	3.2

개성공단 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에서는 개성공단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층이 60%이상 두텁게 존재하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50%에 못 미치고 있다.

한편, 대북 인권문제에 관련해서 민주화 선호집단에서 타 집단보다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한다는 데 찬성의견이 많아, 70%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 지향이 인권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예측이 가능했던 조사결과이다. 또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한다는 데 타 집단에서도 50%이상이 찬성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데 국내적으로 큰 반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민주화 선호집단에 속한 사람의 5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북인권문제가 중요하지만, 정부처럼 책임질 수 있는 집단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책임질 수 없는 민간단체가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경우 효과도 적고 자칫 대호와 타협상대로서의 북한 정부를 잃어버릴 우려도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한편 북핵 문제와 대북지원, 그리고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화 선호도가 강한 집단 보다 민주화 선호도가 약한 집단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상대적으로 민주화 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해 온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아마도 북한과의 교류단절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집단 내에서도 북핵 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하고 국제 제재조치에 동참해야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많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와 대북지원을 연계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도 현실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민주화 선호집단도 남북관계에 ‘북한 변수’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 정권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한과 남한국민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민주화 선호집단도 대북 지원정책이나 남북한 경제협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지만, 북한 정부의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큰 불만을 갖고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5. 맺음말

2009년은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이 마련된 지 20년 되는 해이자, 동서독일이 통일한 지 20년 되는 해이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변화된 국내외 정세에 맞는 통일방안을 새롭게 준비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방안과 함께 통일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통일 열기는 많이 식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글은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룩했다면, 이들 집단이 통일과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여기서 민주주의 가치에 주목하게 된 것은, 그동안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체제로 민족주의가 주로 분석되었지만, 실제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민족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있다는 이론적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요인분석 해서 ‘민주주의 선호’ 변수를 추출하였고, 변수 값에 따라 일반국민들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민주화 선호지향에 따라 구분한 3집단은 성, 연령, 교육수준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난 차이에 따라 구분한 집단이 아니다. 또한 정치성향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해서 구분된 집단도 아니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이 단순히 명목상으로 구분되는 가공의 집단은 아니었다. 관용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실제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실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민주화 선호경향에 따라 구분된 3집단은 정치성향별 집단과 일부 중복되지만, 동일한 집단은 결코 아니었다. 민주화 선호에 따라 구분된 집단과 정치지향에 따라 구분된 집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민주화 선호집단이 추구하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남남갈등을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선호집단은 통일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집단이다. 타 집단에 비해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갖고 있으며, 통일이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 선호집단은 향후 통일정책 추진에 주요 지원세력이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면에서는 민주화 선호집단과 타 집단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는 타 집단에 비해

북한 정권을 관대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화 선호집단이 소위 통일 지상주의나 북한을 낭만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집단은 아니었다. 현실적인 남북대치상황에 대해서는 타 집단과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이질화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은 타 집단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한 가운데 접촉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는 집단이고 규정할 수 있다.

민주화 선호집단이 접촉을 통한 북한 변화를 모색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제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미래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타 집단에 비해 보다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된 데 대해 민주화 선호집단은 한국정부 보다 북한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서 어느 정부건 통일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통일의식이 높은 집단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그런데 현재 민주화 선호집단이 통일에 적극적인 집단이다.

이 점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민주화 선호가 강한 집단이 통일문제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민주주의 가치지향과 일치할 경우이다.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이 민주화 선호집단의 가치지향과 크게 상치할 경우 정책을 비판할 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 통일정책이 시민사회와 유리된 채 겉돌고 통일정책 거버넌스 논의는 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고성국. 1989. “민주화운동세력과 제도권의 역관계,” 『사상과정』25 : 59-72.
- 김병로·김병조·박명규·서호철·은기수·정은미. 2007. 『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통일학연구1. 도서출판 늘품.
- 김병조. 2007. “한국사회의식과 대북정책 평가의 관계분석: 통일과정에서 남남갈등 극복과 민주화 선호집단의 기여 가능성 모색,” 통일연구소 특별심포지움,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pp. 25-52.
- 김국신. 2005.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통일연구원 편.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통일연구원. pp. 1-83.
- 김수암. 2009. “남북관계 분석 및 통일연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 인권개념 분석.” 통일평화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제1차 자료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pp. 56-76.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편.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돌베개.
- 박명규. 2008. “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적 지향,” 『한국문화』41: 245-262.
- 박명규·김병로·김병조·빅영호·박정란·정은미. 2008. 『200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도서출판 늘품.
- 박명림. 1999.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통일』. 세종연구소. 연구논문 99-16.
- 박종철. 2005.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통일연구원 편.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통일연구원. pp. 86-179.
- 송두울. 2000.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 임동원. 2007.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의 확립.” 최장집·이정우·최영기·장하준·임동원·도정일·김우창.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웅진싱크빅. pp.283-339.
- 전성훈·송정호·오현철·이원태. 2007.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 전재성. 2009. “남북관계 분석 및 통일연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 민족 개념.” 통일평화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제1차 자료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pp. 37-55.
- 전태국. 2009. “변화하는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권력엘리트의 영향,” 한독사회학회·통일연구원 주최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통일 전후 동독 엘리트의 사회적 지위 변화』. pp 99-121.
- 최형익. 2006. “한국 민주주의와 통일의 조건: 하나의 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와 인권』6(2) : 51-74.
- 통일연구원. 1994.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 통일평화연구소. 2009.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연성복합통일론』. 미출판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대북정책 로드맵2020 워크숍 자료집.

하영선. 2009. “남북관계 분석 및 통일연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 한반도 평화개념사.” 통일평화연구소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제1차 자료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pp. 7-36. (끝)

• 남남갈등의 지형 분석: 지역과 이념

김 병 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1. 문제제기

지역과 이념은 한국의 정치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구조적 갈등의 두 산맥이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존재하고 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은 남북분단과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의해 확대·재생산되어 왔다.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정권수립 시기부터 좌우의 대립이 치열했고 70~80년대를 거치며 이념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제3공화국 시기부터 깊이 패인 영호남의 지역갈등은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담론이 되었다.

세계적 탈냉전의 도래와 한국사회 민주화의 진전으로 지난 20년 동안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사회주의권에 문호를 개방하는 7.7선언을 시작으로 1989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시작됨으로써 지역·이념 갈등은 냉전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남북교류와 왕래가 시작됨에 따라 통일문제와 북한문제, 대북정책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의견대립과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를 지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의견대립, 즉 ‘남남갈등’이 첨예화되었다. 이러한 의견의 대립은 대북지원에 대한 ‘퍼주기’ 논쟁과 분배의 투명성 문제, 북한의 경직된 태도와 북한에 끌려다니는 듯한 남한정부의 태도에 까지도 이어졌다. 대북정책과 북한인식, 통일에 대한 생각, 주변국을 바라보는 시각 등 여러 측면에서의 의견 차이는 이른바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남남갈등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은 완화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는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논란이 되었던 대북정책을 보수적 시각에서 바로 잡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남갈등의 양상도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 10~20년 간의 남북관계가 반공을 국시로 삼고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해 오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는 사뭇 달라져 새로운 도전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역과 이념 변수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009년 8월 현재 지역과 이념에 따라 통일·북한·대북정책·새터민·주변국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2008년 이후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뀔으로써 남남갈등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지역갈등의 구조와 변화

(1) 통일인식

ANOVA를 실시한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각 지역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각 지역별 집단간의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던컨(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제주와 강원을 예외로 하면, 호남지역이 통일필요성 인식이 가장 높고, 영남지역이 가장 낮으며, 수도권과 중부지역은 중간 정도를 차지한다. 즉 2009년의 통일필요성 인식 지형은 호남권과 수도·중부권, 영남권의 세 권역에서 다른 성향을 보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지역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ANOVA 결과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2009)	Between Groups	32.680	5	6.536	4.471	.000
	Within Groups	1764.489	1207	1.462		
	Total	1797.170	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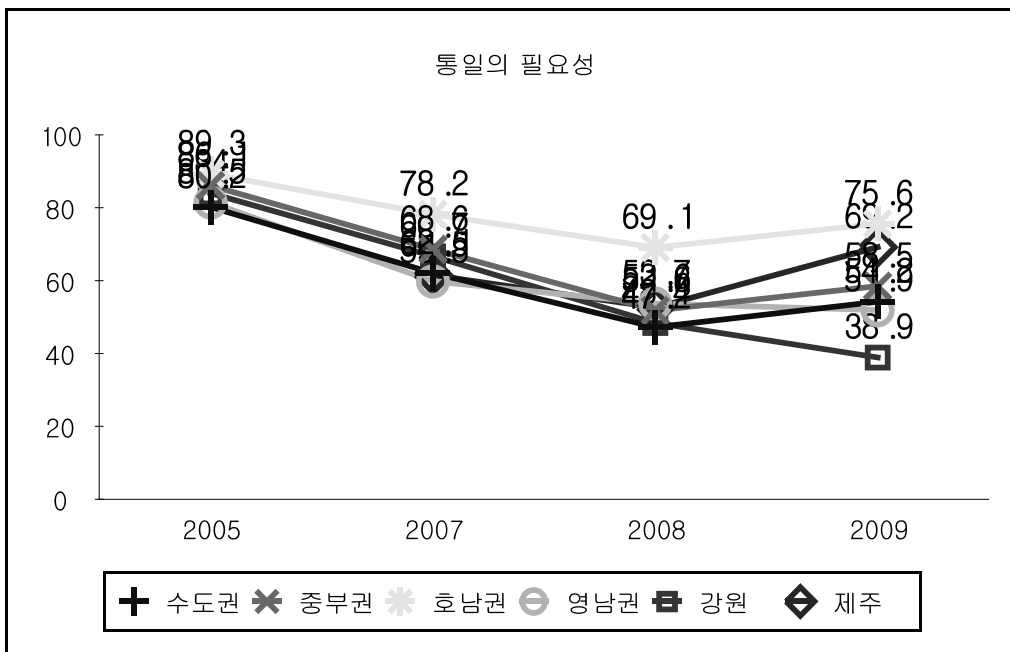
<표-2> 지역별 통일의 필요성(2009)에 대한 Ducan의 사후검증

지역별	N	Subset for alpha = 0.05		
		1	2	3
호남권	119	1.92		
제주	13	2.08	2.08	
중부권	118	2.36	2.36	2.36
수도권	593		2.45	2.45
영남권	324			2.65
강원	36			2.75
Sig.		.074	.137	.125

2009년 통일인식의 지역별 차이를 2008과 비교해 보면, 통일인식에 대한 지역간 성향의 차이가 더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ANOVA 분석과 던컨의 사후검증 결과 2008년에 다른 성향을 보인 지역의 평균이 각각 호남권 2.05와 중부권 2.70인데 반해, 2009년에는 다른 성향을 보인 지역집단의 평균이 각각 1.92(호남)과 2.65(영남), 2.75(강원)로 격차가 좀더 벌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태도의 격차가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더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의 개괄적 추이는 <그림-3>에서 볼 수 있다.

통일인식의 지형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수도권 80.2%, 중부권 86.1%, 호남권 89.3%, 영남권 81.5%로 호남권·중부권이 한 궤를 이루고 수도권·영남권이 다른 한 궤를 형성하는 호남·중부권-수도·영남권의 지형을 갖추었다. 이 지형이 2007년에 이르러 중부권이 호남권에서 다소 떨어져 수도권으로 가깝게 이동하였다. 즉 호남권이 78.2%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중부권(68.6%), 수도권(62.1%), 영남권(59.8%) 순으로 낮아졌다.

<표-3> 지역별 통일필요성 인식 추이(2005~2009)



2008년에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호남권이 69.1%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부권과 수도권에서 통일 필요성 응답이 각각 51.8%, 47.2%로 영남권(53.7%)보다 낮아졌다. 호남권-수도·중부권-영남권 순으로 형성되었던 지형에서 2008년에 수도권·중부권과 영남권의 뒤바뀐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수도권과 중부권이 통일인식에서 매우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기존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07년 말 대선에서 수도권과 중부권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크게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이 부각되면서 대선의 학습효과가 통일의식조사에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추이를 보면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호남권(75.6%)이 높은 위치를 유지한 반면, 수도권·중부권이 다시 영남권과 분리되어 호남권-영남권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2007년의 지형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호남권과 영남권(51.9%)의 격차가 23.7%로 크게 벌어지고, 수도권(54.2%) 중부권(58.5%)이 중간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보면, 2008년에는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이른바 정권교체 효과가 작용했으나, 2009년에는 정권교체 효과가 사라지고, 영호남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기존의 지역갈등 형태로의 회귀현상이 나타났다.

통일인식의 지역별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지역간 인식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점점 커지고 있다. 1994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수도권 92.0%, 영남권 91.6%, 호남권 93.3%, 중부권 93.4%로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역간에 의견 차이가 큰 문제로 대두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호남권에서는 비교적 높게 유지된 반면 다른 지역, 특히 영남권에서는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수도권과 중부권, 강원, 제주 등 지역간에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호남권이 김대중 정부의 주요 업적 중 하나인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며¹⁾, 수도권과 중부권도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해 통일과 대화의 필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 호남권은 통일필요성 의식이 높을 뿐 아니라 ‘급진통일’에 대한 선호도 높게 나타난다. 2009년 조사에서 ‘급진통일’에는 호남권이 전체평균(8.6%)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응답률(19.3%)을 보였다. 2007년에는 ‘급진통일’ 의견이 수도권(8.1%), 영남권(8.7%), 중부권(15.3%)에 비해 호남권은 21.0%로 상당히 높았고 2008년에도 17.7%로 비교적 높았다. 호남권에서는 ‘현상유지’를 반대하고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 북한인식

<표-4>에서 보듯이 북한존재인식에서도 2009년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영남권과 수도권이 각각 24.1%, 22.3%로 중부권(17.8%)과 호남권(10.1%)에 비해 높았다. 반면,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은 호남권이 24.4%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강했다. 예년과 비교하면 중부권의 변화가 의외다. 중부권에서 작년에 ‘지원대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14.4%(07년)→24.9%(08년)로 급증했으나 2009년에는 다시 13.6%로 급감하여 예년의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작년에는 정권 교체로 인해 중부권의 의식이 요동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적·일상적 패턴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식에서 전반적 지역변수의 특징은 호남권과 다른 지역이 구분되는 전형적인 지역변수의 특징을 드러냈다.

<표-4> 지역별 북한의 대상인식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 지역						Total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지원대상	빈도	106	16	29	51	4	3	209
	%	17.9%	13.6%	24.4%	15.7%	11.1%	23.1%	17.4%
협력대상	빈도	276	74	64	168	19	9	610
	%	46.5%	62.7%	53.8%	51.9%	52.8%	69.2%	50.7%
경쟁대상	빈도	9	2	7	6	3	0	27
	%	1.5%	1.7%	5.9%	1.9%	8.3%	.0%	2.2%
경계대상	빈도	132	21	12	78	5	0	248
	%	22.3%	17.8%	10.1%	24.1%	13.9%	.0%	20.6%
적대대상	빈도	70	5	7	21	5	1	109
	%	11.8%	4.2%	5.9%	6.5%	13.9%	7.7%	9.1%
Total	빈도	593	118	119	324	36	13	120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53.2,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호남권이 다른 지역보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은 현저하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호남권은 63.9%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은 각각 38.7%, 43.2%, 34.3%로 낮게 응답했다. “최근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호남권의 64.7%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등은 각각 44.5%, 44.1%, 39.2%로 낮게 응답하였다.²⁾ 시기별로 보면 2008년에 중부권과 제주지역에서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이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2007과 비슷한 지역적 패턴으로 복귀하였다.

<표-5> 대화·타협 가능 상대로서의 북한인식과 지역 (2009)

		북한정권 대화·타협 가능 상대 * 지역 (2009)						Total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매우 가능하다	빈도	19	3	8	3	0	2	35
	%	3.2%	2.5%	6.7%	.9%	.0%	15.4%	2.9%
어느 정도 가능하다	빈도	210	48	68	108	17	6	457
	%	35.4%	40.7%	57.1%	33.3%	47.2%	46.2%	38.0%
별로 가능하지 않다	빈도	278	53	35	157	13	2	538
	%	46.9%	44.9%	29.4%	48.5%	36.1%	15.4%	44.7%
전혀 가능하지 않다	빈도	86	14	8	56	6	3	173
	%	14.5%	11.9%	6.7%	17.3%	16.7%	23.1%	14.4%
Total	빈도	593	118	119	324	36	13	120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53.3,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2) ANOVA를 실시한 결과,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각 지역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던컨 사후검증 결과 2009년에 나타난 지역집단간의 성향의 차이는 2008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8년에는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지역간 성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호남권, 중부권·수도권, 영남권의 세 지역에서 다른 성향을 보이는 변화가 있었다.

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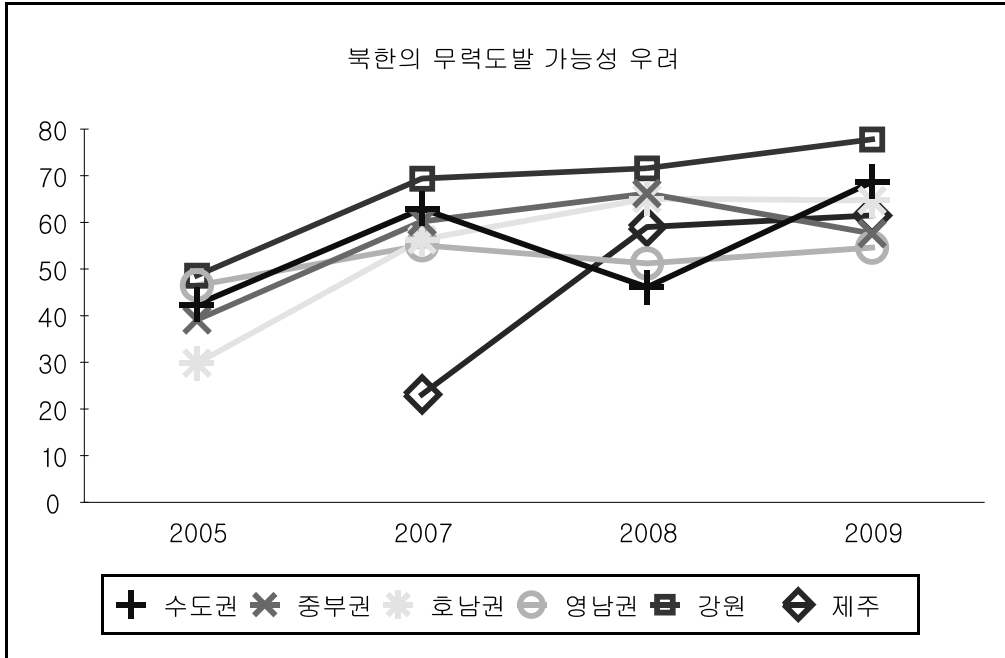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2009)	Between Groups	18.703	5	3.741	5.455	.000
	Within Groups	820.726	1197	.686		
	Total	839.428	1202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지역 별로 매우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른바 ‘정권교체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작용하였다. 2007년에는 강원 69.4%, 수도권 62.9%, 중부권 60.2%, 호남권 56.3%, 영남권 55.1%, 제주 23.1% 등으로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반면, 휴전선과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즉 북한과 근접해 있는 강원·수도권 지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남쪽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2008년에는 조금 달라져 수도권과 영남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북한과 근접해 있는 강원 지역 경우 71.6%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나, 수도권은 46.1%로 가장 낮았으며, 영남권도 51.2%로 낮은 편에 속했다. 중부권과 호남권, 제주는 각각 66.2%, 65.1%, 59.0%로 높은 편이었다. 수도권과 영남권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 비해 중부권과 호남권은 높게 보고 있다. 즉 수도권과 영남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것은 아마도 수도권과 영남권이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지하여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생각으로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2009년에는 영남권과 중부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에 영남권과 중부권은 각각 54.6%, 57.6%로 응답하여, 수도권(68.7%), 호남권(64.7%), 강원(77.8%), 제주(61.5%)에 비해 낮았다. 즉 영남권과 중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안보불안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단지, 수도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68.7%로 예측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56.1%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는 2009년 북한이 감행한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이른바 ‘북한효과’가 작용하여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안보불안의식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6>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우려 (2009)



북한인식과 관련하여 중부권에서 북한사회 인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15~20% 가량 높게 나온 점이 특이하다. 북한방송을 접한 경험도 2009년에 중부권(60.2%)과 강원(69.4%)이 다른 지역(수도권 44.8%, 호남권 42.0%, 영남권 42.4%)에 비해 많았다. 2009년에는 호남권의 북한사회 인지도가 급상승했지만, 중부권이 그 뒤를 이으며 여전히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유지했다. 중부권이 북한방송을 접한 경험이 많고 북한사회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이나 계층 변수는 일정한 방향과 추세로 변화하는 반면, 지역변수는 남북관계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경향이 발견된다.³⁾ 휴전선에서 가까운 지역인 수도권과 강원은 안보불안인식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까지 지속되었으나, 2008년 이후 국내 정치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정권교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북인식에 새

3) 김병로, “북한·통일 관련 세대·계층·지역별 의식,” 『제3차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시범적 연구 - 세대, 일, 그리고 신뢰: 국제비교』(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삼성경제연구소 공동주최 제3차 심포지움, 2006.5.18, 대한상공회의소).

로운 지형이 형성되었으나, 2009년에 다시 2007년의 상황으로 복귀하였다.

(3) 대북정책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역시 지역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⁴⁾ 2009년 대북정책 만족도는 영남권이 41.7%로 가장 높고 수도권 31.3%, 강원 25.0%, 중부권 22.9%, 호남권 19.3%, 제주 15.4% 순이었다. 대북정책 만족도에서는 영남권-수도권-중부·호남권의 세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의 조사와 비교할 때 지역간 차이가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2008년에는 영남권이 49.6%로 매우 높았고, 강원 33.1%, 수도권 29.0%, 중부권 29.8%, 호남권 16.1%로 영남권과 수도권·중부권 및 호남권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었다. 이처럼 크게 벌어진 지역격차가 2009년에 좁혀진 이유는 2009년에 수도권·호남권의 만족도가 높아진 반면, 영남권·중부권의 불만이 상승하여 지역간 차이를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영남권과 중부권의 대북정책 불만이 늘어난 것도 현 정부에 대한 이 지역의 지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권교체 이전인 2007년에는 대북정책 만족도가 호남권에서 43.7%로 가장 높았고, 영남권 31.3%, 수도권 26.7%, 중부권 28.8% 등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의 불만이 매우 높았었다. 2008년에 정권교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영남권의 만족도가 31.3%→49.6%로 급상승한 반면, 호남권의 만족도는 43.7%→16.1%로 급락했다. 2009년에는 영호남간의 이런 충격이 완화되었고, 중부권에서 불만이 높아져 전체적으로는 지역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으나, 작년에 비해서는 지역간 격차가 줄어들었다.

4) ANOVA 표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던컨의 사후검증 결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지역집단간의 성향의 차이를 나타냈다.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현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2009)	Between Groups	25.882	5	5.176	9.725	.000
	Within Groups	637.151	1197	.532		
	Total	663.032	1202			

(4) 주변국 호감도

2009년의 경우, 국가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미국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인식하였다. 미국선호도는 수도권 73.4%, 중부권 63.6%, 호남권 54.2%, 영남권 67.0%, 강원 58.3%, 제주 61.5%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지역 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미국선호도가 73.4%로 가장 높았고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순이었다. 호남지역에서는 미국선호도가 54.2%로 가장 낮은 반면 북한에 대한 선호도는 24.6%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미국선호도가 73.4%로 가장 높은 반면, 북한 선호도는 14.8%로 영남권(14.8%)과 함께 가장 낮았다.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미국선호도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강원지역에서 각각 55.0%, 61.0%, 51.7%, 52.8%인데 비해 호남권에서는 38.7%로 매우 낮았었다. 그에 비해 북한을 가깝게 느끼는 비율은 호남권에서 31.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38.9%로 그 뒤를 잇고, 영남권, 수도권, 중부권에서는 각각 25.4%, 21.7%, 18.6%였다. 2008년에는 특이하게도 중부권에서 미국선호도가 45.0%로 가장 낮고 북한선호도는 32.5%로 가장 높았다. 2008년 중부권에서 이처럼 미국선호도가 낮고 북한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선호도가 2009년에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아 2008년에 특정 사건 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앞에서 중부권이 북한방송 접촉 경험이 많고 북한사회 인지도가 높은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2003~2005년에는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미국선호도가 낮고 북한선호도는 높은 반면, 중부권과 영남권 및 강원지역에서는 미국선호도가 높고 북한선호도는 낮았다.⁵⁾ 2007년 이후에는 미국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반면, 북한호감도가 현저히 낮아져 지역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2007년 이전에 미국선호도가 낮았던 호남권과 수도권에서도 지난 3년 사이 각각 38.7%→50.4%→54.2%, 55.0%→62.9%→73.4%로 상승한 반면, 북한선호도는 두 지역에서 각각 31.9%→21.8%→24.6%, 21.7%→18.7%, 14.8%로 하락했다.

5) 김병로, “북한·통일 관련 세대·계층·지역별 의식,” 『제3차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시범적 연구 - 세대, 일, 그리고 신뢰: 국제비교』(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삼성경제연구소 공동주최 제3차 심포지움, 2006.5.18, 대한상공회의소).

<표-7> 지역별 주변국 선호도 (2009)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 지역 Crosstabulation (2009)

국 가	지역						Total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미국	빈도	435	75	64	217	21	8	820
	%	73.4%	63.6%	54.2%	67.0%	58.3%	61.5%	68.2%
일본	빈도	42	11	11	31	9	0	104
	%	7.1%	9.3%	9.3%	9.6%	25.0%	.0%	8.7%
북한	빈도	88	19	29	48	3	4	191
	%	14.8%	16.1%	24.6%	14.8%	8.3%	30.8%	15.9%
중국	빈도	24	10	12	23	3	1	73
	%	4.0%	8.5%	10.2%	7.1%	8.3%	7.7%	6.1%
러시아	빈도	3	2	2	5	0	0	12
	%	.5%	1.7%	1.7%	1.5%	.0%	.0%	1.0%
Total	빈도	593	118	118	324	36	13	120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47.9, p=.004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표-8> 지역별 주변국 선호도 (2008)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 지역 Crosstabulation (2008)

국 가	지역						Total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미국	빈도	379	54	60	197	28	9	727
	%	62.9%	45.0%	50.4%	60.8%	75.7%	69.2%	59.8%
일본	빈도	54	7	13	39	2	3	118
	%	9.0%	5.8%	10.9%	12.0%	5.4%	23.1%	9.7%
북한	빈도	113	39	26	63	6	0	247
	%	18.7%	32.5%	21.8%	19.4%	16.2%	.0%	20.3%
중국	빈도	39	16	18	20	1	0	94
	%	6.5%	13.3%	15.1%	6.2%	2.7%	.0%	7.7%
러시아	빈도	10	4	2	4	0	0	20
	%	1.7%	3.3%	1.7%	1.2%	.0%	.0%	1.6%
Total	빈도	603	120	119	324	37	13	121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78.4,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결론적으로 2009년의 통일·북한인식은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2008년에 비해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호남권과 제주지역은 좀더 통일 지향적, 대북 우호적 성향으로 변화했고, 반대로 영남권과 강원지역은 보수적, 대북 비판적 성향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수도권과 중부권은 2008년에 보수적, 대북 비판적 성향 쪽으로 기울어 있던 것이 2009년에는 통일지향적, 대북 우호적 성향 쪽으로 이동하여 중립적 성향을 보였다. 수도권의 이동은 ‘북한효과’가 억제하여 조금 더디게 움직인 반면, 중부권은 국내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의 증가함으로써 수도권보다는 빠른 속도로 통일지향, 대북우호적 성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역간 격차는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전반의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으로서 지역간 통일의식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원만한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일부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간 성향 차이가 매우 대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현상을 보이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남남갈등이 초래되어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이념갈등의 지형 변화

(1) 이념지형의 기본구조

2009년 7월말 현재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 24.9%, 중도 48.3%, 보수 26.8%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스스로 밝힌 결과이다. 이러한 구성은 2007년 및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없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진보 25.3%/23.7%, 중도 47.3%/48.4%, 보수 27.3%/27.8%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스스로 밝힌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진보 25%, 보수 27%, 중도 48%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은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적이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진보적 의식이 강하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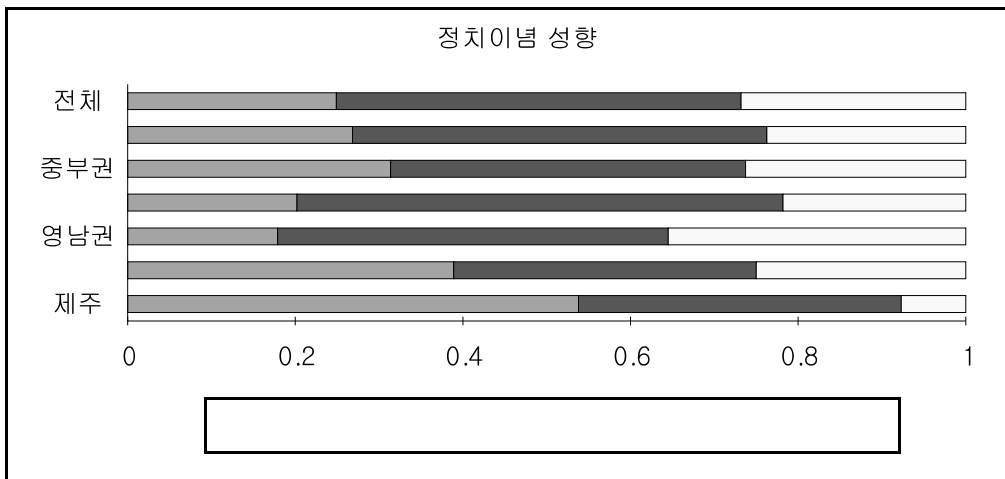
의식이 강하고, 화이트칼라는 자영업이나 블루칼라, 농축산업 종사자보다 진보적 의식이 강하다. 이러한 성향은 2007년과 2008년에도 거의 비슷하였다.

<표-9>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성향 (2009년)

		진보(%)	중도(%)	보수(%)	통계적 유의미 정도
정치적 성향		24.9	48.3	26.8	
연령	20대	29.0	51.8	19.2	chi-square=50.3 p=.000
	30대	27.4	48.6	24.0	
	40대	24.9	49.9	25.2	
	50대이상	17.4	42.5	40.1	
교육	중졸이하	12.2	43.7	44.1	chi-square=44.9 p=.000
	고졸	20.8	51.0	28.2	
	대졸이상	31.2	47.0	21.8	
지역	수도권	26.8	49.4	23.7	chi-square=59.0 p=.000
	중부권	31.4	42.4	26.3	
	호남권	20.2	58.0	21.8	
	영남권	17.9	46.6	35.5	
	강원	38.9	36.1	25.7	
	제주	53.8	38.5	7.7	
직업	농·수·축산업	11.5	50.0	38.5	chi-square=44.5 p=.000
	자영업	24.2	46.1	29.7	
	블루칼라	26.4	46.4	27.2	
	화이트칼라	29.4	49.6	21.0	
	전업주부	18.5	52.0	29.5	
	학생·무직·기타	28.4	47.4	24.2	
소득	200만원미만	23.3	46.2	30.5	chi-square=28.4 p=.028
	200~299	20.9	48.6	30.5	
	200~399	27.3	49.5	23.2	
	400만원이상	27.9	48.3	23.9	
성별	남자	27.8	44.3	27.9	chi-square=19.6 p=.001
	여자	21.9	52.4	25.7	

지역에 따라서도 정치적 성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Chi-Square=58.97,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경향은 해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2007년에는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9.4%로 다른 지역(수도권 23.5%, 중부권 21.2%)에 비해 높았으며, 2008년에는 호남권이 27.6%로 늘었고 영남권은 22.4%를 기록했다. 그러다 2009년에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진보가 각각 20.2%, 17.9%로 최저로 낮아진 반면, 중부권은 31.4%로 급상승하였다. 영남권에서는 진보가 줄어든 대신 보수가 35.5%로 크게 늘어났으며, 호남권에서는 진보의 감소가 중도로 오히려 중도가 58.0%로 대폭 증가하였다. 즉 2009년에는 영남권에서 진보가 보수로 이동하였고, 호남권에서는 진보가 중도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표-10> 지역별 이념성향 (2009)



먼저, 진보와 보수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는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2009년 조사에서는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 즉 빈부격차나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등의 심각성에 대해 진보와 보수간에 의견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 지역갈등(77.1%, 75.0%), 이념갈등(66.9%, 67.3%), 반미정서(53.2%, 57.0%)의 심각성에 대해 진보-보수 간 의견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에는 상황이 달랐다. 2007년에는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진보-보수 간에 뚜렷한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2008년에는 이러한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다. 2007년에는 진보-보수 간에 빈부격차(chi-square=58.1, p=.000), 실업문제(71.4, p=.000), 범죄문제(54.4, p=.000), 지역갈등(50.0, p=.000), 이념갈등(37.6, p=.001), 반미

정서(74.4, $p=.000$) 등을 바라보는 견해가 서로 달랐다. 부동산투기에 있어서만은 심각하다는 의견이 같았다. 2008년에는 빈부격차(22.0, .038), 부동산투기(33.9, .006), 지역갈등(32.6, .008), 이념갈등(28.6, .027)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 진보-보수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실업문제(21.5, .159), 범죄문제(9.3, .9), 반미정서(21.5, .161)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진보-보수가 큰 차이 없이 인정하였다.

이러한 추이로 보면, 2007~2009년 기간에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는 이념 지형이 갈등구조에서 통합구조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에는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진보-보수간에 의견대립이 심각했으나, 2008년에 실업문제, 범죄문제, 반미정서 등이 심각하다는데 진보-보수가 공감했으며, 2009년에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진보-보수의 의견차이가 없어졌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진보-보수 간에 의견차이가 없어져 이념갈등은 약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진보-보수간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⁶⁾ 그만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평가하는 데서는 진보와 보수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5.16과 10월유신 및 4.19(73.2%, 59.1%), 광주민주화운동(71.8%, 53.6%), 6월항쟁(70.2%, 46.4%), 남북정상회담(85.6%, 71.5%),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73.9%, 87.2%)을 평가하는 데서는 진보와 보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4.19, 5.16, 10월유신,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정상회담, 박정희전대통령업적 등의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간에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러한 이념적 차이는 2007년과 2008년에도 동일하였다.

지난 3년간 진보-보수의 정치적 이념은 연령, 성별, 교육, 소득, 직업, 지역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데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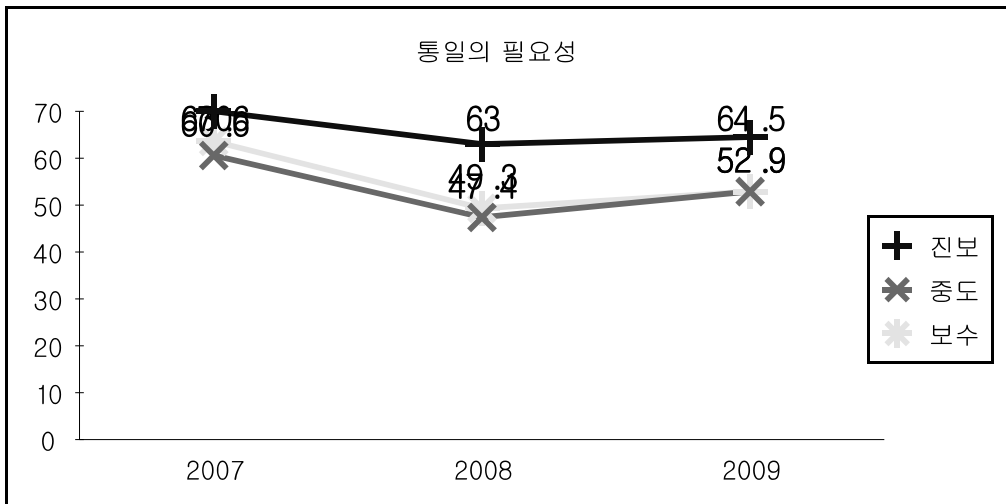
6)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국민들의 평가는 2008년에 다소 낮아졌으나 2009년 들어 높아졌다. 2007~2009년의 변화를 보면, 빈부격차 97.7%→96.6%→98.1%, 부동산투기 96.9%→92.7%→94.1%, 실업문제 96.6%→96.7%→97.0%, 범죄문제 88.3%→85.3%→87.4%, 지역갈등 72.9%→65.3%→75.0%, 이념갈등 60.2%→58.5%→67.6%, 반미정서 51.7%→59.6%→58.2% 등으로 높아졌다.

7) 4.19(chi-square=65.8, $p=.000$), 5.16(60.2, $p=.000$), 10월유신(72.1, $p=.000$), 광주민주화운동(81.4, $p=.000$), 6월항쟁(97.1, $p=.000$), 정상회담(94.3, $p=.000$), 박정희전대통령업적(73.3, $p=.000$) 등으로 진보와 보수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2) 통일인식

그렇다면 이념갈등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북한 인식에서 진보-보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대체로 북한 및 미국 관련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서 진보-보수간에 차이가 있다. 진보는 통일이 필요하다는데 더 찬성을 하고 보수는 통일이 필요없다는 데 더 찬성을 한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2009년에 진보와 보수 성향간의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전체 응답자 중 64.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수적 성향의 경우는 52.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두성향간의 격차는 11.7%이다. 반면 2008년 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 성향간의 격차는 13.7%였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 올해 통일의식에 대한 이념적 대립 현상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11> 정치이념에 따른 통일인식 (2007~2009)



통일에 대한 남한의 기대이익과 개인의 기대이익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⁸⁾ 2008년 조사에서 중도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에서 부정적인 기대감이 크게 증가했던 데 반해 2009년 조사에서는 중도적 성향에서 부정적인 기

8) 통일에 대한 남한의 기대이익과 개인의 기대이익 항목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각각 $\chi^2=62.1, 51.2,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대감이 지난해에 보다 10.2% 크게 줄었고 보수적 성향에서도 3.6%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 간의 격차는 21%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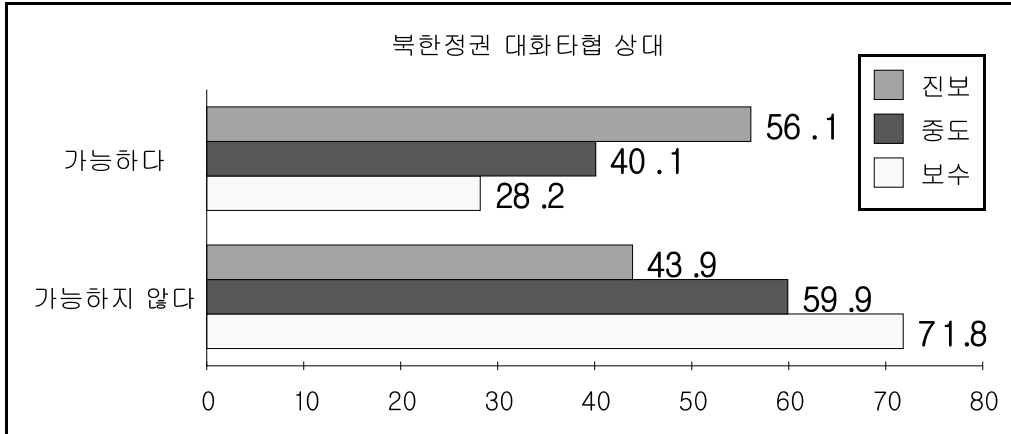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조사결과에서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좁혀졌다는 점은 다행이다. 이번 조사에서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진보적 정치성향의 응답률은 30.8%, 보수적 정치성향의 응답률 19.8%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격차가 11%이다. 이 격차는 2008년 조사에서 두 집단간의 격차가 21%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통일인식에서 정치이념적 대립 현상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3) 북한인식

다음으로 북한인식을 살펴보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진보(60.9%)>중도(49.9%)≒보수(42.7%)이며,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자는 보수(22.9%)≒중도(22.1%)>진보(15.5%)로 중도의 대북인식이 보수화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중도성향의 사람들이 대북인식에서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위치하였으나, 2009년에는 보수쪽의 대북인식에 훨씬 가까워졌다. 즉 중도의 대북인식 보수화가 진행된 것이다.

북한정권을 대화 가능한 상대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뚜렷이 엇갈렸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진보(56.1%)>중도(40.1%)>보수(28.2%),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진보(43.9%)<중도(59.9%)<보수(71.8%)로 이념성향에 따라 의견이 확연하게 달랐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이념갈등이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야기된다는 주장을 가장 신빙성 있게 증명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즉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북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표-12> 정치이념에 따른 대북인식 (2009)



북한비판의식도 보수(60.0%)>중도(55.5%)>진보(48.1%)로 보수일수록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강했다. 진보(28.4%)>중도(21.3%)>보수(14.3%)로 진보적일수록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보았으며, 보수적일수록 북한정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견해에 대해 진보와 보수가 각각 85.5%, 85.1%로 거의 비슷했고,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가 13.5%, 13.0%로 대동소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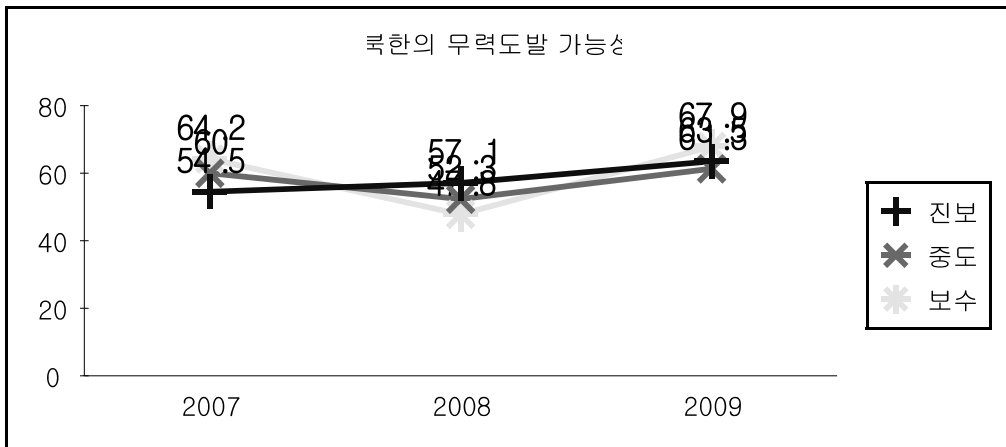
다른 하나의 특징은 작년에 정권교체 이후 요동했던 정치성향에 따른 대북인식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정부가 바뀌고 인도주의 지원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른바 정권교체 효과가 나타났었다. 즉 2007년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했으나, 2008년에는 보수정권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대북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보수는 지원대상 인식을 철회(29.7%→19.7%)했고 진보는 지원대상 인식을 강화(15.8%→20.6%)했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정권변화로 인한 효과가 사라지고 지원대상 인식에서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권교체로 인해 첨예하게 갈등하던 작년과는 달리 대체로 국민들의 의식이 2007년 이전으로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로 인한 효과 이후 일상화되는 이러한 추이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보는 시각에서 뚜렷이 관찰되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보수(67.9%)가 진보(63.5%)에 비해 더 높게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작년과 비교하면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다. 작년에는 보수적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즉 2008년에는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보수(52.2%)>중도(47.7%)>진보(42.9%)로 보수집단이 안보에 대한 안정감을 가졌다. 이는 2008년에 보수가 지지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보수집단이 안보적 측면에서 안도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2007년에는 보수(64.7%)가 오히려 진보(54.5%)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는데, 그 이유는 진보정권이 집권한 시기여서 보수집단이 안보불안을 크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2009년에는 2007년과 비슷한 양상이 발생했다. 즉 보수가 진보보다 안보불안을 더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에 진보-보수의 의식지형이 뒤바뀐 것을 ‘정권교체 효과’였다고 한다면, 올해 진보-보수의 북한인식 지형이 다시 뒤바뀐 것은 의식구조의 일상화 혹은 ‘북한효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북한이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위협적인 무력시위를 감행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적 행동 내지 시위가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북한인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른바 ‘북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는 보수정권이 주는 안보상의 안도감보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수층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심각하게 우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09년의 비판적 대북인식이 높아지고 보수의 안보불안이 커진 것은 정권교체 효과를 상쇄하는 북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3> 정치이념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07~2009)



(4) 대북정책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2009년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를 보면, 진보가 27.1%, 중도 32.2%, 보수 35.2%로 중도와 보수가 진보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2008년에는 만족도가 보수 40.0%, 중도 32.2%, 진보 27.6%로 보수가 중도나 진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올해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중도가 보수쪽으로 기우는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과 비교하면 정권교체로 진보-보수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즉 2007년에는 대북정책 만족도에서 진보가 40.6%로 높은 반면 중도(29.2%)와 보수(22.0%)는 매우 낮았다.

또한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진보는 “늘려야 한다”는데 대해 30.5%가 동의한 반면, 중도는 17.2%, 보수는 11.2%만이 동의했다. 반면 “줄여야 한다”는데 대해 진보는 31.7%만이 동의한 반면, 중도는 39.5%, 보수는 49.5%가 동의하였다. 또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진보는 66.1%가 동의한 반면, 중도는 49.8%, 보수는 35.9%만이 동의했다.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진보는 63.2%가 동의한 반면, 보수는 39.1%만이 동의하여 24.1%의 차이를 나타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진보는 42.1%가 동의한 반면, 보수는 54.3%가 동의하였다.⁹⁾

대북정책이 통일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또 대북사안이 어느 정도 시급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는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회담 등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데 보수보다 더 많은 동의를 하였다. 또 진보는 보수보다 정상회담과 군사적 긴장완화, 미군철수,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북한의 인권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남갈등에서 보여지듯 북한의 인권개선에는 보수가 더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진보의 81.8%는 북한의 인권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 반면 보수는 74.0%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즉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진보는 관심을 덜 갖고 있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이 강한데, 조사결과로 보면 오히려 진보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9) 그러나 “대북빼라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보수(56.2%)>진보(50.2)로 보수가 더 찬성하고 있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진보 56.2%, 보수 60.6%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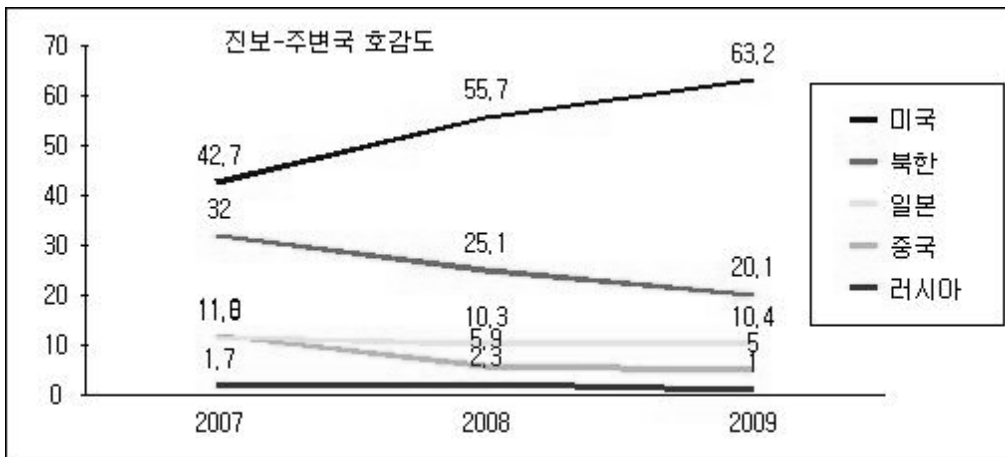
있다. 보수가 진보에 비해 남북문제를 시급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전반적으로 보수가 남북문제에 관심을 덜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터민에 대한 의식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 차이가 있다. 새터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에 진보(43.3%)>중도(36.8%)>보수(28.8%)로 진보-보수 간의 차이가 15%이나 되었다. 새터민 수용정책에 대해서도 진보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51.5%가 찬성했으나 보수는 41.5%만이 찬성하여 10%의 차이가 났고, 수용불가의 입장에 대해서도 진보(6.4%)<보수(14.0%)로 8% 가량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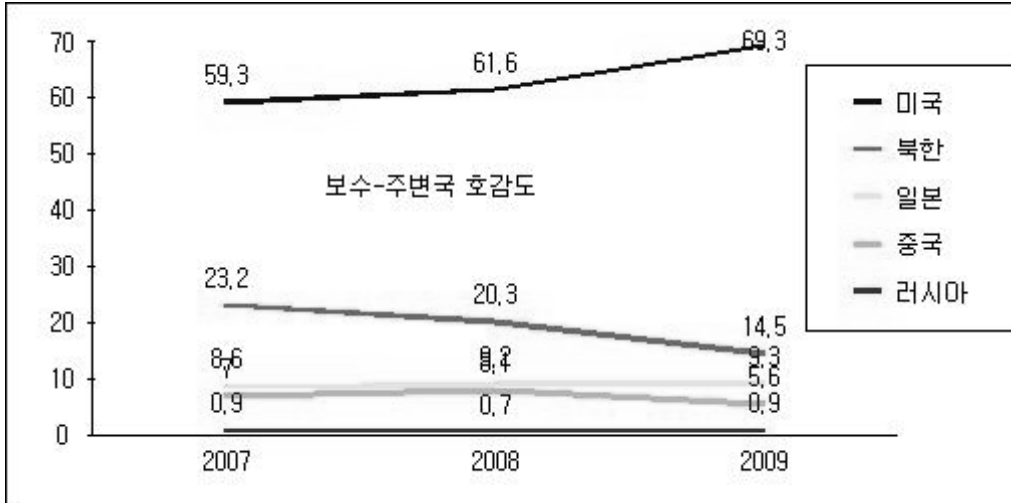
(5) 주변국 호감도

이념적 성향과 주변국 호감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는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를 미국 63.2%, 북한 20.1%로 답한 반면, 보수는 69.3%, 14.5%로 각각 응답하여 이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는 보수보다 주변국들 가운데 일본과 미국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진보는 일본과 미국을 각각 18.4%, 18.3%로 위협적이라고 본 반면, 보수는 15.5%, 9.6%로 각각 응답했다. 한편, 보수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과 중국을 지목했다. 보수는 북한과 중국을 각각 53.5%, 19.2%가 위협적인 국가로 꼽은 반면, 진보는 49.6%, 13.0%만이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즉 진보는 남북관계개선을, 보수는 한미공조를 더 중시했다.

<표-14> 진보의 주변국선호도(2007~09)



<표-15> 보수의 주변국선호도(2007~09)



통일·북한인식의 이념적 차이는 진보와 보수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가 라는 북한인식에서는 진보-중도-보수 간에 아주 뚜렷하고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도의 보수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정권교체로 인한 진보-보수의 뒤바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 우려와 같은 안보불안은 정권교체로 인해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정반대의 인식을 하고 있다. 즉 진보정권이 통치하던 2007년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안보불안을 크게 느낀 반면, 보수로의 정권교체가 단행된 2008년에는 진보가 안보불안을 보수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맺는말

한국사회에서 통일·북한문제와 관련한 지역·이념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호남·(제주)권과 영남·(강원)권, 수도·중부권의 세 집단에 다른 의식이 형성되어 있으며, 호남·(제주)권은 통일지향적, 대북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 영남·(강원)권은 통일·대북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대북정책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2008년 이후 호남권과 영남권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는 정권교체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정권교체 이전에는 호남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영남권이 가장 낮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영남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호남권이 가장 낮게 나왔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2008년에 통일·대북 비판 성향으로 기울었다가 2009년에 통일지향, 대북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2009년은 지난해에 비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졌고 이념갈등은 다소 완화되었다. 통일·북한 의식이 높았던 과거에는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의식의 분화가 발생하면서 지역간 차이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보수-진보의 이념 차이는 2008년 정권교체로 인해 크게 벌어졌으나 2009년에 조금 완화되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완화되었지만 2007년 이전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져 2009년 이후 통일·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념갈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최근 몇 년간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한 지역간 인식의 격차는 커졌지만 과거와 같은 영호남의 갈등양상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호남권이 진보와 정체성을 같이하던 데서부터 상당수의 사람들이 중도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변형시키고 있으며, 중부권이 새로운 진보집단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영남권은 더욱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도 통일·대북 정책에 더 비판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중도의 세 집단 간에 통일·북한 의식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진보는 통일지향적, 대북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 보수는 통일·대북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안보불안의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는 2008년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교체로 인해 역시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즉 정권교체 이전에는 보수가 안보불안을 크게 느낀 반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진보가 안보불안을 심각하게 느끼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보수층의 안보불안이 높아져 정권교체의 효과는 상쇄되었으며, 중도의 보수화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일·북한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사회내 보수-진보간 큰 의식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처럼 격차가 줄어든 것은 정권교체로 격화되었던 이념대립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소 누그러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호남권의 약 8%가 진보에서 중도로 이동하는 등 이념지형의 구조가 일시적으로 변형된데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길으로 보기에 이념갈등이 완화되었으나 심층에 잠복해 있어 남북관계의 환경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지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 남남갈등에서의 세대와 젠더:
2009 통일인식조사를 통해서 본
‘차이와 공감’

박 정 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I. 서론

남남갈등은¹⁾ 일반적으로 남한 사회 내의 갈등 일반이 아니라 ‘남북갈등’에 대칭하는 의미로 구조된 용어로서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 사회의 내부 갈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남남갈등 양상이 다른 내적 갈등과 복합적·중층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남남갈등은 단순한 이념적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회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역사적, 현실적 이해 관계가 맞물린 구성체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남남갈등에 대한 분석에 있어 주로 진보 대 보수의 이념적 갈등으로 과잉 단순화되어 온 측면이 있다.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적 대립 구도로만 남남갈등을 본다면 갈등의 중층적이고도 복합적 요인을 파악하고, 갈등을 긍정적 변화의 계기로 삼기란 어렵다. 남남갈등에 대한 진보·보수의 이분법을 넘어 남남갈등과 연계된 중층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세대와 젠더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갈등은 정보화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문제 등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급격한 정보화는 ‘정보를 사용하는 세대와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 간의 우월과 소외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른바 ‘네트 세대’를 도래는 그들만의 의식과 태도의 블록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들 세대만의 공간에서 형성된 의식과 태도는 문화의 담론을 넘어 정치·사회적으로 파급되어 갔다. 이는 더 이상 위로부터의 하향식 권위주의의 종속을 거부하는 것이며 윗세대와의 ‘권위의 상호 인정’을 요구하기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대 차이’ 보다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를 앞서가는 ‘세대 덮기(generation lap)’에 주목하는 것이다.

젠더 또한 불평등 외에 전통적 질서와 전후 문화에서 생성된 구조와 맞물려 남성과 여성의 의식과 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젠더 체계(gender system)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젠더 행하기(doing gender)’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대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남남갈등에서도 이와 같은 세대간 갈등과 ‘젠더 행하기’는 유효하다. 통일·대북인식의 발현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간, 성별간 통일·대북 인식의 차이는 그 현상 자체의 파악도 필요하지만 현상 뒤에 맞물려 있는 남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1)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 사회의 내부 갈등을 지칭하는 남남갈등은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갈등보다 남남갈등 더 심각”이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기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함인희, 남남갈등 해소와 여성의 기여방안, 분단, 평화, 여성, 통권 6호, 2002, p. 62.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와 젠더를 역사적 구성체인 일종의 ‘아비투스(habitus)’로 본다. 세대와 젠더는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것으로 행위자의 구체적 실천을 매개하는 ‘전략의 발생 원리’인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세대와 젠더에서 나타나는 통일·대북인식의 차이라는 현상 뿐 아니라 그 현상이 세대간, 젠더에서 나타나는 ‘발생 원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차이’를 곧 ‘갈등’으로 인식하지도 않으며, ‘갈등’ 자체를 전통적 갈등의 개념으로만 인식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빨리 사라져야 할 것으로 쉽게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차이’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지므로 이러한 ‘차이’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갈등’과 어떻게 연계되며, 그러한 갈등이 부정적·파괴적이 될 가능성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목적과 가치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모두를 열어두기로 한다. 차이와 더불어 세대와 젠더를 넘어 ‘공감’되는 부분도 함께 중요시 할 것이다. 이는 대북·통일 정책과 현안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일 뿐 만 아니라 요구이자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화상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남갈등을 분석함에 있어 가능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은 조사 결과가 특정 이해집단의 ‘갈등의 사유화’ 내지, ‘편향성의 동원’으로 오용되는 것을 배제하고 현재의 갈등이 통일 미래를 밝혀줄 긍정적 갈등이 되길, 부정적 갈등은 진정 극복되길 바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II. 통일에 대한 ‘젠더’, ‘세대’의 아비투스: 갈등의 구조

피에르 부르디외가 제시한 아비투스의 개념은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획득된 성향,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의 체계나 틀로 정의될 수 있다. 아비투스는 각 행위자의 구체적 실천을 매개하는 일종의 ‘전략 발생 원리’이다. 즉, 행위자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행위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젠더’나 ‘세대’의 아비투스는 세대별, 젠더간에 형성된 역사적 구성 체계로서 그들 간에 형성된 의식, 행위 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응 전략의 발생 원리가 되는 것이다.

2009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젠더와 세대간의 의식과 태도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대응 전략으로서 그 이면의 형성 구조로 다음과 같은 젠더, 세대의 아비투스²⁾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 경제·사회적 불평등

국제 성평등 지수인 성격차 지수(GGI)와 성평등지수(SIGI) 등을 비롯한 각종 성별 격차 지수에서 한국의 불평등 지수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젠더 불평등은 여성이 ‘출산, 결혼, 일’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갈림길을 놓아가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비단 여성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남성과 가족의 문제,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현재에 대한 피로감을 누적시킨다. 앞서 보았던 성별 역할 고정성은 여성의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미래 ‘남북한의 통일상’이나 현재의 대북·통일 정책이라는 거대담론화된 논의 보다는 ‘현재’, ‘눈 앞’의 문제만으로도 버거워진다.

세대간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불평등이 삶의 기본적 터전 마련을 위한 기회의 불평등 문제까지 확대되면서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IT 버블을 겪으면서 당시 부를 축적 했던 한 세대의 일원들은 다음 세대가 정규 노동으로 집을 마련하고 삶의 터전을 구축 해 나갈 기회는 물론 희망까지 잃게 했다거나, 젊어진 40·50대 세대가 20·30대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세대간 불평등과 갈등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대간에도 ‘힘’의 논리가 작동하면서 경제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영역에까지 세대간 불평등과 갈등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에 경쟁은 더욱 심화되면서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대가 아직은 열세인 세대를 억압한다는 우려이기도 하다.

이러한 20·30대 세대는 전쟁이나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적 문제에 대한 체감은 현저히

2) 젠더는 페미니스트 아카데미즘의 역사 속에서 확립된 사회 분석 범주로 자리잡아 왔다. 담론이론과 탈구조주의 내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의식을 경유하며 성이나 정체성이 고정되고 불변하는 어떤 원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받아들인 페미니즘은 여성을 총체화하기보다는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성’이 구성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여기서 젠더의 개념은 ‘여성’ 혹은 ‘남성’을 구성해 내는 힘, 현실 속에 주체들과 의미들을 생산해 내는 어떤 분류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국면 속에 주체를 생산해 내는 분류체계로서의 젠더라는 개념은 문화주의, 구조주의, 담론 이론의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로지르는 것이다. 말하자면 젠더는 일종의 아비투스(habitus)다. 오늘날 젠더는 문화가 대상을 구별하고 이항대립들을 설정하고 위계질서들을 생산하는 방식 및 그 효과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론적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개별 학문의 한계나 국가의 한계는 물론이고 자연/문화 혹은 몸/정신 같은 구분까지 초월하는 하나의 메타 범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은경,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연구: 개념사적 접근,” 페미니즘연구, Vol. 4, No. 1(2004), 55-100, p. 91.

저하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전 세대와는 ‘동시대의 비동시대성’(Mannheim 1952, 283)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외된 세대는 현재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을 여타 세대에 비해 더 많이 공감한다. 여기에서 전후 세대를 한 세대 더 지난 이들에게 현실 문제보다 통일이나 대북 현안, 이산가족, 탈북자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정서적’ 접근이 실현되기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쉽지 않다.

2. 전통문화와 군사문화에서의 젠더 스테레오타이핑(stereotyping)

전후 형성된 군사문화는 성별을 둘러싼 고정된 선입견(gender stereotype)을 만들어 내곤 한다. 국제관계, 정치, 군사영역은 전형적 남성의 영역이자 남성성으로 인식되고 전쟁과 안보의 주체로 인식되나 여성은 비정치적·안보적 영역의 행위자로서 피보호자의 전형성이 구조화된다. 또한 강인함, 정복은 남성성으로 눈물, 약함, 동정은 여성성으로 담론화된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남녀 간 젠더의식이 형성된다. 여성과 남성 이미지에 대한 스테레오타이핑(stereotyping)이 정치·군사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 전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젠더의식을 형성해 간다. 젠더의식이란 남녀의 특성, 역할 그리고 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나 태도를 말한다. 남성이 여성과 달라야 하는 욕구, 여성보다 우월해야 하는 욕구, 독립적이고 자기의존적이어야 하는 욕구, 타인보다 더 힘이 세어야 하는 욕구를 남성 젠더의식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보고 있다.³⁾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남북 대립의 극복 과정에서 반공교육이 강화되었고, 학교 조직의 병영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우리 사회에 구조화된 국가 민족주의와 가부장제는 해위 주체자로서의 남성과 보조적, 피동적 역할의 여성을 구체화 했다.

학교교육을 통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희생이 여성에게만 강요된 것은 아니었다. 학교와 사회의 군사화된 과정을 통해 유포된 폭력과 가부장적 의무는 남성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젠더 체계 내에서 형성된 젠더 의식과 스테레오타이핑은 대북인식과 통일인식과 무관 할 수 없다.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화된 논의에 있어 남성은 앞서야 한다는 부담과 여성은 뒤에서 있는 피동적 행위자로 머물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3) 이수연, “남성의 균형적 삶을 위한 젠더의식 개선방안,” 젠더리뷰, p. 76.

3. Net 세대, 그들만의 블록화와 세대 뒤틀기(generation lap)

최근 사회문화적 세대 구분법으로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로 나타나는 사이버세대, 네티세대인 20-30대와 그 이후 세대의 구분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역사에서 신세대와 구세대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개항 이후, 즉 서구 문명과의 접촉이 시작된 이후이며 그 후 근대화, 산업화와 진행되면서 신·구세대간 갈등이 커져갔다.

이제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세대간 정보 격차가 야기한 사회문화적 갈등 외에도 이른바, Net 세대의 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영향력까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스콧(1999)이 언급한 세대차이(generation gap)에서 기성 세대의 권위를 앞질러 주도하기까지 하는 세대뒤틀기(generation lap)의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주로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고 그들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Net 세대는 2002년 월드컵과 ‘촛불’이라는 광장 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일정부분 주도해 나가기 까지 한다는 것이다. 네티 세대 문화의 특징을 설명한 탭스콧(1998)은 강한 독립성과 적극성(strong independence), 포용성(social inclusion), 자유로운 표현력(free expression and strong view) 등을 들고 있다. 그들의 자유로운 표현력과 적극성, 독립적 성향은 이전 세대의 ‘일방적’ 권위보다는 상호 소통 가운데 이뤄지는 ‘쌍방향적’ 권위를 요구하고 있다.

통일·대북 인식에서도 이들은 이전 세대의 의식과 태도의 일방적 전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의식과 태도의 공감대를 형성 해 나가며, ‘웹’의 공론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III. 남남갈등에서의 세대와 젠더: 2009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차이와 공감’

1. 성별, 세대별 인식 분석 과정

본 연구의 자료는 window용 SPSS/PC+ ver.12.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통일의식·대북인식을 알아보기위해서 집단내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성별, 세대별로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젠더간 의견의 차이 정도는 독립표본 T검정, 세대 간의 의견 차이 정도는 F검정(ANOVA)

을 통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해 내고, 이에 따라 각 집단간 차이와 공감 문항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전체 116문항 중 세대별로 견해 차를 보이는 문항은 54문항이었고 공감대가 형성된 문항은 56개 문항이었다. 전반적으로 세대별 의견 차가 성별 의견 차에 비해 더 많은 문항에서 나타났다. 성별 견해차는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나는 문항 수에 비해 현저히 적었는데, 성별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39 문항이었고, 공감대를 형성한 문항은 77문항이었다.

성별 차이에 비해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인식의 하위문항에서였다.

세대와 성별간 모두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북한에 대한 인식, 해방 이후 한국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었다. 반면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문항은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서 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세대와 성별 모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항이 차이를 보이는 문항 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분	문항 수	세대		젠더	
		차이	공감	차이	공감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14	9	5	3	11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10	0	10	3	7
북한에 대한 인식	23	10	13	12	11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15	6	9	0	15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생각	10	3	7	3	7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20	10	4	4	16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14	9	5	10	4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10	7	3	4	6
합 계	116	54	56	39	77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AANOVA와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유의도 항목

구 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 (ANOVA)	젠더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독립표본 T검정)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14문항)	○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000	.003	
	○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000	.005	
	○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003	.034	
	○ 대북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018	-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035	-
		㉢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033	-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009	-
	○ 대북 사안별 시급성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044	-
		㉥ 북한의 개방과 개혁	-	-
		㉦ 군사적 긴장 해소	-	-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047	-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	-
		㉩ 북한의 인권 개선	-	-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	-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10문항)	○ 통일의 이익 정도	㉠ 남한	-	.001
		㉡ 자기 자신	-	.001
	○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	㉢ 빈부격차	-	-
		㉣ 부동산투기	-	-
		㉤ 실업문제	-	-
		㉥ 범죄문제	-	-
		㉦ 지역갈등	-	.027
		㉧ 이념갈등	-	-
	○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	-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구 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 (ANOVA)	젠더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독립표본 T검정)	
북한에 대한 인식 (23문항)	○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	.041	
	○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는 정도	-	.050	
	○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	.003	-	
	○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	-	
	○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000	.000	
	○ 북한 사회 인지도	㉠ 선군정치	.001	.000
		㉡ 주체사상	.000	.000
		㉢ 천리마운동	.000	.000
		㉣ 고난의 행군	.000	.000
		㉤ 장마당	.000	.000
		㉥ 아리랑 축전	.000	.000
	○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006	-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	.038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008	-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	-
	○ 사회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인식	㉪ 선거방식	-	-
		㉫ 생활수준	-	-
		㉬ 법률제도	-	-
		㉭ 언어사용	-	-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	-
		㉯ 가치관	-	-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	.000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	.007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15문항)	○ 현재 대북 지원의 실효성과 적절성(줄여야 할 시 그 이유)	-	-	
	○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	-	
	○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도	.000	-	
	○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	-	
	○ 지난 정부의 남북한 합의사항 계승에 대한 동의 정도	-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구 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 (ANOVA)	젠더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독립표본 T검정)	
	○ 주요 쟁점 관련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 되어야	-	-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022	-
		㉢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	-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	-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	-
	○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	㉠ 북한의 책임	.000	-
		㉡ 한국의 책임	.041	-
		㉢ 미국의 책임	.018	-
		㉣ 중국의 책임	-	-
		㉤ 일본의 책임	.001	p-
탈북자 (새터민)에 대한 생각 (10문항)	○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	-	
	○ 탈북자 (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네 이웃	-	-
		㉡ 직장 동료	-	.037
		㉢ 사업 동업자	-	.003
		㉣ 결혼상대자	.003	.000
	○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027	-	
	○ 탈북자 (새터민) 관련 인식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031	-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	-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	-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	-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20문항)	○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	.000	-	
	○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000	-	
	○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구 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 (ANOVA)	젠더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독립표본 T검정)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20문항)	○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 미국	-	-
		㉡ 일본	-	-
		㉢ 중국	-	-
		㉣ 러시아	.034	-
	○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 미국	.000	-
		㉡ 일본	-	.014
		㉢ 중국	-	-
		㉣ 러시아	-	-
	○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미국	.001	.035
		㉡ 일본	-	.010
		㉢ 중국	-	.002
		㉣ 러시아	-	-
	○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 미국	.007	-
		㉡ 일본	.006	-
㉢ 중국		.043	-	
㉣ 러시아		.033	-	
○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		.034	-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 한 인식 (14문항)	○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4.19	.000	.000
		㉡ 5.16	.000	.000
		㉢ 10월유신	.000	.006
		㉣ 광주민주화운동	.001	.000
		㉤ 6월 항쟁(1987년)	-	.000
		㉥ 남북 정상회담	-	.002
	○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		.000	.020
	○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	㉠ 빈부격차	.004	-
		㉡ 부동산투기	-	-
		㉢ 실업문제	.004	.005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구 분	내 용		세대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 (ANOVA)	젠더의 통계학적 차이 유의도 (독립표본 T검정)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 한 인식 (14문항)		㉠ 범죄문제	-	.000
		㉡ 지역갈등	-	-
		㉢ 이념갈등	.013	-
		㉣ 반미정서	.018	.035
기타 정치· 사회· 경제적 현실 인식 (10문항)	○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006	.000
	○ 정치적 성향		.000	-
	○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		-	.005
	○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001	-
	○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000	.000
		㉡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	.000	-
		㉢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	-	.006
	○ 촛불 시위의 영향 평가		.000	-
	○ 남한 사회의 민주성 평가		-	-
○ 한반도 전쟁 가능성		.001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2. ANOVA,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개요

가. 세대 ANOVA 결과 개요

통일에 대한 견해, 대북정책별 통일도움 정도, 북한사회 인지도,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등에서의 차이가 두드러 졌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하위 문항 총 14문항 중 4문항을 제외한 10문항에서 세대간 차이가 나타나 다른 어떤 문항보다도 세대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분야였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에서 세대간 견해 차이가 특히 두드러지며, 대북정책별 통일도움정도에서도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즉,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학술·예술·체육·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 문화교류, 금강산관광·개성 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등이 통일에 주는 도움 정도에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북사안별 시급성과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등에서 세대간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는 세대를 초월하여 의견에 일치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하위 문항 총 23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난 반면, 13개 문항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세대간 의견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카테고리 문항 별로 세대간 공감과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북한 사회 인지도에서는 뚜렷한 세대간 격차를 읽을 수 있다.

대북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5문항 중 세대간 차이를 드러내는 문항은 6문항으로 특히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주변국(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책임 정도에 대해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북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5문항 중 세대간 공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문항은 9개 문항이었다.

탈북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9문항 중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3문항이었다. 탈북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9문항 중 6문항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인 탈북자와 ‘㉠ 동네 이웃, ㉡ 직장 동료, ㉢ 사업 동업자’로 관계 맺기에 대한 견해 탈북자 관련 인식으로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와 관련한 견해에서 세대간 비교적 일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다.

한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 인식을 묻는 총 20개 문항 중 통계학적으로 세대간 유의미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10개 문항으로 특히 ‘미국’에 대한 견해에서 세대간 견해 차를 읽을 수 있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하위 문항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관련 하위 문항 총 14개 중 5개를 제외한 9개 문항에서 세대간 의견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서도 견해차가 많이 나타난 것과 같은 경향이 다. 남녀 성별간에는 4문항을 제외한 10개 문항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났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총 14문항 중 5개 문항은 세대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관련 문항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지는 편이었다. 총 10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한 7문항에서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남녀 성별 의견 차이가 4문항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세대간 차이가 젠더 차이 보다 더 많은 문항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 젠더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개요

성별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보면 통일관련 인식에서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시기,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영역에서는 통일이 남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지역 갈등),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총 23개 문항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11개 문항으로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는 정도,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북한사회인지도(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 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 축전), 탈북자와 만나본 경험,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었다.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총 15문항중에서 성별 견해차를 보인 문항은 없었다. 탈북자에 대한 생각 영역의 하위 문항 총 10문항 중에서 성별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3개 문항으로 탈북자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를 묻는 것에서 었다. 직장동료, 사업 동업자, 결혼 상대자로서 탈북자와 관계 맺기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영역 하위 문항 총 20문항에서 4문항에서 견해 차가 있었는데,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에서 었는데,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견해에서 남녀 차이를 보였다.

‘해방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영역의 하위 문항 14문항 중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10문항으로 성별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다.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에서는 성별로 평가의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4/19, 5.16, 10월유신,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였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에서도 남녀 견해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에서 실업문제, 범죄문제, 반미정서에 대한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인식 영역 총 10문항 중 성별 견해의 정도 차를 보이는 문항은 4문항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 정부정체제 향의하는 공개 집회에 대한 견해,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 였다.

다. 세대와 젠더간 공통적 차이 문항

영역별 하위 문항에 따라 세대와 성별로 모두 통계학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영역에서는 총 3문항에서 세대별, 성별 차이가 모두 나타나고 있었는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가능시기에서 였다.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서는 세대와 성별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 총 23문항 중 7문항에서 세대별, 성별로 모두 견해의 정도 차이를 보였다. 즉,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북한 사회 인지도(선군사상,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 축전) 등에서 였다.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에서도 세대별, 성별로 모두 차이를 드러내는 견해는 없었다. 탈북자에 대한 생각 관련 하위 문항에서는 총 10문항 중 한 개 문항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결혼상대자로서 탈북자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견해에서 세대간, 성별간 모두 견해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 인식 영역의 하위 문항 총 20개 문항 중에서도 세대간, 성별간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한 개 문항으로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미국’에 대한 견해에서 세대, 성별 모두에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3. 세대 간 의견의 차이와 공감 분석

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1) 차이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하위 문항 총 14문항 중 4문항을 제외한 10문항에서 세대간 차이가 나타나 다른 어떤 문항보다도 세대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분야였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에서 세대간 견해 차이가 특히 두드러지며, 대북정책별 통일도움정도에서도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즉,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학술·예술·체육·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금강산관광·개성 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등이 통일에 주는 도움 정도에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북사안별 시급성과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등에서 세대간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에서는 19-29세 응답자들의 28.5%가 공감하고 있어 여타 세대가 이에 대해 20% 미만의 응답률을 보인 것과는 구분된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 세대가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데에 대다수가 동감하면서도 19-29세는 ‘현재대로가 좋다’는 유보적 입장(22.8%)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통일에 대한 유보적 태도 또는 무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40대의 경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거나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에 50대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가 분포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시급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40대의 경우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데에 다른 연령대 보다 가장 많은 응답 분포를 보여 통일에 신중한 입장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연령대라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50대 이상의 경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데에 다른 어느 연령대 보다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전 연령대에 걸쳐 20년 이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특징을 보였다. 그럼에도 세대간 차이를 읽을 수 있었는데 50대

이상은 20년 이내와 10년 이내라는 응답의 합이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도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빠른 시기에 통일을 바라는 염원, 기대와 더불어 포기도 함께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19-29세의 경우 20년 이내와 30년 이상에 가장 많은 응답 분포를 보였으며, 30대는 마찬가지로 20년 이내와 더불어 30년 이내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되었고, 40대는 20년 이내라는 응답을 중심으로 10년이내라는 응답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은 응답률을 보여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 가장 희망적 기대를 보이는 연령대라 할 수 있다.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를 묻기 위한 질문에서 ㉠ 쌀·비료·의약품 지원,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등 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세대간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 4가지 사안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대다수의 응답자가 공감하면서도 세대별로 공감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두드러진 특징은 40대의 경우, ‘㉠ 쌀·비료·의약품 지원,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한다는 점이다. 30대의 경우에는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공감하고 있었다.

대북 사안별 시급성과 관련된 하위 문항에서 세대간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은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에 대한 의견이었다.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의 필요성은 전 연령대에서 대다수가 공감하는 바이나 40대가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19-2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필요성을 가장 적게 인식하고 있었다.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연령대에서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19-29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반해 50대 이상은 미군 철수에 대해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회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2) 공감

대북 사안 중 ㉦ 북한의 개방과 개혁, ㉧ 군사적 긴장 해소,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 북한의 인권 개선 등에 대해서는 세대 간 별다른 이견 없이 대다수가 통일을 위해 시급한 사안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세대를 초월해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이 남북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 순이었다. 통계학적으로는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0대와 50대의 경우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다른 이유에 비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1) 공감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는 세대를 초월하여 의견에 일치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관련 하위 문항 총 10문항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50대 이상을 제외 하고 다른 연령대 모두에서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데에 과반수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다. 50대의 경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이익이라는 응답에 비해 5%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통일이 자기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대다수의 응답자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어 세대를 막론하고 통일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 빈부격차, ㉡ 부동산투기, ㉢ 실업문제, ㉣ 범죄문제, ㉤ 지역갈등, ㉥ 이념갈등 등이 통일 후 개선되기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데에 세대를 초월해 동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도 세대를 막론하고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데에 과반수 내외의 응답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했으며, 다음으로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의 순으로 응답률 분포가 나타났다.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해 40대를 제외한 전 세대가 ‘남한의 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견해가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40대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를 앞서고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세대와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 못했다.

다. 북한에 대한 인식

(1) 차이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하위 문항 총 23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난 반면, 13개 문항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세대간 의견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카테고리 문항 별로 세대간 공감과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북한 사회 인지도에서는 뚜렷한 세대간 격차를 읽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해 세대를 초월해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었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는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고, 50대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졌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전세대가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것 보다 있다는 견해를 보였는데, 특히 19-29세의 연령대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다. 반면 50대 이상이 40대와 근소한 차이지만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게 드러냈다.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 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 축전’ 등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응답에서 전반적으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 사회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19-2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 대조를 이루었다. 북한 관련 경험(㉠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에서는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한 경험은 나이가 많을 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은 50대 이상이 가장 적은 반면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감

우선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세대를 초월해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이 과반수 내외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세대별로 북한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읽을 수 있었다. 50대 이상의 경우 북한이 협력대상이기도 하지만 경계대상이라는 점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19-29세, 30대의 경우에도 경계대상으로서 북한을 인식하는 수준이 협력대상으로 보는 것 외에 가장 많은 응답 분포를 보였으나, 40대의 경우 북한을 지원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경계대상 보다 근소한 차이지만 더 많았다.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 세대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능하다는 응답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50대 이상의 경우 특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40대는 대화의 가능성을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른 세대가 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반면, 40대에서는 변하고 있다는 응답(50.3%)과 변하지 않고 있다(49.7%)는 응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오히려 근소한 차이로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앞서고 있었다.

라.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1) 차이

대북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5문항 중 세대간 차이를 드러내는 문항은 6문항으로 특히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주변국(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책임 정도에 대해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우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에서 전세대에 걸쳐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그럼에도 세대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대가 많을수록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찬성 견해가 반대 견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세대별로 찬·반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주변국별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정도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으나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세대간에 책임 정도에 대해 이견을 보였는데,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한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30대와 50대가 비슷한 수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한국의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나이가 많을수록 동감하고 있었다. 미국의 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30대와 40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5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국의 책임이 적다는 인식이었다.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는 40대가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적게 책임을 묻고 있었다.

(2) 공감

대북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5문항 중 세대간 공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문항은 9개 문항이었다.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세대를 막론하고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앞서고 있었다.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주로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는 전세대에 걸쳐 과반수 이상이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는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 견해가 잘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세대에 걸쳐 과반수 내외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

주요 쟁점 관련(㉠)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 대북 뼈라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에서는 전세대에 걸쳐 찬성이 과반수 내외로 반대 견해에 비해 주도적이었다.

마.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생각

(1) 차이

탈북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9문항 중 통계학적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3문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탈북자와 ‘(㉠) 결혼상대자’로서 관계 맺기에 대한 견해와 탈북자 수용에 관한 견해, 탈북자에 대한 인식으로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서 세대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결혼상대자로서 탈북자와 관계 맺기에 대한 세대별 견해를 보면 결혼상대자로 꺼린다는 응답이 19-29세, 30대, 50대 이상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 40대의 경우 40.2%로 다른 연령대 대비 꺼린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28.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수용적 태도를 드러낸다 하겠다.

40대의 이러한 수용적 태도는 탈북자에 대한 호감도와 연계되어 나타난다. 탈북자에 대한 인식으로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60.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19-29세 57.4%, 30대 53%, 50대 이상 47.8%)

(2) 공감

탈북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9문항 중 6문항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인 탈북자와 '㉠ 동네 이웃, ㉡ 직장 동료, ㉢ 사업 동업자'로 관계 맺기에 대한 견해 탈북자 관련 인식으로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와 관련한 견해에서 세대간 비교적 일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다.

탈북자와 '㉠ 동네 이웃, ㉡ 직장 동료, ㉢ 사업 동업자'로 관계 맺기에 대해 동네 이웃·직장동료로서는 꺼리기 보다 '그저 그렇다'거나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를 보였고, 사업 동업자로서는 꺼린다는 응답이 전세대에 걸쳐 40% 내외를 차지해 다른 유형의 관계에 비해 사업 동업자로서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에는 전 연령대의 과반수 내외 선에서 동의하는 입장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는 데에는 전 연령대에서 동의하지 않고(전체 응답률의 76.3%) 있었으며,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입장(68.4%)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31.6%)에 비해 뚜렷한 우세를 보였다.

바.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1) 차이

한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 인식을 묻는 총 20개 문항 중 통계학적으로 세대간 유의미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10개 문항으로 특히 ‘미국’에 대한 견해에서 세대간 견해 차를 읽을 수 있었다.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는 전세대에 걸쳐 미국이라는 견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도 50대 이상이 79.3%의 응답률로 19-29세에서 60.4%에 그친 것과 차이를 보였다. 19-29세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국에 대한 친근감 인식이 낮은 반면 북한에 대한 친근감(18.5%)과 일본(12.2%)에 대한 친근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50대 이상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친근감을 느끼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10%)이나 일본(5.7%)에 대해서 가장 낮은 친밀감을 드러냈다.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서도 이상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대에 걸쳐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보면서도 그 정도에는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50대 이상이 북한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응답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위협적으로 느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19-29세의 경우 북한과 더불어 미국을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끼는 응답자(20.1%)가 많았으며, 40대는 북한과 더불어 일본을 위협적 국가로 지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세대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 대한 견해 차가 다른 주변국가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반도 전쟁 시 태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남북한 통일에 협조 필요 정도 등에서 미국의 예상 태도에 세대간 의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미국에 가장 호의적 태도와 우방으로서 믿음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19-29세의 경우가 50대 이상 연령대와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연령대가 낮아질 수록 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견해가 크게 나타났으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견해에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동감하고 있었으며(78.7%), 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데에는 50대 이상 응답자의 19.9%만이 동감한 반면, 다른 연령대는 모두 35% 내외 수준에서 동의하고 있어 차이를 드러냈다.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가 필요한 정도에서는 미국과 더불어 일본, 중국, 러시아 각 국에 대한 세대간 견해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 세대에서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체로 공감의 차이가 이루어지면서도 그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협조 필요성에 가장 동감하는 연령대가 40대인 것으로 나타난 점이 가장 두드러진 양상이라 하겠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세대간 차이를 읽을 수 있었다. 전 연령대의 주요 답변은 ‘남북관계 개선(39%)’과 ‘똑같이 중요(41.8%)’하다는 견해였는데, 30·4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19-29세, 50대 이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우선 보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더 많은 응답률을 보여 30-40대와 차이를 드러냈다.

관계 인식에서는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등에 있어서 세대간 의견의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의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을 뿐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에서도 미국에 대한 견해는 세대간 격차가 두드러진다.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희망 정도와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에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의견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에서 미국 외에도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견해에서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공감

한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 인식을 묻는 총 20개 문항 중 통계학적으로 세대간 유의미한 응답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문항은 10개로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한국과 주변 주요국 관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 한반도 전쟁 시 일본, 중국, 러시아의 태도,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희망 정도 등에서 세대간 비교적 일치된 의견을 드러냈다.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은 전 세대에 걸쳐 주로 북한팀을 지목하고 있었으며, 미국·일본·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전연령대가 미국은 주로 협력 대상(73.6%), 일본과 중국은 경쟁대상(일본 49.3%, 중국 41.9%)으로 보고 있었다.

한반도 전쟁 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예상되는 태도에 대해 3국 모두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이 ‘한국을 도울 것이다’ 또는 ‘북한을 도울 것이다’ 등의 답변에 비해

집중되는 공통적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남북한 통일을 희망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세대간 비교적 일치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통일을 원한다는 답변에 비해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1) 차이

해방 이후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하위 문항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관련 하위 문항 총 14개 중 5개를 제외한 9개 문항에서 세대간 의견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녀 성별에 따라서도 견해차가 많이 나타난 것과 같은 경향이다. 남녀 성별간에는 4문항을 제외한 10개 문항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났었다.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4.19, 5.16, 10월 유신,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세대간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6월 항쟁(1987년)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에는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10월 유신을 제외하고 4.19, 5.16,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10월 유신의 경우 50대 이상이 긍정적(37.5%)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40대의 과반수 가까이(49.1%)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과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19-29세의 경우 해방 이후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응답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졌다. 이는 19-29세 연령대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의 결여 내지는 평가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평가가 79.8%로 부정적 평가(13.8%)에 비해 압도적이거나 연령대별로 긍정적 평가의 정도치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많아 질수록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50대 이상의 90.5%(부정적 평가 7.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19-29세의 경우 62.1%가 긍정적 평가(부정적 평가 24.8%)를 하는데 그쳤다.

주요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선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응답자의 대부분(98.1%)이 공감하고 있었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심각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97%)가 심각하다는

반응이었는데 이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응답자들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념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67.6%가 심각하다는 의견이었는데, 50대 이상은 74.7%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심각성에 공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19-29세는 63.1%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반미 정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58.2%가 갖고 있었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50대 이상이 심각성을 가장 많이 우려(66.7%)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30대(53%)와 19-29세(56.9%)가 심각성을 낮게 평가했다.

(2) 공감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총 14문항 중 5개 문항은 세대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평가 중 6월항쟁(1987년)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주요 사회문제 중 부동산투기, 범죄문제, 지역 갈등 등에 대한 평가에서 었다. 6월항쟁(1987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2%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4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긍정적(68.6%)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평가(77.1%)가 이루어졌다. 주요 사회문제로 부동산투기, 범죄문제, 지역 갈등에 대해서는 전세대에 걸쳐 심각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4.1%가 심각하다는 견해로 다른 사회문제 보다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1) 차이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관련 문항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지는 편이었다. 총 10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한 7문항에서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남녀 성별 의견 차이가 4문항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세대간 차이가 젠더 차이 보다 더 많은 문항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정치적 성향,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으로 ㉠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 촛불 시위의 영향 평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는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가 42.7%,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가 57.3%로 관심이 있다는 응답에 비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세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관심도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드러냈다. 정치 성향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고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에서도 세대별 정도의 차이를 읽을 수 있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73.9%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비해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랑스럽다는 응답률이 67.1%로 가장 낮았으며,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도 3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촛불 시위의 영향 평가 관련 문항인 “촛불 시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 정도를 물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촛불 시위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55.2%)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세대별로 보면 40대의 61.1%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외에 19-29세, 30대가 각각 긍정적 평가율이 59.4%, 59.3%로 과반수 이상을 훌쩍 넘었는데 반해 50대 이상은 긍정적 평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은 39.4%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도 34.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어서 ‘없다’는 응답을 약간 앞서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19-29세의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2) 공감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관련 문항에서 세대간에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항은 관련 하위문항 총 10문항 중에서 3문항에 그쳤다.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를 보면 전 세대에 걸쳐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83.9%) 또한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하위 문항으로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데에 세대를 막론하고 동의(83.3%)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남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점부터 10점 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결과 평균이 5.69로 민주와 비민주 중간에서 민주적이라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4. 젠더간 의견의 차이와 공감 분석

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의식

(1) 차이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의식의 하위 문항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60.2%)이 여성(51.4%)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었으며, 통일에 대한 견해에서 남녀 모두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남 68.7%, 여 67.9%)면서도 현재대호가 좋다는 데에 여성이 17.4%, 남성이 13.9%로 여성이 통일 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다는 유보적 의견을 드러내었다. 또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데에는 남성 10.7%, 여성 6.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데에는 남성 6.7%, 여성 8.4%로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통일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남녀 간 의견 차이가 나타났는데,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거의 비슷한 의견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22.3%, 남성이 17.4%로 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5% 가량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통일 시기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먼 훗날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2) 공감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의식의 하위 문항에서 대북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대북 사안별 시급성,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서는 성별을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성별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서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모두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대북 사안별 시급성의 하위 문항에 대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 북한의 개방과 개혁, ㉦ 군사적 긴장 해소,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 북한의 인권 개선) 남녀 모두 시급하다는 인식이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도 남녀간 의견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즉, 남녀 모두 ‘같은 민족이니까’(1순위)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2순

위)-‘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3순위)-‘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4순위)-‘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5순위) 등의 순으로 통일의 이유에 대해 응답했다.

나. 통일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1) 차이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서는 성별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3문항이 있었는데, 이는 세대 간에는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하위 문항 모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다. 통일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의 하위 문항에서 성별 간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총 3문항으로 통일이 ㉠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것, 통일이 ㉡ 자기 자신에 이익이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에 대해 지역 갈등에서 개선 될 것으로 예측하는 정도의 차이 이다.

우선 통일이 ㉠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남 57.0%, 여 49.3%) ㉡ 자기 자신에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해 남녀 모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이었으나(남 72.2%, 여 80.2%)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8%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남 27.8%, 여 19.8%)

다음으로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에 대해 ‘㉢ 지역갈등’이 통일 전에 비해 통일 후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남 58.1%, 여 64.6%)

(2) 공감

통일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서는 관련 하위문항 총 10문항 중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남녀간 견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에서는 ㉠ 빈부격차, ㉡ 부동산투기, ㉢ 실업문제, ㉣ 범죄문제, ㉤ 이념갈등 등에 대해 남녀 모두 별다른 차이 없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데에 남녀 모두 과반수의 응답률로 동감하고 있었다. 그 외에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등에도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해 남녀 모두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남 45.1%, 여 42.1%)는 데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남 38.7%, 여 39.5%)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었다.

다. 북한에 대한 인식

(1) 차이

북한에 대한 인식의 하위 문항인 총 23문항 중 14문항이 남녀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9문항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는 정도, 북한 사회 인지도(㉠ 선군정치, ㉡ 주체사상, ㉢ 천리마운동, ㉣ 고난의 행군, ㉤ 장마당, ㉥ 아리랑 축전), 북한 관련 경험에서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에서 남녀간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에도 남녀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인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대 대상, 경계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여성은 상대적으로 북한을 지원대상,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여 앞선 질문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을 지원대상이자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향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북한 사회 인지도(㉠ 선군정치, ㉡ 주체사상, ㉢ 천리마운동, ㉣ 고난의 행군, ㉤ 장마당, ㉥ 아리랑 축전)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각 하위문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 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 축전 등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북한 관련 경험에서는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등에서는 남녀의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공감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사회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인식(㉣ 선거방식, ㉤ 생활수준, ㉥ 법률제도, ㉦ 언어사용,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 가치관)에서는 남녀 모두 비슷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다.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해 남녀 모두 북한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에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의 응답률(남 54.4%, 여 55.3%)로 동의하여 변하고 있다는 응답(남 45.6%, 44.7%)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북한 관련 경험과 관련해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남녀 공히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회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인식(㉣ 선거방식, ㉤ 생활수준, ㉥ 법률제도, ㉦ 가치관) 등에 대해서 남녀 모두 남북한 간 격차가 큰 상황임을 우려하고 있었다.

라.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대북정책에 관한 생각을 묻는 총 15 문항에 대해 남녀 모두 별다른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 동감하고 있었으며(남 51.8, 여 57%), “대북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남녀 공히 늘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대북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교적 남녀 의견의 일치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남녀 각기 과반수 이상이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의견이 같이하고 있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모두 만족 보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북정책 결정 시 국민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남여 모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남 75.8%, 여 79.8%)이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비해 남여 모두 7% 가량 높게 나타나 지난 정부의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 동의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었다.

주요 쟁점 관련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하위 문항(㉔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㉕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㉖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㉗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㉘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등)에서 남여 모두 찬성 쪽으로 의견이 일치 되는 경향을 보였다. 개성공단 유지에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북핵문제 해결 전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도 남여 모두 찬성 의견이 반대 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데에 찬성 의견이 남여 공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데에도 찬성의견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 남여 모두 찬성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에도 찬성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각국별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여 모두 대다수가 북한의 책임(남 86.7%, 여 89.5%) 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책임은 과반수(남 54.8%, 여 51.9%), 미국의 책임도 과반수 이상(남 61.7 %, 여 60.9%)이 동의하고 있었다. 중국의 책임은 과반수를 조금 밑돌았고(남 47%, 여 47.8%), 일본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다른 국가의 책임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률(남 37.5%, 여 39.3%)을 보였다.

남여 모두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책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마.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생각

가. 차이

탈북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0문항 중에서 남여 간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총 3문항으로 나머지 7문항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여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3문항은 특히 탈북자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에서 두드러졌다. 탈북자와 '㉠ 동네 이웃'으로 관계 맺기 이외에 '㉡ 직장 동료, ㉢ 사업 동업자, ㉣ 결혼상대자'로서 관계 형성에 대해 남여의 의견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즉,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 직장 동료, ㉢ 사업 동업자, ㉣ 결혼상대자'로서 탈북자와의 관계 형성을 꺼린다는 응답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나. 공감

탈북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0문항 중에서 7문항은 남여 의견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친근하지 않다는 응답이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탈북자들과 '㉠ 동네 이웃'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남여 모두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40% 이상(남 47.3%, 여 42.9%)을 차지 해 꺼린다는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여 모두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 가장 많은 응답률(남 48.2%, 여 44.9%)을 보였고, 다음으로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앞선 대답에 조금 못미치는 응답률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탈북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남여 의견의 일치가 나타났는데, 탈북자에 대한 인식 하위 문항인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등에서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데에는 남여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남여 모두 남한에 들어오는 탈북자 수용에 대해서는 호의적 태도를 보이나 막상 현실에서 여러 형태의 관계 맺기는 남여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여 모두 동네 이웃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꺼리길 것이 없다는 견해로 일치되나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탈북자를 직장동료,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로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바.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가. 차이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하위문항 총 20문항 중 남녀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4문항이었으며, 나머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남여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관련 문항으로 ‘일본’의 태도에 대한 예상에서 남녀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났다. 즉, 여성과 남성 모두 전쟁 시 일본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 하였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일본이 한국을 돕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따르거나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견해가 더 많았다.

또한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해서는 ‘㉠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에 남녀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과 남성 공히 주변 국가들이 남북한 통일을 원하기보다 원하지 않는다는 높은 응답률을 보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남북한 통일을 희망할 것이라는 관조적 견해를 드러냈다.

나. 공감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하위문항 총 20문항 중 남녀 간 의견의 일치 경향을 보이는 문항은 16문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는 남녀 모두 미국이 대다수를 차지(남 71.7%, 여 64.7%)하여 1순위였고, 다음이 북한-일본-중국-러시아 순이었다.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북한(남 54.5%, 여 50.9%)으로 응답하였다. 북·미 월드컵 대결시 어느편을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남녀 모두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남 69.3%, 여 66.6%)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한국과 주요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남녀 의견의 일치를 보였는데, 미국은 협력대상, 일본·중국·러시아는 경쟁대상이라는 응답에 의견이 모아졌다. 일본·중국·러시아는 경쟁대상이면서도 경제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더불어 남녀 모두 일치하게 나타났다.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인 미국, 일본,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남녀 모두 의견 일치 경향을 보였는데,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다’, 일본·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의견이 남녀 모두 지배적이었다.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남녀 간 이견이 있었으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다수 남여가 일치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에는 남여 모두 대부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에서도 남여 의견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남여 모두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양자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사.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1) 차이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은 젠더와 세대 모두에서 의견의 차이가 다른 질문 영역에 비해 두드러진 분야이다. 관련 문항 총 14문항 중 남여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10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주요 사건(㉠ 4.19, ㉡ 5.16, ㉢ 10월유신, ㉣ 광주 민주화운동, ㉤ 6월 항쟁(1987년), ㉥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사회적 영향 평가에서는 주요 사건으로 제시한 6 가지 사건에서 남여 모두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편이었으나 그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문항에 대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잘모른다는 응답이 10% 내외에서 더 많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겠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는 남여 모두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면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잘모른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에서는 ㉦ 실업문제, ㉧ 범죄문제 등 사회문제에서 남여의 의견차가 드러났는데, 남여 모두 실업문제와 범죄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심각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시장구조와 범죄 노출에 여성 취약성을 대변한다 하겠다.

(2) 공감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하위 항목 20문항 중 남여 의견 일치 경향을 보이는 문항은 4문항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 빈부격차, ㉩ 부동산투기, ㉪ 지역갈등, ㉫ 이념갈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남여 모두 과반수 이상이 공감하면서 별다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동의하고 있었다.

아.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1) 차이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0개 중 남녀 간에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4개항이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와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P < 0.001$),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와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도 통계학적으로 이견을 드러내는 문항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성에 비해 여성이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20% 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는 쪽에 대다수의 의견이 실렸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가 동의하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현재 경제 상황 만족도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으나 남녀간 비교 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만족스러움을 더 표출 하고 있었다.

(2) 공감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을 묻는 하위 문항 총 10개 중 남녀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항목은 6개 항이다. 정치적 성향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전국 노동자의 연대파업에 대한 생각, 촛불 시위의 영향, 남한 사회의 민주성,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정치적 성향에서는 남녀 모두 중도라는 응답이 과반수 내외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진보와 보수라는 응답 간에는 큰 차이 없이 비교적 고른 분포율을 보였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남녀 모두 자랑스럽다는 데에 대다수의 응답자가 분포되면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남 72.3%, 여 75.6%)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 졌으며 남녀 각기 절반에 못미치는 응답자들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률을 보여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촛불 시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하는 가에 대해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으며, 그저 그렇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0% 내외로 남녀 의견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남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남녀 모두 중간인 5점 이상(최대 10점, 최소 1점)에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분포되어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라는 데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남녀 모두 각기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전쟁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전쟁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자는 과반수 이하를 밀돌았다.

5. 세대와 젠더 간 차이에 대한 심층 분석

가. 세대 간 견해 차이의 심층 분석

(1) 개별 연령대 간 견해 차이

(가) 19-29세 Vs. 40대

19-29세 Vs. 30대가 유의미한 견해 차를 보이는 응답은 없었으며, 19-29세 Vs. 40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보이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북한 사회 인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은 19-29세 Vs. 40대,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4. 19와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40 Vs. 19-29세의 견해차가 나타났다으며, 북한 사회 인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은 19-29세 Vs. 40대의 견해 차가 나타났다.

(나) 19-29세 Vs. 50대

대북사안별 시급성에서 남한에서 미군 철수문제에는 시급하다는 19-29세에 반한 응답률을 보인 50대가 가장 많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북한 관련 경험 유무에서는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한 경험이 가장 적게 나타난 19-29세 Vs. 50대,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50대 Vs. 19-29세, 한국과 주변국 인식의 하위 문항 중에서는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에 대해 미국에는 친근감을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북한과 일본에는 낮은 친밀감을 보이는 50대 Vs. 19-29세의 비교적 대립되는 견해가 눈에 띈다.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50대 Vs. 19-29세 (자국의 이익)의 견해 차가 나타났다. 주변국가의 통일 희망정도에도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50대와 부정적인 19-29세의 견해차가 있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성향 정치에 무관심하고 진보적이라는 19-29세 Vs. 관심이 높고 보수적인 50대 이상의 차이로 요약될 수 있는데, 즉,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성향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진보적이라는 19-29세 Vs. 관심이 높고 보수적인 50대 이상 세대의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에서도 빈부격차, 실업문제, 이념갈등 등은 전 세대에 걸쳐 심각하다는 인식이 대다수 임에도 세대간 상대적 차이를 보면 심각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50대 Vs. 19-29세의 차이가 나타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19-29세 Vs. 50대의 견해 차가 나타났다.

(다) 30대 Vs. 50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도 러시아를 상대적으로 경계, 경쟁 대상으로 보는 50대와 협력 대상으로 보는 30대의 견해 차가 두드러진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에 대한 견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30대 Vs. 50대의 견해 차가 나타났다. 반미 정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50대 Vs. 30대의 차이가 나타났다.

(라) 40대 Vs. 50대

북한에 대한 인식의 하위 문항 중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예측을 보인 40대 Vs. 50대,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적이 가장 많다는 40대 Vs. 50대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탈북자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지닌 40대 Vs. 50대의 견해 차가 나타났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에 대해 40대가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중요시 한 데 반해 50대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촛불 시위의 영향 평가는 긍정적인 40대 Vs. 50대의 견해 차를 볼 수 있었다.

(2) 복수 연령대 별 견해 차이

(가) 19-29세 Vs. 30-50대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30-50대의 긍정적 평가 Vs. 19-29세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엇갈렸다.

(나) 19-29세 Vs. 40대-50대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는 주로 19-29세와 40-50대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진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하는 19-29세 Vs. 40대-50대의 견해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에는 19-29세 Vs. 50대 또는 40대의 견해 차가 두드러진다. 전세대에 걸쳐 대다수가 주변국의 도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대간 견해의 정도는 차이를 보였는데, 19-29세 연령대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게 인식하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50대가,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40대가 도움의 필요성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 19-29세, 30-50대 Vs. 40대

탈북자에 대한 견해에서는 탈북자를 결혼상대자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관찮다는 40대 Vs. 19-29세, 30-50대

탈북자들을 남한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40대 Vs. 19-29세, 30-50대의 견해 차가 나타났다.

(라) 19-29세, 50대 Vs. 30-40대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크게 본 30-40대 Vs. 19-29세, 50대, 일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40대 Vs. 50대의 견해 차가 나타났다.

대북정책별 통일도움 정도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40대와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적은 19-29세, 50대가 대비된다. 상대적으로 30-40대가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 남북간 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반해 19-29세, 50대는 그에 비해 공감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마) 19-20대, 30-40대 Vs. 50대

주요 쟁점 관련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 중 통계학적으로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에는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19-20대, 30-40대 Vs. 50대의 의견 차가 나타났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19-29세, 30-40대 Vs. 50대의 견해차가 나타났다.

(바) 19-29세, 40대 Vs. 30-50대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한국의 책임이 크다는 19-29세, 40대 Vs. 30-50대의 견해차가 나타났다.

(3) 세대별 인식의 특징

(가) 19-29세

첫째, 다른 연령대에 비해 통일·대북 현안에 대한 무관심 뿐 만 아니라 남한 사회 일반에 대한 무관심이 병행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비교적 뚜렷한 견해 표명으로 특히 50대와 견해 차이를 가장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 사회 인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북한 관련 경험 유무에서는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한 경험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둘째, 비교적 대북 인식에는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불신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견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으며, 주변국가의 통일 희망정도에도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전세대에 걸쳐 대다수가 주변국의 도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대간 견해의 정도는 차이를 보였는데, 19-29세 연령대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게 인식하고 있었다.

19-20대는 북한에 대해 호의적이면서도 탈북자에 대한 인식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컸다. 남북 교류 및 지원에 대한 인식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율이 적게 나타났다.

셋째,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으며, 탈북자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 시각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북 인식과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 문제와 관념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40대가 대북인식과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 탈북자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의 궤를 함께 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50대의 경우 대북인식과 탈북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 제반에 대해 다른 연령대 대비 부정적 인식으로 일관하는 것보다 구분되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표출하면서도,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은 가장 우려하는 연령대이며,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한국, 미국의 책임을 크게 보고 북한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하는 세대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북한의 안보위협이나 탈북자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문항들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요 쟁점 관련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 중 통계학적으로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는 어떻게 보면 대북·통일인식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과 연계해 볼 때, 아직까지 견해의 비정립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도 상황을 분리해 판단하고 수용적인 이들 사고의 유연성, 열린 자세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할 수 있다.

넷째,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성향 정치에 무관심하고 진보적이라고 하나 한국 사회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탈 진보 성향을 보여 전형적인 이념 상의 진보 유형과는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정형화된 진보와 보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탈전형성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4. 19와 5.16, 10월 유신,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광주 민주화 운동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령대에서 10월 유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4.19,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상반된 경우를 보이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여섯째,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이다.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에서도 빈부격차, 실업문제, 이념갈등 등은 전 세대에 걸쳐 심각하다는 인식이 대다수 임에도 세대간 상대적 차이를 보면 심각하다는 인식이 가장 적었다.

(나) 30대

첫째, 19-29세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대북 인식/탈북자 수용 등에 대한 상대적인 부정적 인식과 같이 현안에 대한 접근법과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40대와 같이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 남북간 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19-29세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과는 대비된다. 탈북자에 대한 견해에서는 40대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는데, 탈북자를 결혼상대자, 남한에 수용, 탈북자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이와 같이 20-30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식과 현실 사이에 갈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위치는 탈북자 수용에 대해서나 대북 지원 등에 있어 ‘마음’은 있으나 ‘현실’에 대한 우려는 큰 이들 세대의 특징을 말해준다 하겠다.

둘째, 30대도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40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책임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미 정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려가 적게 나타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19-20대와 비슷한 양상이다. 전반적으로 19세-40대까지 미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는 비교적 40대의 평가와 일치한다.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30대에서 두드러지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 40대의 경향과 궤를 같이 한다.

(다) 40대

첫째, 현실적 대응과 신중한 접근이 다른 연령대에 대비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역사적 사건과 대북·통일 현안에 대해 비교적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통일에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 대해 부정적이면서도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주변국으로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40대는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의 책임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는 인식이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에 대해 40대가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의 책임을 크게 생각하면서도 일본이나 중국 등 한반도 통일에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다른 연령대보다 적극적인 태도였다.

둘째,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북인식에서나 남북교류, 인도적 지원, 탈북자 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관된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정책별 통일도움 정도에서

도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 남북간 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의 하위 문항 중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예측을 보였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장 적은 우려를 나타냈다. 탈북자에 대한 견해 결혼상대자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괜찮다고 보고 있으며, 탈북자들을 남한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 였다. 탈북자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비교적 긍정적 인식이었다. 탈북자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전반적 긍정적이었다. 이는 20·30대가 북한에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탈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견해에 비교적 일치를 보이는 것이며, 50대 이상이 북한과 탈북자 모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도 구분된다.

셋째, 북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면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30대와 같이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4.19와 5.16,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촛불 시위의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북한 사회 인지도에서는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적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다.

(라) 50대 이상

첫째, 북한에 대해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대북 인도적 지원·남북한 교류, 탈북자 수용 및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연계되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대북인식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이며, 50대는 주변국별 남북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가장 크게 인식 하고 있다. 대북정책별 통일도움 정도에서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에 긍정적 인식이 적게 나타났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의 하위 문항 중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예측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이와 연계해 살펴 볼 것은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50대의 북한에 대한 경계는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나타난다. 탈북자에 대한 견해에서는 탈북자를 결혼상대자, 남한에 수용, 탈북자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40대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었다.

둘째, 북한 방문 경험은 있으나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북한 관련 경험 유무에서는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한 경험이 가장 많은 연령대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적이 가장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과 관련된 교과 과정 경험면에서나 정보 접근성 면에서 가장 떨어진 세대라 볼 수 있다. 50대 이상이 한국 전쟁을 전후한 세대라는 점에서 반공 의식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정보화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정되

어 대북·통일 인식의 전형성을 뛰어 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미국에 대한 전반적 긍정적 인식, 주변 국가에 대한 경계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40대가 미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면서도 통일에 있어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드러내면서 한반도 안보와 통일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19-29세에 비해 우려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40대의 견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과 주변국 인식의 하위 문항 중에서는 주변국 중 가장 친근한 국가에 대해 미국에는 친근감을 보이나 상대적으로 북한과 일본에는 낮은 친밀감을 보였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도 러시아를 상대적으로 경계, 경쟁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50대는 한미 공조, 미국의 도움 및 도움 필요성, 통일희망정도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다른 세대 보다 앞섰다. 반미 정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응답률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대북사안별 시급성에서 남한에서 미군 철수문제에 상대적으로 회의적이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중 중요한 것에 대해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두드러졌다.

셋째, 역사적 인식에서도 다른 연령대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촛불 시위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인식은 다른 연령대와 상대적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넷째, 주요 사회 문제에도 심각하다는 우려를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에서도 빈부격차, 실업문제, 이념갈등 등은 전 세대에 걸쳐 심각하다는 인식이 대다수 입에도 세대간 상대적 차이를 보면 심각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이 보였다. 주요 사회 문제에 가장 우려를 표시 함과 동시에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섯째, 정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보수적인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세대간의 차이가 뚜렷해 갈등의 장기화가 예견되는 몇가지 양상도 눈에 띈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한 갈등이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세대간 평가가 엇갈리는 국가는 미국, 일본이다. 50대 이상은 미국에 대해 가장 큰 기대와 신뢰를 보이는 반면,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불신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40대의 경우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협조국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50대와의 접촉면을 형성하고 있다.

긍정적 대북인식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지원, 대북 지원에서는 40대와 19-29세, 30대, 50대의 견해차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전히 남남갈등에서 대북지원은 중요 쟁점이 될 듯하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20·30대의 사고의 유연성과 40대의 현실적·전략적 접근 태도이다.

나. 젠더 차이에 대한 심층분석

첫째, 여성의 남한 사회, 대북 인식, 통일 사회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총체적·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다는 점이다.

주요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에서 실업문제, 범죄문제 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시장구조와 범죄 노출에 여성 취약성을 대변한다 하겠다. 현재 경제 상황 만족도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으나 남녀간 비교 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만족스러움을 더 표출하고 있었다.

탈북자에 대한 생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 직장 동료, ㉡ 사업 동업자, ㉢ 결혼상대자’로서 탈북자와의 관계 형성을 꺼린다는 응답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의식의 하위 문항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필요하다는 응답이었으며, 통일에 대한 견해에서 남녀 모두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권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서도 현재대호가 좋다는 데에 여성이 통일 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다는 유보적 의견을 드러내었다.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통일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남녀 간 의견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통일 시기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먼 훗날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통일이 여성 자신과 남한에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서는 성별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3문항이 있었는데, 우선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불안감은 남한 사회 내부의 불안정성에 대한 일종의 학습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미래’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불안감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전이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통일 미래에 대한 우려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불안감과 불평등 인식과 맞물려 현재는

탈북자와의 관계 맺기에서, 나아가 통일 미래가 초래할 불안감을 드러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남성에 비해 여성의 남한 사회, 역사적 사건, 대북 인지도 등에서 무관심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보았던 20-30대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현상적 차원에서 동일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20% 가량이나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이는 그간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의 축소의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한 사회적 배제라는 구조하에 형성된 ‘관심이 필요 없는 영역’이 되어 버린 것일 수도 있다.

이는 가부장적 구조 하에서 남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과 같이 통일 시대도 남성이 이끌어 가야 하는 부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아쉬운 점이다. 여성이 현재 처한 자리에서 ‘일상 속 평화’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적 인식과 더불어 북한과 남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상에 대한 관심은 일상에서의 평화를 향한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성에 비해 정부나 개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는 쪽에 대다수의 의견이 실렸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가 동의하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보수적 경향이라고만 해석할 수 없는 사회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이자 남성에 비해 갈등을 드러내기보다 ‘인내’해야 한다는 담론의 경향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차이에 대한 이해와 관용, 갈등 상황을 적절히 표출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 의지는 일상속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능력이 될 수 있다. 여성은 물론 남성의 경우도 우리 사회에 형성된 권위주의 구조하에서 잠재되고 억눌린 정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웹과 ‘촛불’이라는 광장이 이와 같은 ‘억눌림’의 폭발이라는 일면이었다고 해석되기도 했다. 북한의 일인 독재체제가 가지고 있는 억눌림의 정서는 우리의 그것보다 한층 더 한 것일 수 있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더욱 분출될 탈권위주의에 대한 욕구를 사회 발전의 과정으로 삼기 위해서는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실생활에서의 구체적인 능력 습득이 요구된다.

IV. 결론

본 연구 결과 결론적으로 보면 차이보다는 공감대 형성이 더 다수의 문항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체 116문항 중 세대별로 견해 차를 보이는 문항은 54문항이었고 공감대가 형성된 문항은 56개 문항이었다. 성별 견해차는 세대별 견해차가 나타나는 문항 수에 비해 현저히 적었는데, 성별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39 문항이었고, 공감대를 형성한 문항은 77문항이었다. 전반적으로 세대별 의견 차가 성별 의견 차에 비해 더 많은 문항에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 비해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 한국과 주변국의 관계인식,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인식의 하위문항에서였다.

세대와 성별간 모두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북한에 대한 인식, 해방 이후 한국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었다. 반면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문항은 통일 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에서 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세대와 성별 모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항이 차이를 보이는 문항 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차이’라는 현상, 차이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긍정적 갈등 중 어디로 갈 것 인지, 또한, 차이와 갈등, 공감 그 현상 뒤에 맞물려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남남 갈등 뒤에 가려진 남남 갈등 발생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한 사회 내의 제반 문제와 더불어 갈등을 발전적 방향으로 이행하려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세대간 갈등 지형상으로 보면 50대와 여타 세대간의 갈등이 큰 상황이었는 바, 이는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간 차에서 오는 갈등이기도 하지만 세대간 기회의 불평등에서 오는 ‘불안정’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88만원 세대’로도 일컬어지는 20-30대가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의 무기력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극복이 통일 시대에 까지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던져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현실적 피로감은 정서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현실적인 안보문제, 탈북자 지원,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냉담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통일 시대를 관통해 계속된다면 남남 갈등은 이제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젠더와 관련해서 ‘젠더 체계(gender system)’ 논의의 활성화 ‘젠더 행하기(doing gender)’ 이해가 필요하다. 그간 여성들의 통일의식에 대해서 여성들의 의식에 관한 논의

가 주가 되었을 뿐 사회구조적인 젠더 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젠더 행하기 (doing gender)’라는 인식은 간과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통일과 대북 인식에 대한 수동적인 인식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이 뒤섞여 나오기도 했다. 통일을 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성으로서 행하기를 기대하기에 앞서는 군사주의와 가부장적 문화에서 파생된 두려움과 여전히 남성에 비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무거운 여성들의 ‘피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앞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사회 갈등의 발전적 해소자이자 통일 미래를 함께 해나 갈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세대와 젠더를 초월한 ‘권위의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보화 시대는 더 이상 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정치·사회적 힘의 논리로 행해진 일방적인 권위(unilateral authority)를 점차 용인하지 않고 있다. 상호간의 권위와 영역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양한 행위자 간에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려는 개방성과 유연성에 대한 노력은 남남 갈등의 중층적 구조를 풀어 나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부록〉 세대·성별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한 분산분석(ANOVA), 독립표본 T검정 결과표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한 분산분석(ANOVA) 결과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집단-간	54.300	3	18.100	14.068	.000
	집단-내	1542.662	1199	1.287		
	합계	1596.963	120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집단-간	11.491	3	3.830	7.903	.000
	집단-내	581.134	1199	.485		
	합계	592.625	1202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집단-간	30.505	3	10.168	4.746	.003
	집단-내	2568.948	1199	2.143		
	합계	2599.453	1202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집단-간	879.739	3	293.246	2.292	.077
	집단-내	153268.021	1198	127.937		
	합계	154147.760	120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㉔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집단-간	7.059	3	2.353	3.368	.018
	집단-내	837.571	1199	.699		
	합계	844.630	120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㉕ 학술인·예술인·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집단-간	5.740	3	1.913	2.878	.035
	집단-내	797.208	1199	.665		
	합계	802.948	120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㉖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집단-간	6.172	3	2.057	2.915	.033
	집단-내	846.104	1199	.706		
	합계	852.276	120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㉗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집단-간	8.390	3	2.797	3.912	.009
	집단-내	857.108	1199	.715		
	합계	865.498	1202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집단-간	5.487	3	1.829	2.541	.055
	집단-내	862.899	1199	.720		
	합계	868.386	1202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집단-간	3.123	3	1.041	1.782	.149
	집단-내	700.578	1199	.584		
	합계	703.701	120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빈부격차	집단-간	2.288	3	.763	.626	.598
	집단-내	1460.088	1199	1.218		
	합계	1462.376	120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㉕ 부동산투기	집단-간	3.157	3	1.052	.795	.497
	집단-내	1585.121	1197	1.324		
	합계	1588.278	1200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㉖ 실업문제	집단-간	6.515	3	2.172	1.398	.242
	집단-내	1855.934	1195	1.553		
	합계	1862.449	1198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㉗ 범죄문제	집단-간	6.178	3	2.059	2.104	.098
	집단-내	1171.294	1197	.979		
	합계	1177.472	1200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㉘ 지역갈등	집단-간	3.984	3	1.328	1.144	.330
	집단-내	1391.285	1199	1.160		
	합계	1395.268	120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㉙ 이념갈등	집단-간	.401	3	.134	.099	.961
	집단-내	1624.208	1199	1.355		
	합계	1624.608	1202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집단-간	1.097	3	.366	.612	.608
	집단-내	716.765	1199	.598		
	합계	717.862	1202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집단-간	2.341	3	.780	1.114	.342
	집단-내	840.025	1199	.701		
	합계	842.366	1202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집단-간	3.319	3	1.106	1.631	.181
	집단-내	813.530	1199	.679		
	합계	816.850	1202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집단-간	6.514	3	2.171	1.399	.242
	집단-내	1860.939	1199	1.552		
	합계	1867.453	1202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집단-간	3.507	3	1.169	2.116	.096
	집단-내	662.323	1199	.552		
	합계	665.830	1202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집단-간	8.372	3	2.791	4.738	.003
	집단-내	706.298	1199	.589		
	합계	714.670	1202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집단-간	4.548	3	1.516	2.177	.089
	집단-내	834.880	1199	.696		
	합계	839.428	1202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집단-간	14.719	3	4.906	8.058	.000
	집단-내	730.054	1199	.609		
	합계	744.773	1202			
북한 사회 인지도 - ㉓ 선군정치	집단-간	12.404	3	4.135	5.457	.001
	집단-내	907.703	1198	.758		
	합계	920.106	1201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주체사상	집단-간	27.123	3	9.041	11.195	.000
	집단-내	968.345	1199	.808		
	합계	995.468	1202			
북한 사회 인지도 - ㉕ 천리마운동	집단-간	67.772	3	22.591	28.618	.000
	집단-내	944.891	1197	.789		
	합계	1012.663	1200			
북한 사회 인지도 - ㉖ 고난의 행군	집단-간	26.954	3	8.985	12.228	.000
	집단-내	879.489	1197	.735		
	합계	906.443	1200			
북한 사회 인지도 - ㉗ 장마당	집단-간	7.847	3	2.616	6.909	.000
	집단-내	453.545	1198	.379		
	합계	461.392	1201			
북한 사회 인지도 - ㉘ 아리랑 축전	집단-간	48.012	3	16.004	20.795	.000
	집단-내	922.746	1199	.770		
	합계	970.758	1202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㉞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집단-간	.493	3	.164	4.151	.006
	집단-내	47.429	1199	.040		
	합계	47.922	120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㉟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집단-간	.618	3	.206	2.128	.095
	집단-내	116.116	1199	.097		
	합계	116.735	120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㊱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집단-간	2.954	3	.985	3.987	.008
	집단-내	295.573	1197	.247		
	합계	298.526	1200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㊲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집단-간	.071	3	.024	1.707	.164
	집단-내	16.688	1198	.014		
	합계	16.760	120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㉞ 선거방식	집단-간	.236	3	.079	.221	.882
	집단-내	427.192	1199	.356		
	합계	427.428	120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㉟ 생활수준	집단-간	1.050	3	.350	1.344	.259
	집단-내	312.351	1199	.261		
	합계	313.401	120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㊱ 법률제도	집단-간	1.683	3	.561	1.662	.173
	집단-내	404.820	1199	.338		
	합계	406.504	120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㊲ 언어사용	집단-간	1.149	3	.383	.836	.474
	집단-내	549.698	1199	.458		
	합계	550.848	120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㊳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집단-간	7.386	3	2.462	5.038	.002
	집단-내	585.962	1199	.489		
	합계	593.348	120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㊴ 가치관	집단-간	.735	3	.245	.651	.582
	집단-내	450.753	1198	.376		
	합계	451.488	1201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험을 느끼는 정도	집단-간	1.851	3	.617	.862	.460
	집단-내	858.634	1199	.716		
	합계	860.485	1202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집단-간	4.130	3	1.377	1.572	.194
	집단-내	1049.638	1199	.875		
	합계	1053.767	1202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집단-간	20.092	3	6.697	6.146	.000
	집단-내	1305.483	1198	1.090		
	합계	1325.575	1201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집단-간	33.716	3	11.239	12.347	.000
	집단-내	1091.332	1199	.910		
	합계	1125.047	1202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집단-간	51.562	3	17.187	1.886	.130
	집단-내	10890.186	1195	9.113		
	합계	10941.748	1198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미국	집단-간	3.530	3	1.177	2.229	.083
	집단-내	632.949	1199	.528		
	합계	636.479	120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일본	집단-간	1.442	3	.481	.766	.513
	집단-내	751.969	1199	.627		
	합계	753.411	120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중국	집단-간	4.712	3	1.571	2.423	.064
	집단-내	777.160	1199	.648		
	합계	781.872	120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러시아	집단-간	5.782	3	1.927	2.898	.034
	집단-내	797.416	1199	.665		
	합계	803.199	120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미국	집단-간	28.806	3	9.602	10.116	.000
	집단-내	1138.103	1199	.949		
	합계	1166.909	120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일본	집단-간	1.624	3	.541	.609	.609
	집단-내	1065.545	1198	.889		
	합계	1067.169	120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중국	집단-간	2.341	3	.780	1.622	.182
	집단-내	575.922	1197	.481		
	합계	578.263	1200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러시아	집단-간	2.020	3	.673	1.202	.308
	집단-내	670.400	1197	.560		
	합계	672.420	1200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 확률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㉞ 미국	집단-간	8.704	3	2.901	5.733	.001
	집단-내	606.764	1199	.506		
	합계	615.468	120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㉞ 일본	집단-간	1.409	3	.470	1.068	.362
	집단-내	527.151	1199	.440		
	합계	528.560	120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㉞ 중국	집단-간	.412	3	.137	.365	.778
	집단-내	450.184	1199	.375		
	합계	450.595	120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㉞ 러시아	집단-간	.953	3	.318	.910	.435
	집단-내	418.395	1199	.349		
	합계	419.348	1202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집단-간	1.203	3	.401	.664	.574
	집단-내	723.377	1198	.604		
	합계	724.580	120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㉞ 미국	집단-간	5.357	3	1.786	4.033	.007
	집단-내	530.899	1199	.443		
	합계	536.256	120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㉞ 일본	집단-간	6.780	3	2.260	4.192	.006
	집단-내	646.424	1199	.539		
	합계	653.204	120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㉞ 중국	집단-간	4.893	3	1.631	2.733	.043
	집단-내	715.411	1199	.597		
	합계	720.304	120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㉞ 러시아	집단-간	4.972	3	1.657	2.920	.033
	집단-내	680.621	1199	.568		
	합계	685.593	1202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집단-간	7.707	3	2.569	2.902	.034
	집단-내	1060.377	1198	.885		
	합계	1068.083	1201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집단-간	3.686	3	1.229	1.940	.121
	집단-내	758.574	1198	.633		
	합계	762.260	120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동네 이웃	집단-간	2.552	3	.851	1.042	.373
	집단-내	979.118	1199	.817		
	합계	981.671	1202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직장 동료	집단-간	4.686	3	1.562	1.732	.159
	집단-내	1080.336	1198	.902		
	합계	1085.022	120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사업 동업자	집단-간	11.971	3	3.990	3.454	.016
	집단-내	1383.990	1198	1.155		
	합계	1395.961	120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결혼상대자	집단-간	19.062	3	6.354	4.650	.003
	집단-내	1637.056	1198	1.366		
	합계	1656.117	1201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집단-간	4.027	3	1.342	3.084	.027
	집단-내	521.955	1199	.435		
	합계	525.982	120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집단-간	3.846	3	1.282	2.966	.031
	집단-내	518.290	1199	.432		
	합계	522.136	120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집단-간	1.272	3	.424	.768	.512
	집단-내	661.957	1199	.552		
	합계	663.229	120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집단-간	.353	3	.118	.248	.862
	집단-내	567.210	1199	.473		
	합계	567.563	120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집단-간	3.076	3	1.025	1.983	.115
	집단-내	619.872	1199	.517		
	합계	622.948	1202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집단-간	7.707	3	2.569	2.902	.034
	집단-내	1060.377	1198	.885		
	합계	1068.083	1201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4.19	집단-간	51.579	3	17.193	9.906	.000
	집단-내	2080.967	1199	1.736		
	합계	2132.545	1202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5.16	집단-간	67.290	3	22.430	13.989	.000
	집단-내	1922.522	1199	1.603		
	합계	1989.812	1202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10월유신	집단-간	52.147	3	17.382	11.670	.000
	집단-내	1785.919	1199	1.490		
	합계	1838.067	1202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광주민주화운동	집단-간	26.185	3	8.728	5.440	.001
	집단-내	1923.889	1199	1.605		
	합계	1950.075	1202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6월 항쟁(1987년)	집단-간	52.393	3	17.464	9.409	.000
	집단-내	2225.547	1199	1.856		
	합계	2277.940	1202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남북 정상회담	집단-간	14.786	3	4.929	3.895	.009
	집단-내	1517.330	1199	1.265		
	합계	1532.116	1202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	집단-간	133.090	3	44.363	44.900	.000
	집단-내	1184.662	1199	.988		
	합계	1317.752	120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빈부격차	집단-간	3.813	3	1.271	4.398	.004
	집단-내	346.463	1199	.289		
	합계	350.276	120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부동산투기	집단-간	2.167	3	.722	1.881	.131
	집단-내	460.357	1199	.384		
	합계	462.524	120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실업문제	집단-간	4.020	3	1.340	4.551	.004
	집단-내	353.044	1199	.294		
	합계	357.064	120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범죄문제	집단-간	.598	3	.199	.429	.733
	집단-내	557.435	1198	.465		
	합계	558.033	120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지역갈등	집단-간	2.520	3	.840	1.501	.213
	집단-내	670.459	1198	.560		
	합계	672.979	120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이념갈등	집단-간	6.933	3	2.311	3.582	.013
	집단-내	773.612	1199	.645		
	합계	780.545	120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반미정서	집단-간	5.746	3	1.915	3.355	.018
	집단-내	684.510	1199	.571		
	합계	690.256	1202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집단-간	7.201	3	2.400	4.135	.006
	집단-내	696.135	1199	.581		
	합계	703.337	1202			
정치적 성향	집단-간	23.840	3	7.947	11.266	.000
	집단-내	845.763	1199	.705		
	합계	869.603	1202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집단-간	1.151	3	.384	.836	.474
	집단-내	549.669	1198	.459		
	합계	550.819	1201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집단-간	8.752	3	2.917	5.558	.001
	집단-내	629.319	1199	.525		
	합계	638.071	1202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 ㉞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집단-간	37.993	3	12.664	22.167	.000
	집단-내	685.006	1199	.571		
	합계	722.999	1202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 ㉞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	집단-간	31.932	3	10.644	16.886	.000
	집단-내	755.770	1199	.630		
	합계	787.702	1202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 ㉞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	집단-간	3.165	3	1.055	1.544	.201
	집단-내	819.490	1199	.683		
	합계	822.655	1202			
촛불 시위의 역할에 대한 견해	집단-간	86.207	3	28.736	22.783	.000
	집단-내	1512.259	1199	1.261		
	합계	1598.466	1202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집단-간	9.586	3	3.195	1.091	.352
	집단-내	3508.904	1198	2.929		
	합계	3518.490	1201			
한반도 전쟁 가능성	집단-간	9.482	3	3.161	5.751	.001
	집단-내	659.013	1199	.550		
	합계	668.495	1202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현재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집단-간	7.407	3	2.469	2.303	.075
	집단-내	1285.553	1199	1.072		
	합계	1292.959	1202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집단-간	269.664	3	89.888	.441	.724
	집단-내	97841.135	480	203.836		
	합계	98110.800	483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집단-간	3.877	3	1.292	1.813	.143
	집단-내	854.542	1199	.713		
	합계	858.419	1202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집단-간	4.387	3	1.462	2.222	.084
	집단-내	787.793	1197	.658		
	합계	792.180	1200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집단-간	10.593	3	3.531	6.489	.000
	집단-내	652.439	1199	.544		
	합계	663.032	1202			
현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집단-간	3.246	3	1.082	2.451	.062
	집단-내	528.837	1198	.441		
	합계	532.083	1201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집단-간	9.863	3	3.288	3.186	.023
	집단-내	1237.374	1199	1.032		
	합계	1247.237	120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집단-간	5.785	3	1.928	1.827	.140
	집단-내	1265.581	1199	1.056		
	합계	1271.367	120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㉕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집단-간	11.236	3	3.745	3.228	.022
	집단-내	1391.292	1199	1.160		
	합계	1402.529	1202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집단-간	4.687	3	1.562	1.413	.237
	집단-내	1326.058	1199	1.106		
	합계	1330.745	120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㉕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집단-간	1.328	3	.443	.548	.649
	집단-내	967.532	1199	.807		
	합계	968.860	120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㉖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집단-간	1.316	3	.439	.461	.709
	집단-내	1139.637	1199	.950		
	합계	1140.953	120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㉗ 북한의 책임	집단-간	11.348	3	3.783	6.681	.000
	집단-내	678.911	1199	.566		
	합계	690.259	120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㉘ 한국의 책임	집단-간	7.738	3	2.579	2.764	.041
	집단-내	1118.902	1199	.933		
	합계	1126.640	120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㉙ 미국의 책임	집단-간	8.666	3	2.889	3.371	.018
	집단-내	1027.480	1199	.857		
	합계	1036.146	120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㉚ 중국의 책임	집단-간	5.211	3	1.737	2.116	.096
	집단-내	984.176	1199	.821		
	합계	989.387	120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㉛ 일본의 책임	집단-간	12.891	3	4.297	5.261	.001
	집단-내	979.263	1199	.817		
	합계	992.155	1202			

성별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한 독립표본 T검정

통일에 대한 견해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자	604	2.35	1.210	.002	-2.967	1201	.003
	여자	599	2.54	1.084		-2.968	1188.832	.003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자	604	2.16	.697	.024	-2.804	1201	.005
	여자	599	2.28	.704		-2.804	1200.613	.005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남자	604	3.78	1.490	.141	-2.127	1201	.034
	여자	599	3.96	1.446		-2.127	1200.446	.03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남자	604	2.43	.876	.188	-1.007	1201	.314
	여자	599	2.48	.799		-1.008	1192.721	.31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학술인·예술인·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남자	604	2.22	.870	.019	.492	1201	.623
	여자	599	2.20	.761		.492	1182.298	.62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남자	604	2.28	.893	.013	.673	1201	.501
	여자	599	2.25	.788		.673	1184.819	.50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남자	604	2.05	.915	.002	-.999	1201	.318
	여자	599	2.10	.775		-.999	1172.422	.318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자	604	2.11	.844	.034	-1.268	1201	.205
	여자	599	2.17	.679		-1.269	1151.765	.20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북한의 개방과 개혁	남자	604	1.94	.912	.644	.220	1200	.826
	여자	598	1.93	.762		.220	1167.119	.82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군사적 긴장 해소	남자	603	1.77	.862	.967	-1.632	1195	.103
	여자	594	1.85	.848		-1.632	1194.997	.10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남자	603	2.95	.888	.742	1.488	1199	.137
	여자	598	2.88	.794		1.489	1186.339	.137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남자	604	2.06	.879	.181	-.081	1201	.936
	여자	599	2.06	.754		-.081	1176.481	.93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북한의 인권 개선	남자	603	1.98	.872	.310	.902	1200	.367
	여자	599	1.94	.799		.903	1192.215	.367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남자	604	4.24	12.803	.053	1.399	1200	.162
	여자	598	3.32	9.603		1.401	1118.302	.161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남자	604	2.60	.853	.316	-.993	1201	.321
	여자	599	2.65	.837		-.993	1200.848	.321
현재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남자	604	3.30	1.108	.001	-.991	1201	.322
	여자	599	3.36	.960		-.991	1179.866	.322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남자	239	4.51	16.130	.073	.977	482	.329
	여자	245	3.24	12.146		.973	442.153	.331
남북경제협력기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남자	603	2.26	.852	.064	-.938	1199	.348
	여자	598	2.31	.771		-.939	1189.225	.348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남자	604	2.83	.766	.042	.579	1201	.563
	여자	599	2.80	.719		.579	1197.252	.562
현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남자	604	2.97	.714	.000	.357	1200	.721
	여자	598	2.95	.613		.357	1176.743	.721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남자	604	2.55	1.033	.137	-1.871	1201	.062
	여자	599	2.66	1.002		-1.871	1200.405	.06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남자	604	2.65	1.078	.022	-.175	1201	.861
	여자	599	2.66	.977		-.175	1191.544	.86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㉕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자	604	2.69	1.122	.008	1.758	1201	.079
	여자	599	2.58	1.034		1.759	1194.662	.079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㉖ 대북 뼈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남자	604	2.50	1.089	.030	-.096	1201	.924
	여자	599	2.50	1.015		-.096	1196.382	.92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㉗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남자	604	2.33	.940	.325	.141	1201	.888
	여자	599	2.32	.854		.141	1191.905	.888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남자	604	2.49	1.049	.001	1.086	1201	.278
	여자	599	2.43	.893		1.087	1174.232	.277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㉕ 북한의 책임	남자	604	1.58	.806	.013	.692	1201	.489
	여자	599	1.55	.707		.692	1183.255	.489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㉖ 한국의 책임	남자	604	2.49	1.003	.101	-.701	1201	.483
	여자	599	2.53	.932		-.701	1195.879	.483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㉗ 미국의 책임	남자	604	2.34	.973	.040	.571	1201	.568
	여자	599	2.31	.882		.571	1191.431	.568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㉘ 중국의 책임	남자	604	2.55	.930	.393	.614	1201	.539
	여자	599	2.52	.884		.614	1198.877	.539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㉙ 일본의 책임	남자	604	2.75	.957	.061	1.251	1201	.211
	여자	599	2.69	.856		1.251	1188.564	.211

통일전후 변화에 대한 생각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남자	604	2.35	.899	.001	-3.205	1201	.001
	여자	599	2.51	.791		-3.207	1184.078	.001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남자	604	2.87	.807	.000	-3.434	1201	.001
	여자	599	3.02	.713		-3.436	1185.028	.00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빈부격차	남자	604	3.72	1.105	.514	-.173	1201	.863
	여자	599	3.73	1.102		-.173	1200.961	.86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㉕ 부동산투기	남자	604	3.64	1.180	.192	.669	1199	.503
	여자	597	3.59	1.120		.670	1197.069	.50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㉖ 실업문제	남자	602	3.45	1.277	.112	-.610	1197	.542
	여자	597	3.49	1.216		-.610	1194.997	.54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㉗ 범죄문제	남자	603	3.78	1.020	.359	-1.021	1199	.307
	여자	598	3.84	.960		-1.022	1195.683	.307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㉘ 지역갈등	남자	604	3.65	1.117	.025	-2.214	1201	.027
	여자	599	3.79	1.032		-2.215	1194.997	.027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㉙ 이념갈등	남자	604	3.72	1.203	.070	-1.086	1201	.278
	여자	599	3.79	1.120		-1.086	1196.151	.278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남자	604	2.32	.769	.799	.615	1201	.539
	여자	599	2.29	.777		.615	1200.582	.539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남자	604	2.17	.838	.579	.904	1201	.366
	여자	599	2.13	.836		.904	1200.950	.366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남자	604	1.75	.827	.764	-.975	1201	.330
	여자	599	1.80	.822		-.975	1200.993	.330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남자	604	2.61	1.279	.003	2.046	1201	.041
	여자	599	2.46	1.209		2.046	1198.303	.041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남자	604	2.66	.782	.000	-1.960	1201	.050
	여자	599	2.75	.702		-1.961	1189.375	.050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남자	604	3.03	.779	.392	-.156	1201	.876
	여자	599	3.04	.764		-.156	1200.873	.876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남자	604	2.64	.848	.370	-.007	1201	.995
	여자	599	2.64	.824		-.007	1200.523	.995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남자	604	2.30	.810	.091	.754	1201	.451
	여자	599	2.27	.764		.754	1198.100	.451
북한 사회 인지도 - ㉓ 선군정치	남자	604	3.11	.932	.000	-8.043	1200	.000
	여자	598	3.51	.765		-8.051	1160.372	.000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주체사상	남자	604	2.58	.921	.000	-6.166	1201	.000
	여자	599	2.90	.871		-6.167	1198.307	.000
북한 사회 인지도 - ㉕ 천리마운동	남자	603	2.66	.938	.000	-6.889	1199	.000
	여자	598	3.02	.863		-6.892	1192.416	.000
북한 사회 인지도 - ㉖ 고난의 행군	남자	603	3.19	.929	.000	-5.741	1199	.000
	여자	598	3.47	.780		-5.745	1167.404	.000
북한 사회 인지도 - ㉗ 장마당	남자	603	3.64	.697	.000	-4.211	1200	.000
	여자	599	3.79	.521		-4.215	1114.782	.000
북한 사회 인지도 - ㉘ 아리랑 축전	남자	604	2.95	.954	.058	-5.569	1201	.000
	여자	599	3.24	.816		-5.573	1175.607	.000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㉙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남자	604	1.96	.192	.224	.607	1201	.544
	여자	599	1.95	.208		.607	1191.603	.54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㉚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남자	604	1.87	.334	.000	-2.080	1201	.038
	여자	599	1.91	.287		-2.082	1176.964	.038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㉛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남자	603	1.52	.500	.069	-.966	1199	.334
	여자	598	1.55	.498		-.966	1198.980	.33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㉜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남자	604	1.98	.140	.001	-1.690	1200	.091
	여자	598	1.99	.091		-1.693	1039.074	.09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㉝ 선거방식	남자	604	1.32	.617	.118	.796	1201	.426
	여자	599	1.29	.575		.796	1196.520	.42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㉞ 생활수준	남자	604	1.23	.532	.415	.275	1201	.783
	여자	599	1.22	.489		.275	1194.190	.783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법률제도	남자	604	1.32	.585	.786	.168	1201	.867
	여자	599	1.32	.578		.168	1200.989	.867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㉕ 언어사용	남자	604	1.62	.676	.622	2.222	1201	.026
	여자	599	1.54	.676		2.222	1200.934	.02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㉖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남자	604	1.74	.712	.870	2.242	1201	.025
	여자	599	1.64	.691		2.243	1200.420	.02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㉗ 가치관	남자	603	1.39	.627	.361	.305	1200	.761
	여자	599	1.38	.599		.305	1198.100	.761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험을 느끼는 정도	남자	604	2.16	.910	.000	4.771	1201	.000
	여자	599	1.93	.760		4.775	1167.042	.000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남자	604	1.75	.889	.413	-2.689	1201	.007
	여자	599	1.89	.977		-2.688	1188.599	.007

새터민에 대한 인식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남자	604	2.71	.925	.004	-.481	1200	.630
	여자	598	2.73	.643		-.482	1076.207	.630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동네 이웃	남자	604	3.42	.938	.039	1.728	1201	.084
	여자	599	3.33	.866		1.729	1194.782	.084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직장 동료	남자	603	3.41	.963	.137	2.084	1200	.037
	여자	599	3.30	.935		2.084	1199.404	.037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사업 동업자	남자	603	2.92	1.087	.568	2.944	1200	.003
	여자	599	2.73	1.063		2.945	1199.709	.003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결혼상대자	남자	603	2.81	1.214	.102	6.252	1200	.000
	여자	599	2.39	1.095		6.254	1188.989	.000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남자	604	1.61	.649	.506	-1.491	1201	.136
	여자	599	1.67	.673		-1.491	1198.499	.136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남자	604	2.43	.681	.099	-.577	1201	.564
	여자	599	2.45	.636		-.577	1196.751	.564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남자	604	2.40	.752	.745	-1.638	1201	.102
	여자	599	2.47	.733		-1.638	1200.652	.10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남자	604	2.93	.680	.283	.183	1201	.855
	여자	599	2.92	.695		.183	1199.989	.855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남자	604	2.20	.748	.229	-.803	1201	.422
	여자	599	2.23	.691		-.804	1195.155	*.422

해방 이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성별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㉓ 4.19	남자	604	2.34	1.256	.000	-5.425	1201	.000
	여자	599	2.75	1.375		-5.423	1189.443	.000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㉔ 5.16	남자	604	2.80	1.238	.005	-3.755	1201	.000
	여자	599	3.07	1.321		-3.754	1194.658	.000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㉕ 10월유신	남자	604	3.06	1.164	.000	-2.778	1201	.006
	여자	599	3.26	1.300		-2.777	1184.435	.006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㉖ 광주민주화운동	남자	604	2.35	1.229	.005	-3.580	1201	.000
	여자	599	2.61	1.305		-3.579	1195.392	.000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㉗ 6월 항쟁(1987년)	남자	604	2.56	1.309	.000	-4.447	1201	.000
	여자	599	2.91	1.421		-4.445	1191.185	.000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㉘ 남북 정상회담	남자	604	2.16	1.089	.010	-3.160	1201	.002
	여자	599	2.36	1.160		-3.159	1195.001	.002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평가	남자	604	1.97	.987	.045	-2.323	1201	.020
	여자	599	2.11	1.101		-2.322	1184.893	.020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㉙ 빈부격차	남자	604	1.41	.565	.024	.908	1201	.364
	여자	599	1.38	.514		.909	1192.056	.364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㉚ 부동산투기	남자	604	1.54	.659	.001	1.368	1201	.171
	여자	599	1.49	.578		1.369	1183.135	.17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㉛ 실업문제	남자	604	1.36	.590	.000	2.834	1201	.005
	여자	599	1.27	.493		2.836	1167.413	.005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㉜ 범죄문제	남자	604	1.85	.694	.028	4.758	1200	.000
	여자	598	1.67	.656		4.760	1197.448	.000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㉝ 지역갈등	남자	603	1.99	.765	.501	-.656	1200	.512
	여자	599	2.02	.732		-.656	1198.420	.51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㉞ 이념갈등	남자	604	2.13	.822	.320	.157	1201	.876
	여자	599	2.12	.790		.157	1199.856	.876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㉟ 반미정서	남자	604	2.35	.763	.229	2.114	1201	.035
	여자	599	2.26	.750		2.114	1200.899	.035

기타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인식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남자	604	2.49	.795	.000	-6.882	1201	.000
	여자	599	2.78	.703		-6.886	1185.758	.000
정치적 성향	남자	604	3.00	.915	.003	-1.192	1201	.233
	여자	599	3.06	.780		-1.193	1174.393	.233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남자	604	3.05	.692	.679	-2.802	1200	.005
	여자	598	3.16	.658		-2.803	1198.068	.005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남자	604	2.07	.759	.010	.264	1201	.792
	여자	599	2.06	.698		.264	1194.185	.792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 ㉞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남자	604	1.92	.801	.414	-3.624	1201	.000
	여자	599	2.08	.741		-3.625	1195.163	.000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 ㉞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	남자	604	2.47	.855	.046	-.013	1201	.990
	여자	599	2.47	.762		-.013	1187.661	.990
시위 및 집회 허용에 대한 생각 - ㉞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	남자	604	3.19	.863	.419	-2.735	1201	.006
	여자	599	3.32	.785		-2.736	1192.135	.006
촛불 시위의 역할에 대한 견해	남자	604	2.44	1.229	.000	-1.486	1201	.137
	여자	599	2.53	1.070		-1.487	1181.352	.137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남자	604	5.71	1.725	.596	.351	1200	.725
	여자	598	5.67	1.699		.351	1199.967	.725
한반도 전쟁 가능성	남자	604	2.52	.778	.008	1.841	1201	.066
	여자	599	2.45	.711		1.842	1193.065	.066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남자	604	1.58	1.041	.066	-1.837	1200	.067
	여자	598	1.69	1.059		-1.836	1199.113	.067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남자	604	2.81	.907	.025	1.256	1201	.209
	여자	599	2.74	1.025		1.255	1181.053	.210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남자	603	1.65	1.081	.070	-1.428	1197	.153
	여자	596	1.90	4.144		-1.421	674.660	.156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미국	남자	604	1.37	.689	.001	-1.586	1201	.113
	여자	599	1.43	.764		-1.585	1186.282	.11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일본	남자	604	2.15	.782	.227	-.685	1201	.493
	여자	599	2.18	.802		-.685	1199.642	.49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중국	남자	604	2.20	.816	.537	.358	1201	.720
	여자	599	2.19	.798		.359	1200.755	.720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러시아	남자	604	2.05	.805	.226	-.716	1201	.474
	여자	599	2.08	.830		-.716	1199.158	.47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미국	남자	604	1.68	.961	.003	-1.275	1201	.203
	여자	599	1.75	1.009		-1.275	1197.036	.203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일본	남자	604	2.47	.936	.013	-2.459	1200	.014
	여자	598	2.60	.945		-2.459	1199.528	.01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중국	남자	604	2.61	.656	.328	-1.141	1199	.254
	여자	597	2.66	.731		-1.140	1182.141	.25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러시아	남자	604	2.83	.701	.147	-.730	1199	.466
	여자	597	2.86	.794		-.729	1177.162	.466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미국	남자	604	2.78	.744	.425	2.111	1201	.035
	여자	599	2.69	.684		2.112	1194.099	.035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일본	남자	604	3.03	.700	.058	2.575	1201	.010
	여자	599	2.93	.620		2.577	1186.172	.010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중국	남자	604	3.11	.618	.001	3.107	1201	.002
	여자	599	3.00	.602		3.107	1200.668	.00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러시아	남자	604	3.00	.607	.987	1.373	1201	.170
	여자	599	2.95	.574		1.373	1198.240	.170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남자	603	1.69	.843	.059	-.215	1200	.830
	여자	599	1.70	.704		-.215	1165.817	.830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미국	남자	604	1.62	.696	.142	-.742	1201	.458
	여자	599	1.65	.639		-.742	1193.946	.458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일본	남자	604	2.05	.768	.153	-.009	1201	.992
	여자	599	2.05	.705		-.009	1194.033	.99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중국	남자	604	1.88	.828	.006	-1.175	1201	.240
	여자	599	1.94	.715		-1.176	1178.485	.240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러시아	남자	604	2.07	.777	.873	-1.586	1201	.113
	여자	599	2.14	.732		-1.587	1197.829	.11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남자	603	2.01	.968	.047	-1.106	1200	.269
	여자	599	2.07	.917		-1.106	1197.345	.269

설문지

2009 통일의식조사





208 SAJIK-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3702-2100 / FAX(02)3702-2121/E-mail info@gallup.co.kr / internetwww.gallup.co.kr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한국갤럽 GALLUP KOREA

Gallup 200916072

2009 통일의식조사

A1-5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통일의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님의 응답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주관 기관:



통일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서울대학교

소장: 박 명 규 교수

전화: 880-4052

2009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박 무 익

담당연구원 홍 승 호

실사연구원 진 선 영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665

- ☐ 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A6-7 ☐☐
- ☐ 지역크기 : 8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 ☐ 성 별 : 9 1. 남자 2. 여자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10-11 만 _____ 세 → **만 19세 이상만 조사 진행하십시오**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2
- 매우 필요하다
 - 약간 필요하다
 - 반반 / 그저 그렇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2) (보기카드 1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13
-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 현재대세가 좋다
 -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3) (보기카드 2 제시)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4
- 5년 이내
 - 10년 이내
 - 20년 이내
 - 30년 이내
 - 30년 이상
 - 불가능하다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16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1	2	3	4
17 ㉢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1	2	3	4
18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19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1	2	3	4
20 ㉡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21 ㉢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22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23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24 ㉥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문 6)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5-26 1. 같은 민족이니까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3.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 (적을 것 : _____)

다음은 ‘통일 전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27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28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29 ㉠ 빈부격차	1	2	3	4	5
30 ㉡ 부동산투기	1	2	3	4	5
31 ㉢ 실업문제	1	2	3	4	5
32 ㉣ 범죄문제	1	2	3	4	5
33 ㉤ 지역갈등	1	2	3	4	5
34 ㉥ 이념갈등	1	2	3	4	5

문 10)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35 1.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1)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36 1.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2)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37
1.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3. 통일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4.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 13) (보기카드 4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8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4)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39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문 15)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0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6)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1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문 17)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2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18)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하십시오.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43 ㉠ 선군정치	1	2	3	4
44 ㉡ 주체사상	1	2	3	4
45 ㉢ 천리마운동	1	2	3	4
46 ㉣ 고난의 행군	1	2	3	4
47 ㉠ 장마당	1	2	3	4
48 ㉡ 아리랑 축전	1	2	3	4

문 19)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있다	없다
49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적	1	2
50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1	2
51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1	2
52 ㉣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1	2

문 2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53 ㉠ 선거방식	1	2	3	4
54 ㉡ 생활수준	1	2	3	4
55 ㉢ 법률제도	1	2	3	4
56 ㉣ 언어사용	1	2	3	4
57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1	2	3	4
58 ㉡ 가치관	1	2	3	4

문 21)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9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문 22)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0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잘 모름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3)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1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4) ○○님은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폭 늘려야 한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2
1. 대폭 늘려야 한다
 2. 조금 늘려야 한다
 3.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4. 조금 줄여야 한다
 5. 대폭 줄여야 한다

문 24-1) (보기카드 5 제시)
 현재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63-64
1.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2.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3.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4. 대북지원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5. 기타 (적을 것 : _____)

문 25) ○○님은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5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6)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6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27) ○○님은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7
1.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2.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3.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 28) ○○님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68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잘 모름

문 29)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요?

조사원 아래 각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69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1	2	3	4	5
70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71	㉢ 대북 배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1	2	3	4	5
72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1	2	3	4	5
73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1	2	3	4	5

문 30)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의 책임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74	㉠ 북한의 책임	1	2	3	4	5
75	㉡ 한국의 책임	1	2	3	4	5
76	㉢ 미국의 책임	1	2	3	4	5
77	㉣ 중국의 책임	1	2	3	4	5
78	㉤ 일본의 책임	1	2	3	4	5

다음은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31)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79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 32) (보기카드 6 제시)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동네 이웃'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80	㉠ 동네 이웃	1	2	3	4	5
81	㉡ 직장 동료	1	2	3	4	5
82	㉢ 사업 동업자	1	2	3	4	5
83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 33)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86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4)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 않음	전혀 동의 않음
7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8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4
9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1	2	3	4
10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4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35) (보기카드 7 제시)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 11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6) (보기카드 7 제시)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12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7)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 13-14 1. 북한 팀
2. 미국 팀
3.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5. 기타 (적을 것 : _____)

문 38) (보기카드 8 제시)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15	㉠ 미국	1	2	3	4
16	㉡ 일본	1	2	3	4
17	㉢ 중국	1	2	3	4
18	㉣ 러시아	1	2	3	4

문 39) (보기카드 9 제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19	㉠ 미국	1	2	3	4
20	㉡ 일본	1	2	3	4
21	㉢ 중국	1	2	3	4
22	㉣ 러시아	1	2	3	4

문 40)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23	㉠ 미국	1	2	3	4
24	㉡ 일본	1	2	3	4
25	㉢ 중국	1	2	3	4
26	㉣ 러시아	1	2	3	4

문 41) ○○님은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 하지 않는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8	㉠ 미국	1	2	3	4
29	㉡ 일본	1	2	3	4
30	㉢ 중국	1	2	3	4
31	㉣ 러시아	1	2	3	4

문 43)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북관계 개선
2. 한미공조
3. 똑같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44)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19'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
33	㉠ 4·19	1	2	3	4	5
34	㉡ 5·16	1	2	3	4	5
35	㉢ 10월 유신	1	2	3	4	5
36	㉣ 광주민주화운동	1	2	3	4	5
37	㉤ 6월 항쟁	1	2	3	4	5
38	㉥ 남북정상회담	1	2	3	4	5

문 45) ○○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긍정적
 2. 대체로 긍정적
 3. 대체로 부정적
 4. 매우 부정적
5. 잘 모름

문 46)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40	㉠ 빈부격차	1	2	3	4
41	㉡ 부동산투기	1	2	3	4
42	㉢ 실업문제	1	2	3	4
43	㉣ 범죄문제	1	2	3	4
44	㉤ 지역갈등	1	2	3	4
45	㉥ 이념갈등	1	2	3	4
46	㉦ 반미정서	1	2	3	4

지금부터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 문 47)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7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 문 48)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8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 문 49)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49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 문 50)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0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 문 51) ○○님은 다음의 행위가 얼마나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체로 허용되어야 한다’, ‘가급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부에 항의하는 공개 집회’는요?
- | 조사원 | 아래 | ㉠부터 | ㉡까지 | 각각 | 질문하고 | 응답 | 받으십시오. |
|-----|--------------|-----------------------|-----------------|-----------------|------|----|--------|
| |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 대체로 허용되어야 한다 | 가급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 | | |
| 51 | ㉡ |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 1 | 2 | 3 | 4 | |
| 52 | ㉠ | 전국 노동자 연대피업 | 1 | 2 | 3 | 4 | |
| 53 | ㉡ |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방하는 행위 | 1 | 2 | 3 | 4 | |

- 문 52) ○○님은 “촛불 시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4
1. 매우 찬성한다
 2. 다소 찬성한다
 3. 반반/그저 그렇다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 문 53) (보기카드 10 제시)
그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 문 54)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57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58-59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등)
5. 일반직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9. 가정주부
10. 학생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11. 군인/경찰
12. 무직
13. 기타 (적을 것 : _____)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조사원 보기를 읽어주세요.
 60 1. 미혼 2. 기혼 3. 이혼/별거 4. 사별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조사원 중첩되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1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재학/대학졸업
 5. 대학원재학 이상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62-63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천주교 (가톨릭)
 4. 기타 (적을 것 : _____)
 98. 종교 없음
 99. 모름/무응답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64-65 1. 월 49만원 이하 7. 월 300 - 349만원
 2. 월 50 - 99만원 8. 월 350 - 399만원
 3. 월 100 - 149만원 9. 월 400 - 499만원
 4. 월 150 - 199만원 10. 월 500 - 599만원
 5. 월 200 - 249만원 11. 월 600 - 699만원
 6. 월 250 - 299만원 12. 월 700만원 이상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덕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66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D 7) (보기카드 11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7 1. 상의 상
 2. 상의 하
 3. 중의 상
 4. 중의 하
 5. 하의 상
 6. 하의 하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68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훨씬 나빠졌다
 6. 잘 모르겠다

D 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69-70 1. 서울 10. 충청북도
 2. 부산 11. 충청남도
 3. 대구 12. 전라북도
 4. 인천 13. 전라남도
 5. 광주 14. 경상북도
 6. 대전 15. 경상남도
 7. 울산 16. 제주도
 8. 경기도 17. 북한
 9. 강원도 18. 외국

면 접 후 기 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연락처	1. 일반전화 (⁷¹⁻⁷³) - (⁷⁴⁻⁷⁷) - (⁷⁸⁻⁸¹) 지역번호 82-84 국 85-88 번호 89-92 2. 휴대폰 () - () - ()
조 사 일 시	⁹³ 월 ⁹⁴⁻⁹⁵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분간) (반드시 적어 주세요) 96-97
협 조 정 도	1. 상 2. 중 3. 하 98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99
조사원 이름	지역 조사원 ID 100-104

Supervisor	검 증 원
105-107	

제3세션

젊은 세대와의 라운드 테이블 - “청년세대에게 통일을 묻다”



I. 들어가며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통일을 지지하고 있지만 국민 대부분은 북한을 다른 행성처럼 여기고 있다.” 지난 24일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구상의 지옥(Hell on Earth)”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도하며 언급한 부분이다.¹⁾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가 반백년 이상을 허리 잘린 강토 속에서 출혈을 하며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북한관과 통일관에 기인한 것이라고 원인규명을 지을 수 있다. 외국의 잡지가 지적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의식과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번영하는 통일국가를 떠메고 나가야 할 젊은 세대들의 통일외식은 심각할 정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한 월간지가 초등학생 설문조사에서 37.8%가 6.25 전쟁이 조선시대 일어난 전쟁으로 보고 있었으며, 199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안보·안전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6.25전쟁이 일어난 해를 모르는 학생이 57%나 되었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의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젊은 세대들 속에서 통일외식이 낮게 조사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북한에서 사범대학을 다녔고, 한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의 문제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대학교나 중, 고등학교들에서 통일교육을 할 때마다 절실히 느끼는 것이지만 학생들에게 분단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통일교육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표현은 학생들이 통일교육 강사에게 던지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질문도 아무런 철학적 의미가 없을뿐더러 이는 서울의 명문대 학생들의 경우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대의에는 큰 이의가 없는 편이

1)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0/24/0505000000AKR20091024001000085.HTML?template=2089> 연합뉴스 2009.10.24 ofcourse@yna.co.kr

지만 정작 자신의 대에서의 통일은 회피하는 경향에 대하여서도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는 넘비(not in my backyard)현상에서 초래된 현상이라 하겠다.

필자는 이 토론문을 통하여 북한과 한국의 통일 의식을 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의 통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실제적 대안들을 잠시라도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남과 북의 통일의식 비교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수준과 내용은 다음의 수치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78.6%, 57.0%, 54.7%” 차례대로 나와 있는 수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6월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당위성”에 동의한 학생수가 초등학생은 10명 가운데 8명인 반면 중학생은 6명, 고등학생은 5명이었다.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이 좋다.”,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다.” 등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하곤 하였다. 대학생들인 경우에도 통일은 물론, 지어는 국가나 민족에 대한 문제에 회의를 느끼며 나라의 운명보다는 취업이나 진로문제에 편중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명문사학이라고 하는 필자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과 얼마 전에 통일에 대하여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 학생의 견해도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으며 통일을 하려면 여러 면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 통일이후의 혼란을 대비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 등으로 경제적인 논리를 펴가며 자기 견해를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선배들의 애국의 얼을 얼마나 느끼고 체현하고 있으며, 혹은 주어진 환경과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만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북한 출신인 필자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 존재하였다.

북한의 경우에는 소학교 시기부터 “끓주리고 혈벗은 남녘동포”를 돕기 위하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통일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비록 왜곡된 논거를 가지고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 기간에 걸쳐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교과서들에는 통일에 관련된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한문교육을 하는 목적을 조국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²⁾ 이러한 통일

2) 남한에서 한자를 많이 사용하므로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는 한문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김일성

교육을 받고 중고등학교³⁾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는 학생들은 “통일병사가 되어 모교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슬로건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군에서 복무하는 기간에도 통일교육내용을 정치상학시간에 포함하여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에서 전역하고 나온 뒤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도 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제라는 내용의 사상교육을 받고 있다.

Ⅲ. 통일과 이후 시대를 대비한 통일의식 제고

우리나라는 통일을 위한 대업 수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발전 경험과 위상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또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통일관, 대북관, 안보관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통일교육이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논거들로 교육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과거와 같이 민족성 하나만을 가지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동포이며 하나의 강토로 이어져 있는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언제든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상인 동시에 우리에게 제2의 산업혁명을 기대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하자원 매장량에서 결코 다른 나라들에 뒤지지 않으며 자원의 품질 또한 우수하다. 한반도에 매장된 지하자원은 총 220여종으로서 북한은 남한의 500배에 달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금, 은, 구리, 아연, 철, 몰리브덴 등 금속 19종을 포함해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무연탄, 유연탄, 등 비금속 에너지 광물까지 43종에 달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채굴기술이 낙후하고 식량사정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채굴이 불가능한 상태이다.⁴⁾ 여기에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과 자본력이 투입되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혈값으로 중국을 반출되는 조국의 자원들을 지켜낼 뿐 아니라 한반도의 발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외에도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분단과 정전(停戰)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초대형 광고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입는 기회비용적 손실에 대하여서도 생각해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의 지시에 따른 것.

3) 북한에는 한국처럼 중·고등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과정의 고등중학교(현재 중학교) 과정이 있다.

4) 통일신문, 2001.03.01.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55§ion=sc2§ion2=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중·고등교육기관들에서의 통일교육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며 평생교육적 측면에서의 통일교육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대학입학시험이나 여러 자격증 시험에 북한관련문제들을 출제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모든 대학들에 필수과목으로 북한학을 개설하는 방향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역할을 높이며 북한 출신 통일교육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생동감 있는 통일교육으로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2010년 분야별 예산에서 외교·통일 분야의 예산이 3조 3,96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14.7% 증가된 것은 감축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⁵⁾ 정부적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전 국민적 통일의식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관점을 버리고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인(人)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른 통일관과 균형적인 대북관, 정확한 안보관을 가진 통일의 역군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IV. 나오며

“햇볕정책”이라고 불리 우는 지난 기간에 북한에 쏘여진 햇볕을 금액으로 따진다면 1인당 3,300원 정도라고 한다. 우리는 독일의 경험을 보더라도 통일을 대비하여 재정적 준비도 해야 한다. 재정적 준비를 포함하여 각종 유형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정신적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며 이는 교육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러자면 통일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기존의 것만을 답습하여서는 통일의식을 제고시키고 통일과 그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기 어렵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월 10일 교육개발원 정책포럼에서 “북한 사회를 우리 사회의 일부처럼 이해하여 포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도 포럼에서 “우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북한을 평가해서는 안되며 객관적 잣대로 평가하여 교육해야 한다.”면서,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 “북한의 이질적 체제에 대한 비판

5) 서울경제신문. 2009.10.29. 이상훈기자 “4대강, 세종시 최대 쟁점 될 듯”

중심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중심으로 초점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통일교육의 내용에서 빠트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안보에 대한 관점이다. 남과 북은 하나의 핏줄과 언어를 쓰는 한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구를 맞대고 있는 적대관계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북한은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건설하여야 할 동포인 동시에 서로 총대를 겨누고 있는 교전상대국이다.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상태에 있는 한반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며 튼튼한 안보는 평화의 근본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2004년도 육사입학생 중 34%가 미국이 주적(主敵)으로 알고 있다는 자료는 우리에게 시사꺼리를 던져준다. 지난 한국주둔 유엔군 부사령관은 어느 강연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세계4위로 매긴 적이 있었다. 그만큼 아직 교전 상대국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군사력과 그로 인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전략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마땅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 안일해이하게 태평성대만을 노래할 때 우리는 이미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기지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자식들의 피땀으로 담당할 선배세대들의 모범을 본받아 통일시대를 열어갈 주역으로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며 또한 준비 없이는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도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청년들이 애국의 마음과 미래 지향적인 통일의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처분하던 그때의 비참한 상황을 재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들을 비롯하여 통일교육을 담당할 모든 관계자들이 통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한다면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통일의식을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통일의 그 날은 앞당겨지고 성공적인 통일과정이 진행되어 남과 북이 공존·공영하여 제2의 산업혁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대국으로,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1.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남북 관계 인식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2. 평화 교육 안에서의 통일 교육

- 이해와 존중, 조화의 자세를 배우는 평화 교육
- 궁극적 화동(和同)을 위한 통일 교육

- 1) 평화 교육 속에서 만난 탈북자
 - 한겨레 중고등학교 탈북 청소년들과의 만남
 - 평화의 집 탈북인들과의 제주 종교 문화 체험
- 2) 평화 교육 속에서 만난 대한민국 청소년
 - 일반 청소년 통일 교육 경험을 통해 느낀 점
 - 무관심의 영역으로부터의 탈피, 체험
- 3) 이미 시작된 주체와 주체의 만남
 - 불거지는 갈등, 백신 맞는 중
 - 서로 어떻게 조율해가며 화동할 것인가
- 4) 만남을 준비하는 교육인의 자세
 - 통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온전한 통일에 대한 개인적 견해

-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 하 나 (북한아이 꺼안기)

1. 들어가는 말

‘한 민족이니까 통일해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과 얼을 나눈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 남한의 20대 청년으로서, 중국의 조선족자치구에서 약 4년간 거주하며 대학을 다니고 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또 새터민 과외봉사모임 참여자로서 저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남한의 청년으로서의 관점

‘한 민족이니까 통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의미하는 것,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통일이 전쟁의 종결과 평화의 정착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통일’의 의미가 남북이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면 좀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랜 기간 각기 다른 사회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며 합의를 찾아가는 불편함을 단지 “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감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가운데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다져야할 “실제적 부담”을 가진 한국사회의 젊은이로서 북한과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룰 경우 더 부담해야하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실제적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한 민족”이라는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감상적일 수도 있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 “실제적 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메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북한의 핵실험,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금강산 총기사건 등은 민족적 동질성 혹은 유대감의 약화를 제쳐두고라도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일들은 아님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혈통적

동질성을 근거로 해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 아직은 납득되어 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3. 연길거주자로서의 관점

조선족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적으로는 한민족(韓民族)이지만, 조선족은 중국 56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중국인으로 중국식 교육을 받으며 중국인이 됩니다. 특히 제가 8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했던 왕청현의 조선족 직업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우리 중국이 아직 축구는 한국을 이기지 못하지만 다른데서는 한국을 능가한다.” 라는 말을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조선족이 민족정체성을 국가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중국’이라는 그 학생의 말을 통해서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조선족은 한국이 고구려 역사를 왜곡한다는 말을 합니다. 광개토태왕비에 있는 기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중국이 옳게 해석한 역사를 왜곡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조선족 학우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 저의 입장을 배려해 한국이 실수했을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택시에서 이 화제를 꺼낸다면 조선족 기사님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한국은 중국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왜곡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족이 민족적 정체성보다 국가적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점은 월경한 북한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보고 돕는 분들도 볼 수 있었지만, 대다수는 우리가 불법체류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 특히, 북한의 지명을 대며 구걸을 하는 탈북인을 향해 ‘남의 땅에 넘어와서 시끄럽게(번거롭게)한다’는 조선족 여성의 말을 통해 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족이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한민족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합니다. 동포애 혹은 민족주의에 호소에 한국에 오지만, 그것은 민족적 뿌리를 찾아서 오는 것보다는 실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한 민족이니까 통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명제의 가부를 조선족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답을 듣게 될까요? 저의 제한된 약 4년간의 조선족자치구 경험을 미루어보다 조선족이 크게 통일을 염원하거나 의식한다고 생각할만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 이익이 있다면 중국인이라는 국가정체성보다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둘 수 있는 탄력을 조선족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새터민 관련 활동 참여자로서의 관점

저는 중국에 거주하는 동안 자신이 탈북을 해서 곤란한 처지인데 좀 도와달라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마주했고 조선족 남성과 결혼해 정착에 성공한 북한여성도 만나보았습니다. 한편 한족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자신만 한국행을 하거나 혹은 중국공안에 잡혀 북으로 강제송환되어 남편과 아이만 남아 있는 예도 보았습니다. 특히 북의 여성이 낳은 아동을 지원하는 종교기관을 통해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짧게나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새터민 과외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같은 경험을 가지지 않은 보통의 한국인보다는 조금 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와 활동가들은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두거나,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인권적 측면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기로 활동을 하다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소중한 우정을 가꿀 수 있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입장, 소통방식, 그리고 기대치의 차이 같은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여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비교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우호적이고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진 봉사자와 활동가들도 한번씩 경험하고 극복해야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오해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한국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이 됨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한 민족이니까 당연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지만 인권 활동가 등과 같이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경우 어떤 구성원은 우리사회에 기여한 바도 없는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학특례와 같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권리’이지만 어떤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능력에 상관없는 특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북한이탈주민과 가까운 곳에 서서 남한 사회를 바라보며 알게 된 것은 남한이 준 국민의 ‘권리’를 북한이탈주민은 한 민족으로서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는 동안 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존의 구성원들은 그것을 공정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 나가는 말

한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하루빨리 종결되어야 하지만, 바로 단일국가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그 근거가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는 ‘한 민족’인데 있다면 그 실제적 무게에 비해 근거가 매우 빈약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 이상의 무엇을 그려야한다면 민족적 정체성에 호소하는 것을 넘어선 그 이상의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2009년 남한의 청년들은 살기 힘듭니다. 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져 대학을 졸업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삶의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 이런 저런 스펙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한반도의 통일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세대들에게 남북 전쟁은 방송이나 책에서 접하던 이야기입니다. 분단의 아픔 역시 삶 속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남북통일이 자신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청년들이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남북 정상 회담이 열릴 때 느껴지는 뭉치 모를 가슴 뜨거운 무엇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인이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도대체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각 함수를 왜 공부해야지 묻는 아이들에게 “나중에 써 먹을 때가 있어!,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려면 공부해야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고 이야기 하면 아이들은 귀를 닫아 버립니다.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통일을 왜 해야 하는 거지?’라고 묻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청년들이 한반도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알고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역사의 진실을 인식하고 역사의 아픔을 해결하려는 주체로 설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 역사의 아픔을 만나다!”

2005년부터 매년 여름 동북아 역사 대장정을 떠납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 바로 코 앞이지만 역사가 만들어 낸 장막에 가려 쉽게 찾아 가지 못하는 그 땅을 애써 찾아 갑니다. 올 해까지 총 5차례 약 300명의 청년들이 동북아 역사 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대장정 중에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이 있는 집안에서 혜산까지 4시간여 동안 압록강 강변을 거슬러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강 건너 편이 바로 북한입니다. 4시간 동안 창밖으로 북한을 보면서 달립니다. 대부분 참가자들이 난생 처음으로 무채색의 북한을 마주합니다. 국경이라곤 하지만 산 사이로 강 하나 흐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수영을 해도 건너 갈 수 있을 만큼 강폭이 넓지 않은 곳, 그 너머에 북한이 있습니다. 새들과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노니는 그 곳을 남한 사람들은 건널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음을 가슴 아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강 건너 북한의 산은 거의 모두가 민둥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빨감이 없어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 와중에 산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산 밑에 가끔 북한의 마을이 보입니다. 그 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강 건너 편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아픔도 있습니다. 동네 개가 굶어 죽으려 해도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이 사람일진데 바로 강 건너편의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압록강을 거슬러 도착한 백두산 자락에는 일본 제국주의 탄압에 조국을 등지고 백두산 자락으로 숨어들었던 독립군의 역사가 있습니다. 70~80년 전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가족을 등지고 목숨을 걸었던 우리 또래의 청년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역사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분단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역사를 소리 없이 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륙에 서다!”

대륙에는 희망도 있습니다. 백두산에 올라서면 참가자들은 뭘지 모를 가슴 떨림에 환호성을 내 지르며 천지를 향해 달려 갑니다. 이 땅을 달리던 고구려, 발해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갓은 펄박과 탄압에 조국을 떠났지만 이국 땅에서 독립을 꿈꾸며 살아간 청년

들의 기상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꿈꾸던 조국이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 대결구조에서 비롯된 차가운 분단 평화의 조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긴장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반도를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륙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청년들이 한반도와 동북 3성, 연해주를 누비며 저 멀리 유럽까지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평화의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했을 겁니다. 강대국에 의해 결정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스스로 평화롭게 만들어 가는 꿈을, 중국과 한국과 일본 전체 동북아시아의 청년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꿈을 말합니다.

“청년, 역사의 진실을 만나다!”

100년 전의 한반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한반도는 강대국 간의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 남남 갈등도 여전히 심합니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정부 당직자나 학자 및 고위 관료들이 도맡아 다룹니다.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청년들은 그 동안 왜곡된 역사를 배워 왔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위해서, 20세기 후반에는 냉전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역사는 지배 집단의 입맛에 맞게 왜곡되어 왔습니다.

흔히 우리 역사를 한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외세의 침략 속에서 이 땅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를 복원하고 알려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한의 역사 정도로 인식하여 패배 의식에 젖어 있다면 앞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파워 게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자신감 없이는 평화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당대 최강국 당나라와 중원을 놓고 싸웠던 고구려,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고 삼국 통일을 이루어 냈던 신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독립군의 역사를 통해 이 땅의 청년들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청년, 통일과 평화를 행하다!”

동북아 역사 대장정, 역사 강좌, 역사 기행을 다녀 온 청년들은 한국에서 북한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대량 아시를 막기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과 북한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운동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남북 통일의 희망을 품은 젊은이들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직접 경험하고 가슴으로 느낀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남북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꿈과 비전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아주 당차게 행동하지만 이상적이고 투박하기도 합니다. 청년 정토회는 역사 기행과 역사 강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꿈과 비전만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실천은 통일 전문가, 정부 관료, 운동가들만이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천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청년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상상력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새터민, 재외 동포, 조선족, 중국, 일본 인등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들인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원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이고 나누고 상상력을 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저희를 비롯한 청년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세대의 방식이 아닌 청년다운 상상력으로 통일을 만들어가야한다

유 병 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0. 들어가며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살아온지 벌써 60년이 지났다. 그렇게 살다보니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00년 남과 북의 정상이 분단이후 최초로 만남을 가졌고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동안 알았던 북,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운 북과는 다른 모습에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탕한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하며 김정일 신드롬까지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던 한나라당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그들의 말처럼 10년 전으로 돌아가버렸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가?

1. 전쟁의 경험,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세대

통일과 관련해서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다보면 두 부류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흔히 우리는 '반공'할아버지와 '진보'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분들의 반응은 무엇을 이야기 하든 극과 극이다. '반공'할아버지들은 북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빨갱이라는 단어와 함께 김정일을 때려잡아야 한다라는 말을 꼭 하신다. 반면 '진보'할아버지들은 어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고생한다는 말을 전해주시다. 이러한 우리 앞세대의 반응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이라는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 친구가 죽기도 하고 가족과 헤어져 남남이 되기도 했을 것이기에.....그래서 민간하고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수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도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전쟁세대이거나 그 바로 밑 세대들이

다. 이들은 반공교육을 받고 자랐고 북을 이야기하면 이승복어린이나 풀이장군을 기억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북은 아직도 위험한 존재이고 적국이며 무력적화통일을 꿈꾸는 빨갱이라고 인식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반공’할아버지같은 분도 있고, ‘진보’할아버지와 같은 분도 있는 것이 아닐까?

2. 우리 앞세대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청년 세대에게 통일을 묻다’라는 토론 주제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우리 앞세대,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성세대를 보면서 우린 무엇을 느끼는지 묻고 싶었다. 통일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앞세대에 대해 묻는 이유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앞세대 처럼은 하면 통일을 이룰수 없다’라는 생각때문이었다.

전쟁을 경험하고 반공교육을 받으며 조금만 다르면 빨갱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며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 북을 통일의 상대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고 다 죽여 없애야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습, 이런 기성세대의 모습으로는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기성세대를 통칭하는 것은 아니며 통일에 대해서도 북에 대해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은 절대 다수의 모습은 아니다. 단지 설명을 위해 조금 극단적으로 서술한 것임을 염두해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특히 북에 대한 입장에서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는 기성세대들은 북을 아직도 적대시하는 보수와 북을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함께 만들어 갈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진보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이런 대립은 남남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대북정책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짧은 소견이지만 이러한 기성 세대의 대립은 전쟁의 경험과 해방이후 수십년간 지속되었던 반공교육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현재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적 활용의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우리 앞세대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최근 모방송국에서 방영중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가야 출신인 김유신이 가야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신라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월야라는 가야의 마지막 왕손에게 했던 말이다.

“가야는 신라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 왜냐, 가야는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다 통합된 하나의 힘을 형성하지 못했

기에 신라에게 복속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다. 이런 선대의 잘못을 우리대에 끊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보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말이었다. 서로 갈등하다 신라에게 복속된 가야, 그 원인은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월야는 김유신의 말을 듣고 감탄하여 동맹을 맺고 가야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 결국 이 힘으로 김유신은 신라의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 잡고 훗날 삼국통일의 일등 공신이 된다.

3. 우리도 통일 한반도의 일등공신이 되어야 한다.

김유신과 월야가 선대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우리가 살아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년으로서 힘을 모음으로써 통일의 핵심 세력이 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를 돌아보자. 솔직히 조금만 더 놓고 이야기해 보면 보수건 진보건 청년세대 수준에서는 그리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된다. 기성세대처럼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여러 자료와 정보를 통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다양한 청년들의 소통의 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차이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의 기준이 더 명확해지기 전에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통일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고, 만들어 가야 한다. 기성세대들처럼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합리성과 민첩성, 그리고 현실감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한다. 그래야 만이 우리는 통일을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다.

4. 자기 주장의 고집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615정신이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615공동선언이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615공동선언이 지닌 정신은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으며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615공동선언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며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이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조

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려는 노력 이것이 곧 통일이 아니겠는가?

이건은 단지 남과 북의 통일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남갈등으로 표출되는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서로의 주장과 차이를 내세웠다면 우리는 서로의 공통점과 함께하려는 노력으로 힘을 모으고 통일을 준비해가야한다.

남과 북이 정치적 제도적으로 통일을 선언하고 통일된 제도를 만들어 통일을 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남과 북, 남과 남의 갈등이 심한 상태라면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통일은 쉽게 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남쪽의 청년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북의 청년들과 하나가 될 때 통일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5. 함께 하기 위해 우린 상상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자로서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답과 오답만 존재하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은 흑백논리로 사고하게 만들고 창의성을 발현시키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흑백논리에 빠져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라는 한정된 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모습을 창의적으로 상상해 볼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가지의 틀을 가지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시너지를 낼수 있는 남과 북 모두가 합의하고 남과 북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는 세로운 세상을 우리가 그리고 만들어가야한다. 그러려면 우리도 노력해야한다. 남과 북 서로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자주 만나고 함께 행동해야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남과 북의 통일은 이 지구상의 최초의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어느 한 이념이 아닌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세상을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하나되는 지구상 최초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성패는 우리 청년들의 몫이다.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가 갈 때 통일은 더 풍성해지고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린 보다 열린 자세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노력해야한다. 지금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고민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 세상은 언제나 세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에 의해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청년세대답게 우리는 통일 한반도를 상상하며 노력해야한다.

유 정 훈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북한연구21)

□ 토론요지

폐쇄적인 사회구조를 가진 북한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민족적 사명(使命)이며, 시대의 요구(要求)라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의 3대 세습이 구체화 되면서 학계는 물론 사회 일각에서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3대 세습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은 붕괴되어 남한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에 사는 인민들이 자본주의를 향해 대량탈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이러한 예측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에게도 ‘조국’의 의미가 있다고나 할까. 조국이 망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이 어디 있으랴. 설령, 그 체제가 심하게 강압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북한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수군거린다. 소위 ‘빨갱이’라는 그런 비슷한 소리들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모두가 자기 소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이른바 ‘색깔논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통일에 대한 생각

경제학을 공부하는 친구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격렬한 통일 반대론자였다.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겪을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충격이 클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친구는 동서독의 통일과정까지 이야기하며 지금 통일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더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괜스레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지겠구나.’하며 한 마디만 던지시 건넸다.

“학교 앞에 1000만 원짜리 전세방이 있고, 100만 원짜리 월세방이 있다면 넌 어디를

선택하겠니? 응, 바로 그거야. 통일비용은 전세금이고 분단비용은 월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

그렇다,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은 언젠간 다시 되돌아 올 우리의 자산이 된다. 하지만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은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는 무의미한 예산이 되는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식이 문제다. ‘당연하기에 당연하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통일이라는 문제는 점점 더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해졌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값으로서의 통일 그 자체에 대해 ‘집착’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분명 북한과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들만큼은 통일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한 줄기 희망 속에서도 우리의 통일담론이 사라진 것에 대해 우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여러 이유를 들며 통일의 편익을 설명하는 내 자신에게 못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보의식의 함양 - 세대별 안보의식의 차이와 대안 -

이 승 환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안보개념의 확대와 안보의식의 우선순위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물리적 폭력에 대한 긴장이 완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안보의 개념들이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휴전중인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인은 더 이상 북한문제가 아닌 경제와 보건이다. 근래의 세계적 경기 침체와 맞물린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확장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의료 안보가 지금 우리사회에서 더 중요 안보의 화두이다. 일례로 북한의 도발이나 미사일 실험 등에 대한 사건의 반응은 더 이상 정치, 국제 분야에 국한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국내의 수출입 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사람들은 더 큰 관심을 가진다.

이념 대립의 냉전 이후 세계는 물리적 폭력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 한반도는 아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상반된 이념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고 그 이념의 수호 역시 군사력을 통해 보장하려고 한다. 세계화된 사회 속에서 다양해지는 안보의 개념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현대 선진 국가로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안보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한반도 안보의 최우선순위는 대북관련 안보이다.

대북 관련 안보의식의 접근 방법과 다음세대

대북관련 안보라 함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국제관계적으로 비핵화의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적으로 대중, 대일 관계의 문제 그리고 국내 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에 대한 문제 등 그 어느 것 하나 북한을 배제하고 논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지만 모든 대북관련 문제의 접근 방법은 몇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시기적으로 장기적이고 대안적으로 다안적이며 관계적으로 다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기적이라 함은 5년, 10년 단위의 문제가 아닌 30년 혹은 50년 이상의 몇 세대

를 내다 보아야 하는 역사적 장기성이다. 대북관련 문제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등이 있겠고 중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문화교류의 시도가 있겠으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로는 세계화 시대 한반도를 공유하는 공동체로써 번영의 지향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한민족으로써 민족사적 의의를 위해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북관련 문제와 의식은 다음세대와 함께 논의되고 준비 되어야 한다.

안보의식 차이의 원인

현대 한국사회에서 대북 안보의식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안보 의식의 세대별 차이에 있다. 한국 10~20대의 정치 의식의 표출이라 할 수 있는 촛불집회는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통해 시작 되었다. 국민들의 인지로는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국내 수사권 발동에 대한 시위는 요구 가능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시위가 소파협정 개정에서 소파 협정 전면 폐기로 확장되더니 급기야는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 집회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6.25를 경험했던 기성세대 역시 친미 집회로 대응하며 한국은 안보 문제에 대한 세대의 극한 대립을 경험 하였다. 이러한 안보의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만에 유래 없는 발전을 이루어낸 급성장 국가이다. 그 안에서 어떠한 의식이 공유되기 보다는 북한과의 경쟁과 경제 발전이라는 성장을 모토로 작동해 온 사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성장이 성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 의식의 성숙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과도기에 있는 시점이다. 그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안보의 의식차이는 더욱이 극명할 수 밖에 없다.

세대별 안보의식의 차이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분명한 대북 안보의식의 차이를 보인다. 세대로 분류하자면 4세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6.25를 경험하고 반공과 성장을 기치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유신세대이다. 둘째로는 반공의 기치가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이용됨을 경험하고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외친 386세대이다. 셋째로는 성장기에 햇볕정책을 보고 자

라며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 증진을 보고 성장하였지만 사회 진입의 초입에 경제위기와 취업대란을 겪고 있는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20대 들이다. 넷째로는 온라인과 광장문화, 촛불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기 의견의 표출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는 10대들이다.

이들의 안보의식은 극명하다. 유신세대는 전쟁의 참혹과 전후복구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며 북한에 대한 과격한 반감을 표출하고 이를 정치적 영향력으로 나타내려 한다. 그리고 386세대는 국가안보가 정권안보에 이용당하는 부조리에 몸으로 싸우며 민주화를 이루어낸 세대로 북한에 대한 위협보다는 그 위협을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보수진영에 대한 불신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지금의 20대들은 대북관련 안보의 문제에는 무관심이다. 대북과의 관계 증진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과 기회의 창출이 아니라면 더 더욱이 그렇다. 그리고 지금의 10대들은 386세대의 자녀세대로 386세대의 교사들에게 교육받으며 자라왔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식은 있으나 인터넷이나 군중심리에 쉽게 휩쓸리는 감정적 동요가 크다. 즉 정치적 의식과 에너지는 있으나 그 의식과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줄 지론이 부족하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4세대는 한 가정에 고등학생 청소년과 대학생 삼촌 그리고 386세대의 아버지와 유신세대의 할아버지가 대북관련 안보에 대한 각기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꼴이다. 이러한 가정에 북핵문제가 대화의 화두로 올랐다고 생각해보자 할아버지는 강경대응을 주장 하실 것이고 아버지는 북 핵이 국내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관심이 클 것이며 대학생 삼촌은 관심도 없이 토익 책만 붙잡고 있을 것이며 고등학생 자녀는 논술대비 기사 꺼리로 읽으며 ‘통일되면 저 핵도 우리에게 되는거 아니야?’ 라고 할 것이다.

안보의식의 세대차이 극복을 위하여

세대별 대북 안보 의식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위협이 위협으로 규정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 만이 그 해결방안과 새로운 기회가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는냐의 인식 이전의 사실에 대해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이 제시되기 이전에 먼저 점검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과연 우리사회가 안보 의식의 세대 차이를 중요 문제로 논의하는냐 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지금의 사회는 안보의식의 차이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피차 다른 입장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 둘째로는 각자의 안보의식에 따른 세력화 이다. 반대되는 안보의식에 대해 세력으로 대응하는 것

은 오히려 또 다른 세력을 자극하여 운동하게 하는 미흡한 처사이다. 그리고 그 운동성은 세력의 세력화를 강화하고 그 구성원의 단결을 위하여 더욱 원색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대북 안보의 문제는 정권의 영역과 입장의 영역 그리고 경제의 영역을 뛰어넘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그 안보 의식의 올바른 확고화를 위해서는 국민 안보의식의 단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평화 통일이라는 대 전제 하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안보의식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로 과거의 대북 안보는 위협으로 부터의 보호에 그 가치를 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 한반도 민족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이 비전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그 비전에 앞서 휴전국이라는 한반도의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남한과 북한 양국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로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비전적, 현실적, 다자적 시각이 전제되어야만 각 세대별 안보의식의 차이가 그 소통의 장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의견과 입장들 가운데 우리의 지향점이 공유되고 대북 안보의식의 차이를 넘어 평화 통일과 한반도 변영을 위한 방안들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xi 다음 세대와 한반도의 변영을 위한 준비

1950년 6월 25일 이후 한반도는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전쟁과 민족 분단의 현실을 품고 있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은 그 분단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었다. 50년 이후 2000년까지의 50년이 군사대치, 분단의 시기 였다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10여년의 시기는 비록 군사대치와 분단이라는 전제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그 불안정 속에서 의미 있는 교류들이 시도되었던 교류의 시기였다.

이제 이 교류를 넘어 남북 협력의 시기를 준비하며 더욱 장기적으로는 협력을 넘어 통합과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하지만 이 통합과 통일의 과제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다. 10년, 혹은 수 십년을 내다 보아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의 무게는 지금의 세대가 아닌 다음세대로 전달되게 된다. 지금의 주도적 세대는 다음세대가 그 책임의 무게를 잘 감당하여 한반도의 변영을 이끌고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 하 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제 입장 발표에 앞서 우선 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2세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거의 한국인이 없는 학교를 다녔으며, 대학교는 한국 유학생이나 교포 1.5세, 2세대들이 많은 곳을 졸업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 인터넷에 접속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온라인 게시판의 여론을 주의 깊게 관찰해 왔습니다.

일단 해외교포이자 외국인의 자격으로 패널에 참가했으므로 제가 직접 경험한 교포나 외국인(주로 미국)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의식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미교포 젊은이들의 경우, 대부분 크게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 미국 주류 매체에서 비춰지는 북한의 부정적인 상황이나, 대중문화에서 희화화되는 김정일의 모습을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동포’라는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사회적으로 재차 각인되어온 것이 아니며, 한국의 분단에 대한 역사를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와 맞물려 오히려 동족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좀더 의식화 되면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에 대해 공부하던 대학생들이 모여 시작한 LiNK (Liberty in North Korea) 라는 시민단체가 전국적인 규모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미국에 알리는 동영상 상영하거나 기부금을 모아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회 모임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접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진보적인 청년단체들도 미국 주류 매체의 편향적인 보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미국 정부에 북한과의 양자회담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극소수이며, 상당수는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막연한 동포의식을 넘어서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북한의 시

각에서 역사를 이해하려는 의식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신 국가에 따라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분단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젊은이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학교에서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남한 출신이냐, 북한 출신이냐”고 묻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입니다. 최근 유나 리, 로라 링 기자 사건이나 북핵문제 등으로 그나마 북한이 매체에서 자주 다뤄지면서 널리 알려졌으나, 그 이전에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앞서 밝혔듯이 철저히 미국의 시각으로만 비춰졌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만이 퍼져있는상태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악의 축’ 가운데 한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고, 국민 수십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상황에 대해 매우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에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였고 한국이 어떻게 분단되었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으며,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슈로 보입니다.

반면 제 주변에 있는 중국인이나 베트남 출신 학생들의 경우 북한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거나, 관심이 없더라도 북한에 대한 입장이나 통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사회주의 체제라는 역사적 공감대에서 출발해서인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보다 북한의 시각을 감안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 예로 북한의 핵개발도 체제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는 입장이 많았고,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인들의 경우 북한은 중국을 통해 경제를 개발할 여지가 있기도 하고, 현재 한국과의 관계로 볼 때 단기적인 통일로 인해 북한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가 풀려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 한국 젊은이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갖는 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20대에 진입한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북한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인 거부반응이 훨씬 덜한 세대입니다. 반공교육도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사적인 적개심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몰락과 그 폐해를 보아왔기 때문에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과거 일부 운동권의 북한 추종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을 비교적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세대라는 점은 남북관계를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지도층과 국민들을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고,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

를 고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객관적인 입장은 또한 통일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로도 드러납니다. 물론 '통일' 자체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실질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분단이 반세기간 지속되며북한 사람들과의 가치관 차이도 느껴질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며 통일보다는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늘어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시각의 다양화를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족주의와 같은 막연한 이데올로기만으로 이루어진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 보다 실질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검토한다는 점은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만큼 세세한 사안까지, 깊은 수준의 고려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이유 혹은 경제적인 부담만으로 통일 자체의 가능성을 배제해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개방적인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젊은 세대가 스스로 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